

<연구 논문>

-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략과 북미관계 전망 이헌경/1
-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박종철/29
- 미·중관계의 파동과 영향 이영길/57
- 북한의 대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전현준/89
-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오기성/115
- 남북한 사회통합과 해외동포 모국 수학생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
중국 동포 모국 수학생을 중심으로 조혜영/147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안혜영/179
- 북한의 남한 문화예술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성수/241
-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이기동/269
-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배성인/293

<서평>

-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밑으로부터’의 담론 김성철/323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략과 북·미관계 전망

이 헌 경(통일연구원)

◁ 목 차 ▷

- I. 서론
- II. 대북인식의 재고
- III.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전략
- IV. 북·미관계 전망
- V. 결론

I. 서론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해 온 온건론자들은 우려를 가지기 시작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대북 강경론적 입장을 취해왔고, 미대선 기간중 부시 후보를 비롯한 외교안보참모들조차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대북관은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북한과 그 지도부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외부 세계가 북한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둘째, 북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식량난·경제난 해결보다는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었다. 셋째, 미국이 중유제공, 경수로건설지원에 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수출·개발·시험발사·배치, 핵개발 위협, 군사력 증강 등 호전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넷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국이

‘보상’을 해왔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본다. 부시 행정부는 전 행정부의 정책이 결과에만 집착해 북한과 충분한 협상을 하지 못했으며 보상식 접근 방식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차후 약속 이행 담보만으로 북한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 북한이 많은 것을 얻은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본다.

때문에 대북 강경파들중 일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건파들은 합의 파기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일본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합의를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부시 행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은 주한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및 ‘반확산’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과 함께 ‘확고한 목표’(firm in goals)와 ‘전술적 유동성’(flexible in tactics)¹⁾을 가지고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을 마쳤다. 그것은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으로 당근과 채찍의 수단을 가지고 ‘신중한 개입’(cautious engagement)을 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부

1) James A.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Nomine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April 26, 2001.), Kelly's Confirmation Hearing

시 대통령의 발언·연설, 외교안보팀의 발언·증언·성향, 청문회 발언, 언론보도, 한반도문제 전문가의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비교분석적 차원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전략·전술과 한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미정책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II. 대북인식의 재고

1. 대량살상무기 확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과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다.²⁾ 불량국가들로부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비확산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반확산은 군사적 해결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기술이전 통제와 경제·외교제제·교섭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반면 후자의 정책은 상대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해 올 경우 군사적 대응을 조치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해 비확산과 반확산 정책을 동시에 모색하면서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 핵동결을 이끌어왔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 이전까지 재처리를 통해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부시 행정부는 현재 갖고 있는 경수로가 완공되면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한국·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2) ‘비확산’과 ‘반확산’은 Richard Armitage 미국무부 부장관이 제시한 전략적 틀로 새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을 읽을 수 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2001. 5. 10.

3) See Remarks by the Deputy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John E. McLaughlin to Texas A&M Conference “North Korea: Engagement or Confrontation,” April 17, 2001; William Perry’s Interview 『조선일보』, May 11, 2001.

결국 중국의 핵확산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그 근원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자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한미군과 동맹국 한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Scud-B(340km), Scud-C(500km), 노동 1호(1,300km) 등 중·단거리 미사일을 5백~6백기 정도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대포동 1호(1,500~2,200km)를 시험발사용으로 몇 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 게다가 미국가정보위윈회(NIC)는 북한이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를 대륙간탄도탄으로 개조할 경우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생화학 기제를 운반할 수 있는 소량의 유도탄 탄두(payload)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⁵⁾ 나아가 대포동 2호(4,000~6,000km)를 대륙간탄도탄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것이 실현화될 경우 수백 킬로그램급의 유도탄 탄두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보지만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의 전략은 계산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러시아를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위협은 오히려 북한,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 오며, 이들의 공격은 우발적, 자살적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적성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이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저지해야 할 긴요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Scud 미사일이 테러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 미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실(NRC) 및 공군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명중률

4) See Hun Kyung Lee,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nd The U.S. Strategy," a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Hawaii, sponsored by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June 26, 2001), p. 2.

5)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September, 1999).

이 떨어지고 유도 자치가 없어 효율적인 전략 공습용이라기보다는 테러용 무기로 설계된 것으로 본다.⁶⁾

부시 행정부는 위협이 냉전시대보다 더 분산되었다고 보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를 포함한 조치들에 대해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미국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으로 북한, 이란, 이라크와 같이 실패한 국가가 쉽게 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명분을 들어 MD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핵, 미사일, 테러지원이라는 기존의 3대 쟁점에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제기해 새로운 의제를 쟁점화하고 있다.⁷⁾ 휴전선에 전진 배치한 거대한 군사력이 동맹국 한국과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핵·미사일 등 대량과괴무기의 비확산을 주요 목표로 간주했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확산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에 여전히 매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공격에 나설 경우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미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같이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이 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6) Paul Beaver, "Ten Nodongs Fielded But Accuracy Is Low, Says USA," *Janes Defense Weekly*(May 28, 1997), p. 4.

7) 미국의 재래식 전력 감축문제 제기는 한·미간 원활한 역할분담을 제의한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된다. 한국정부는 남북한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군축 협의’, ‘무력불사용’,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에 보장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복원과 이 기반위에서 군비감축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선 교류협력, 후 군사적 신뢰 구축’ 구도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선 군사적 신뢰구축’ 구도를 구상하고 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현경,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4), p. 17.

다. 미국은 예상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실현될 때 이를 북한이 미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공격용 무기의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동 무기로 맞대응하겠지만, 북한이 다양한 운반수단을 통해 생화학무기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 무기로 맞대응하기가 실제로 어렵다.⁸⁾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핵개발 동결에 주력하면서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 재래식 군사력 확대로 영향을 받는 동맹국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다.

2. 제네바 합의에 대한 인식과 경수로의 화전 대체 문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흑연감속로의 동결,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중단과 최종적인 해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 협정 이행 및 임시·일반 사찰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대북 핵선제공격과 사용위협을 포기, 경제지원 및 1천 MWe급 두기의 경수로 공급 등을 약속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대북 제재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핵활동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이 NPT조약 탈퇴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지 않는, 즉 미래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⁹⁾

‘동결’은 5MWe 원자로 재장전 포기를 비롯, 미완성 50MWe, 200MWe 원자로 시설 및 관련 시설의 건설 작업 속행·개시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시설로 추정되는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는 일련의 핵활동 동결작업을 실천해 왔

8) Hun Kyung Lee,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34th International Seminar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Korea in Chirisan Plaza Hotel(Oct. 15~17, 1999), p. 47.

9) 이현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서울: 통일연구원, 1998), p. 15.

다. 또한 북한은 1996년 5월 1일부터 IAEA 감독 하에 미에너지부 전문가 및 민간용역회사(NAC社) 관계자들이 북한측에 협력하는 형태로 5MWe 원자로에서 꺼낸 8,000여 개의 사용후 핵연료봉¹⁰⁾을 밀폐보관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를 완료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제네바 합의와 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동결시설에 대한 감시만을 허용할 뿐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IAEA의 조사활동, 즉 연료봉 시료채취를 불허해 왔다. 시료채취없이 북한이 동의하는 봉인만으로 핵의혹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IAEA는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했을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북 강경 공화인사들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해 경수로 공급지원과 1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는 북한의 협박을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이러한 합의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미국은 합의에 따른 중유제공 비용이 국제 유가상승으로 1995년에 비해 4배가 올라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경수로의 안정성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이미 염려된 사항이다. 일례로 경수로 원자로 사업에 입찰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1999년부터 “북한의 기술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¹¹⁾고 단정지으면서 미국정부에 보증을 요구할 정도였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빈약한 전력 시스템으로 경수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결론짓고, 안전한 전력 제공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합의를 어떻게 바꿀지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면에서 제네바 기본 합의는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합의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는 명시되어 있으나, 또 다른 핵시설 건

10) 8천 개의 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 25~30kg이 추출될 수 있어 핵폭탄 4~5개를 만들 수 있다.

11) 『중앙일보』, 2001. 5. 7.

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기존시설 해체 시기도 막연해 두 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원자로나 재처리시설을 해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합의는 경수로공사 지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합의에 따르면 1기 경수로 2003년, 2기는 2004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수로 완공은 5년 이상의 지연이 예상된다.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문제와 보관장소 및 핵시설 해체에 드는 비용·처리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합의는 1기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봉인된 사용후 핵연료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것과 IAEA로부터 특별사찰에 해당되는 철저한 사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합의의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찰활동만을 허용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수로 공사지연은 북한에 특별사찰 지연의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수로 전용가능성과 감독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자는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에서 핵물질을 추출할 가능성이다.¹²⁾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당장 플루토늄을 추출하기는 어려우나 언제가는 상당 양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기전에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비롯된다.¹³⁾ 후자는 미국이 생각하는 점검과 검증 체제에 적합한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경수로 대신 화력 발전소를 짓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화력 발전소 건설 역시 쉽지 않다. 화력 발전소는 비용면에서 경수로 2기의 건설비용인 46억달러보다 10억달러 정도 적게 들지만, 연료비는 원전의 경우 kw당 3원 50전인 반면 화전의 경우 중유는 35원21전, 유연탄은 14원51전이 든다.¹⁴⁾ 화력발전소 건설은 미국·한국·일본·유럽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건설비용과 완성된 뒤 연료제공

12)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제공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고도의 재처리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13) 사찰은 현장답사와 실험자재 구비를 위해 2~3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미국은 경수로 공사 지연에 따라 북한이 사찰을 받기전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14) 『중앙일보』, 2001. 5. 7.

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경수로의 화전 대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

1)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

한·미 정상회담(2001.3.8)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회의심(skepticism)을 갖고 있다”¹⁵⁾는 의견 표출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유사한 평가는 파월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수 차례 표출된 바 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및 세출 청문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despot)로 지칭하고 북한을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정권이라 단정지은 바 있다.¹⁶⁾ 파월 장관이 의미하는 독재자는 믿을 수 없는 통치자로 해석할 수 있다.

파월 장관이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로 취급한 것은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와 지도부¹⁷⁾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며,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파월 장관 못지 않게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 녀는 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는 “국제 공동체에 동참하려는 것이

15)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March 7, 2001)

16) Colin L. Powell, Secretary of State Nominee,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January 17, 2001), Powell's Confirmation Hearing, Colin L. Powell, Testimony at Budget Hearing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hereafter Powell's Testimony at Budget Hearing, Senate), March 8, 2001.

17) “Text: Deputy CIA Director Examines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Washington File*, April 23, 2001.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과거 수년 동안 무엇인가 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행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럴 경우 모든 사람이 그를 앞다퉈 진정시키려 함으로써 반대급부를 받았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그 같은 북한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¹⁸⁾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파월 장관과 라이스 안보보좌관의 평가는 미국내 강경론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며 이쪽 말이 납득이 가면 그 자리에서 받아 들였다”¹⁹⁾고 평가한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비판한 것은 예상 이상의 강도 높은 지적이라 볼 수 있다.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회의감

강경 공화인사를 포함해 부시 외교안보팀 모두 북한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북한이 선군정책의 지속,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전쟁위협 상존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들어가야 할 자원과 노력이 군비 유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북한이 체제전환과 경제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개입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이와 관련 파월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밖에 있는 존재며 “붕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방을 시작해야 하는 실패한 사회”²⁰⁾라고 규정짓고 있다. 연계적으로 그는 “북한은 그들을 도울수 있도록 외부를 향해 매우 작게 문을 열기는 했

18) Remarks by Condoleezza Rice, 『조선일보』, May 17, 2001에서 재인용

19) Speech by President Kim Dae-Jung to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and the U.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Meeting on “Toward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March 9, 2001)

20) Powell's Testimony at Budget Hearing, Senate(March 8, 2001)

지만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며 체제붕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²¹⁾고 본다.

대북 강경인사들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와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자 한국에 접근, 경제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목표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정상회담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²²⁾ 북한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이 미진전 상태에 머무르고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얻을 대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들자 남한으로부터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소식통은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취득 명목으로 제공한 3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향상에 기여했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현대가 제공한 자금으로 19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 21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고,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 대규모 군사훈련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다는 것이다.²³⁾

III.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전략

1. 현실주의 외교 지향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를 의미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국

21) Colin L. Powell, Testimony at Budget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House of Representative(March 7, 2001), Powell’s Testimony at Budget Hearing, House of Representative

22) 김성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01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p. 5.

23) 『産經新聞』, 2001. 2. 2

제질서 하에서 평화는 힘과 함께 그리고 군대는 평화유지의 강력한 방패이자 확실한 칼임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현실주의 외교’, ‘힘을 통한 평화’, ‘우방의 신뢰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적 국제주의 노선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고, 위기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맹국을 도우며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려 한다. 반면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대국과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소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민주세계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법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을 후원하고자 한다.²⁴⁾ 다시 말해 미국의 이상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돕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면 협상을 하되 불응하면 응징을 가하는 “공격과 나쁜 신조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²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외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개입을 선택적으로 하고자 한다. 미국은 “자유를 지향하는 권력의 균형을 형성하면서, 역사적으로 또 선택에 의해 세계문제에 계속 관여하고자 한다.”²⁶⁾ 그동안 미국이 지구촌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국가의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였지만 앞으로 이를 지양하고 미국익과 관련된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려 한다. 그렇다고 “고립주의의 섬이나 보호주의의 성채에 갇힐 생각은 없다.”²⁷⁾

이러한 선택적 개입노선에 의해 미국의 전략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지역별, 특히 중동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적대세력 등장에 철저히 대비하는 데

24) Colin L. Powell,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January 17, 2001)

25)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January 20, 2001), Bush's Inaugural Address

26) Bush's Inaugural Address(January 20, 2001)

27) Powell's Confirmation Hearing(January 17, 2001)

두어야 하며, 비인도적 사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²⁸⁾ 지구상의 국제문제와 모든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명백한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익과 지정학적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다.

현실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데 있어 부시 외교안보팀은 부처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국방부는 강경론, 국무부는 온건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보위협 상황을 최악으로 전제하고 최대의 군사력 확보가 최고의 안보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온건론자들은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및 국방부 참모들은 냉전 종식을 가져다 준 과거 공화당의 강경한 외교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 라인은 국제문제에 있어 힘의 사용을 최후의 선택으로 보면서 시험적인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방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상과 국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현실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그리고 중도파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 한다.

2.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대북정책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노선 하에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 순위에 부여된 사안에 대해 힘을 바탕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동평화협상, 대이라크 추가 제재 여부, 중국·러시아와 MD 분쟁, 발칸반도에 대한 평화유지군 지원문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콜롬비아 내전, 북한문제 등을 현안으로 삼고 있다. 그 중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현안이 중동평화협상과 이라크의 무기 개발 저지 등이다. 때문에 대북문제는 우선 순위 다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대북정책에 공통 기반을 서로 나누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국가안전

28) 김성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p. 2.

보장회의(NSC)를 이끄는 멤버들의 시각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에서 노출된 불협화음은 관련 부서의 실무라인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내 강온파의 갈등과 주요 관리들간의 대북인식 및 전략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켈리(James A. Kelly)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주축으로 백악관과 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팀을 참여시킨 검토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재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미국은 2001.3.9 바우처(Richard Boucher) 미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밝힌 6대 원칙 - ① 한·미·일 정책 공조, ② 한반도 긴장완화지지, ③ 북정권 정확히 인식, ④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 ⑤ 대북 점검-모니터링, ⑥ 북 무기확산 우려²⁹⁾ - 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마침내 부시 대통령은 한·미·일 2차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Oversight Group: TCOG)에서 합의된 사항과³⁰⁾ 그동안의 정책검토를 정리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북협상 의제로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³¹⁾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에 입각한 힘의 우선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전쟁예방을 위한 정책의 지속이다. 미국은 동맹국가의 생

29)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March 9, 2001)

30) 자세한 내용은 Colin L. Powell, "Remarks with Foreign Minister Han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ir Meeting,"(June 7, 2001), "Text: May 26 U.S.-South Korea-Japan Joint Press Statement," *Washington File*, May 31, 2001 참조.

31) "Text: Bush Statement on Undertaking Talk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File*(June 7, 2001), President Bush's Statement

존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예방하려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격변의 와중에 있는 탓에, 한반도에서의 사태 전개는 얼마 안있어 워싱턴에게 커다란 새 위협 또는 새로운 기회를 떠안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한다.³²⁾ 미국은 이러한 사태대비 및 전쟁예방이 일차 이익이 걸친 일본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것이 미국가안보에 직결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도 한반도 전쟁예방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계경제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미국 무역(4,000억 달러)의 36% 이상과 미국 수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수출액이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3백만에 이르는 일자리를 미국인에 제공하고 있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한다. 다시 말해 동맹국 한국의 안정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이는 결국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반확산’의 새로운 전략적 틀과 함께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은 핵개발 가능성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 및 가공할만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려 한다.

셋째, 한국의 화해·협력정책의 지지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확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해 북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³³⁾고 보며, 북한의 변화없이 화해·협

32) Nick Eberstadt and Richard J. Ellings, “The Next Hot Spot,” *Washington Times*, May 23, 2001.

력정책과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지역의 안정, 남북화해 촉진, 한·미간의 건설적인 관계 유지 등을 추진해야 하며³⁴⁾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정책공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미국의 개입에 의해 상실될 경우 가져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고자 한다.

넷째,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 준수다. 부시 행정부는 합의 그 자체에 불만족하고 있지만 외교적 전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무부는 “북한이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제네바 기본 합의하의 약속들을 이행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³⁵⁾ 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미간 합의를 전제로 수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그 골격은 지켜나갈 것이다.³⁶⁾ 다만 제네바 합의 유지와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³⁷⁾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에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제네바합의 재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3. 전략·협상 방향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한반도 전쟁예방,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한국의 화해협력 정책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한반도의 전쟁예방을 위해 남북한 화해·협력을 지지하고 제네바 합의 준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 통해 북한의 침략위협을 최대한 줄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미국은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전략·협상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Asia Times*, May 18, 2001.

34) “President Bush’s Statement,”(June 7, 2001)

35)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March 9, 2001)

36) Kelly’s Confirmation Hearing(April 26, 2001)

37) Remarks by James A. Kelly, “Transcript: U.S., Japan, S. Korea Share Views on North Korea, *Washington File*, May 30, 2001.

한반도 전쟁예방과 관련, 미국은 전쟁과 같은 최후 수단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군사력이 전략적 국가이익과 일치할 때 사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수단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경우 반확산의 전략에 입각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약한 조치로는 정부적 차원의 지원 중단, 경제제재조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간 조치로는 이라크, 쿠바 등을 상대로 실시했던 봉쇄(embargo)이다. 매우 강력한 조치로 그리고 최후의 선택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주로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 미사일 개발·수출문제, 재래식 군사력 문제 등을 협상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통해 한반도의 전운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북한의 미사일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와 미사일 수출금지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MD 체제 개발 명분³⁸⁾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이끌어 가려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미사일협상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MD 추진을 위해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은 남북한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 및 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1차 회담 때와 달리 2차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한반도 정세가 보다 안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通美封南’ 전략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이는 북한에 실익을 준 반면 미국에는 어떠한 의미있는 실익을 가져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합의의 틀은 유지하나 개선해야 한

38) 공화당이 군산복합체로부터 민주당보다 3배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시 행정부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고려해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쉽게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경수로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제공되기되기 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사찰이 회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IAEA의 사찰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합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사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찰수용을 위해 북한주민지원, 전력공급 등을 당근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평양이 연료봉 제거와 IAEA의 무제한적인 사찰과 IAEA의 ‘강화된 안전기준(enhanced safeguards)’에 동의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규모의 대북지원과 “단기간 안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력공급에 나설 수”³⁹⁾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경수로 한 기를 화전발전소로 대체하거나 두 기 모두를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추가로 화전 발전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 안, 둘째 안은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안은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엄청난 당근이며 전력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체제에 대해 어떠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⁴⁰⁾ “김 위원장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보상받지 못할 것이며 그가 선량하게 행동하면 보상받을 것”⁴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주민을 돕고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⁴²⁾ 다시 말해 북한이 열망의 진지성을 보여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될 때 미국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은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9) Morton Abramowitz et al, “Report of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June 11, 2001)

40) Powell’s Testimony at Budget Hearing, House of Representative(March 7, 2001)
Powell’s Testimony at Budget Hearing, Senate(March 8, 2001)

41) Remarks by Condoleezza Rice, 『조선일보』, May 17, 2001에서 재인용

42) “President Bush’s Statement”, June 7, 2001.

때문에 전략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방식대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의 페이스대로 북·미협상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응 수위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란 기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 진영은 북한의 구체적 약속 이행을 확인한 후에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지향할 것이며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와 ‘철저한 검증’(complete verification)을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비밀에 싸이고, 자유와 언론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와의 협정체결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는 곧 북한이 변화했다는 확신을 안기려면 협상이든 협정이든 투명성을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시 미국 협상팀은 대북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거래형식의 정치적 협상을 지양하려 할 것이다. 부시 팀은 협상의 틀을 타결한 뒤 실무자들에게 검증문제를 맡기려 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미사일 문제, 핵사찰 및 안전기준 이행,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협상에서 감시, 투명성, 상호주의에 비중을 두면서 그 이행까지 검증하려 할 것이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란 확고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술적 유동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다.

IV. 북·미관계 전망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끝마친 뒤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는 양측간 대화·협상 여부에 달려 있다.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북·미관계는 급진전을 이룰 것이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1. 정치군사면

향후 북·미간 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의 주요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추방이라는 세계전략을 북한에게 적용시키려 하며, 북·미대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관계개선을 결정하

려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진전에 앞서 미사일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거둔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배치·생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한 대화·협상에 나설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를 통해 북한이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moratorium)하겠으며 미사일 기술·수출은 외화획득을 위해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⁴³⁾ 이는 북·미간 외교협상에서 2년 반이란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미국이 2003년까지 넘겨주기로 한 200만kw 경수로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원자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⁴⁴⁾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나타낸 바 있다. 이는 북한과 핵·미사일 문제를 논하자는 메시지로 ‘미국과의 거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거러형식의 정치적 협상을 지양하고 자국의 주도 하에 협상을 이끌어 가려 하며, 북한의 당근을 얻기 위한 전술적 행동에 끌려가지 않으려 한다. 또한 미국은 대북전력 제공이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북한이 IAEA와 협조할 동기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력 제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에 초점을 둘 것이다. MTCR은 사정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을 초과한 미사일 완제품이나 무인항공시스템과 그 생산설비의 수출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MTCR 가입을 전제로 한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에 주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적성국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이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불량국가들로 간주되는 이란, 이라크로의 미사일 기술이전에 대해 특

43) *Washington Post*, July 5, 2001.

44) 『조선중앙통신』, 2001. 5. 16. 경수로 공급 지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북한이 거론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흑연감속로 재가동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체제유지의 수단, 군사력 증강 및 외화획득에 절대적으로 필요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주권사항임을 주장할 때 미국이 적절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사일이 안보의 문제이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기⁴⁵⁾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다.

미국은 협상시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한 맞교환식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시 모색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포기-인공위성 대리발사’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측에 제공하는 위성발사 기술이 시애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발사체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인공위성을 대리발사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시 모색되었던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중단-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식의 맞교환 방식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할 것이다. 이어 미국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대북차관을 지원할 것이며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대규모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며 국제금융기관 가입지원, 미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허용, 수출입 제한조치의 포괄적 완화에 이어 전면철폐 등 추가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북무장해제 기도’라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군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⁴⁶⁾ 때문에 미국이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를 제기할 때 협상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감축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주권사항임을 내세울 것이다. 북·미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군사력을 강제할 수단과 방법은 한계가 있다. 재래식 전력 감축의 대상이 남북한의 전

45) Morton Abramowitz et al, “Korea Task Force Report,”(June 11, 2001)

46) 『로동신문』, 2001. 5. 28.

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협상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감축에 동의한 뒤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북·미대화에서 양측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할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북 연료용 중유 제공과 경수로 공급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결대상에서 제외된 민감한 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 재개를 허용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재처리 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받는 ‘위장공원 시설’과 일명 ‘5백호 건물’이 될 것이다.⁴⁷⁾ 이와 함께 ① 8MWe의 실험용 열중식로(영변에 있는 동위체 생산과 연구용 연자로), ② 영변에 있는 핵연료봉 저장시설, ③ 북한내 산재된 소량의 핵물질이 있는 약 30개 지점, ④ 영변에 있는 동위체 생산용의 ‘임계집합체’와 평양에 있는 ‘임계미만집합체’ 2개 시설⁴⁸⁾ 등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할 것이다.

IAEA의 특별사찰의 조기 실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미국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한 기를 화전발전소를 대체하는 방안과 두 기 모두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시키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상한 안을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폐연료봉 반출을 연기하면서 체제수호를 위한 핵카드를 미국을 대상으로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북·미는 대결·갈등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한 IAEA의 연료봉 시료채취를 허용하고 미사일 개발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전력공급과 송배전망 건설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대규모 식량 지원, 경제지원, 관계개선, 국교정상화까지 가능할 것이다.

북·미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양국은 정치적 사안에 있어 민감한 반응

47) ‘위장공원’은 핵폐기물 시설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IAEA는 의심하고 있다. ‘5백호 건물’은 IAEA가 1993년 1월 사찰을 요구했다가 군사시설이라며 거부당했던 곳이며, 높이 18m, 폭 24m, 길이 67m의 건물로 액체·고체 폐기물이 저장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2001. 5. 26.

48) 『世界週報』, 1998. 9. 29.

을 보일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테러는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며 미국이 벅커와 철책 뒤에 웅크리고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⁴⁹⁾이라면서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테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테러행위뿐만 아니라 마약수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해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모르핀, 코카인, 마약 등 독물 및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마취약을 불법거래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계속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것임을 공표한 만큼 성사 직전까지 갔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방지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실종미군 유해발굴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실종미군 발굴작업은 북·미간 갈등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미군 유가족 및 재향 군인단체들의 유골발굴 압력에 부응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작업을 허용함으로써 인도주의적 태도를 부각시킬 수 있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

2. 비정치면

단기적으로 정치군사면에서 북·미간 진통이 예상되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북·미간 대화·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와 변화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식량사정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빈궁한 국가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49) Colin L. Powell, Hearing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Commerce, Justice, State and the Judiciary(May 8, 2001)

북·미간 정치적 갈등이 재연되더라도 북한이 핵동결 중단이나 침략위협 등 극단적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식량배분상의 투명성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외부세계의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 이외로 전용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식량지원에 나서려 할 것이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대북 식량 지원은 1997년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공화·민주당 30여 명 의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의 일부가 강조될 것이다. 그것은 ① 지원쌀의 군량미 전용 금지, ② 북한의 군량미를 식량난 해소에 사용, ③ 지정된 수혜자에만 제공, ④ 북한에 농업개혁 촉구⁵⁰⁾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과 북·미간 합의사항을 연계시키려 할 것이다. 식량을 지원하되 “북한이 지켜야 할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⁵¹⁾을 미국이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는 즉, 북한이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분간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북한의 광물(아연·납·마그네사이트 등)과 미국의 곡물을 교환하는 바터거래를 위주로 교역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북·미간 활발한 교역은 북한이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국은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통해 미기업의 실질적인 대북 교역과 투자진출의 길을 터 놓았다. 추가 경제제재완화 조치에 의해 미재무부가 미국 기업·금융기관들이 대북 상품·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북·미간 교역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상품의 미국 수입을 위해서는 미수입업자가 재무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내야 한다. 일부 미국상품들의 경우, 예를 들어 반도체·컴퓨터·통신장비·방산상품 등의 대북 수출은 상무부의 수출허가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해서 지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의회는 수출입은행·해외민간투자공사·무역개발청 등 미정부기관의

50)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form Bill of Foreign Policy*, chap. 7, sec. 574 (May 1, 1997).

51) President Bush's Interview on *New York Times*, January 14, 2001.

대북지원이나 자금공여에 제동을 걸 것이다. 또한 테러지원국에 대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차관에 있어 미국은 찬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들 금융기구에 미국은 상당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자금지원에 반대할 경우 이를 이루기 어렵다.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는 미미하나마 전개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농업기술 향상, 에너지 개발, 시장경제 학습 등 건설적 발전을 위한 방미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인적 교류는 북한의 학자·전문가·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예술, 체육, 종교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군사적 위기시 이를 완화시키는 지렛대로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북·미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거나 북한이 핵동결 파기 행동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할 경우 북·미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 북·미관계 역시 남북관계와 같이 정치군사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V. 결 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전쟁예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제네바 합의 준수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책추진과정에 있어 미국은 일관된 원칙 관철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며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대북지원은 도와주되 검증한다는 태도로 나서고자 하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을 보장받으려 한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이는 정책대안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식의 상호주의를 선호하면서 주고 받는 매단계마다 검증을 강화하려 한다.

일부 참모와 공화당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대북강경 노선을 권유하

면서 제네바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북 공격이나 봉쇄, 경제제재, 원조 중단 등과 같은 막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온건보수론자들은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 도와주되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이 제기되었지만 외교안보팀과 실무 라인에 강경론이 지배적이지 않아 대북정책은 강·온기류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초강경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의 정책과 TCOG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포용정책 지지, 제네바합의 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무기급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경수로의 화전대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자를 거론할 때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후자는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는 것으로 협상을 필요로 한다. 추가 화전 건설은 합의 수정없이 가능하고 북한에게 엄청난 실리를 주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사찰과 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북·미간 대화·협상의 시작은 부시 행정부 이후 막혔던 장벽의 문을 여는 서곡이 되고 있다. 부시 진영은 클린턴 진영이 마련한 대북협상의 기본 틀을 참고 할 것이지만 미국의 정책 하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북·미 모두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은 서로에 대한 탐색과 의중 확인 그리고 전략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뒤부터는 각각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협상은 주로 북한의 핵안전조치와 미사일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구상하는 핵사찰과 화전 대체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미국의 화전 대체안에 대해 합의 파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핵사찰에 대해선 핵심부품 인도와 함께 이뤄질 철저한 사찰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사일협상에서도 북·미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개발이 외화 획득, 군사적 수단, 체제유지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위권을 내세운 미사일 개발과 자금 마련을 위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저지할 강제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구상 하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협상시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를 의제에 올리겠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경우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 문제는 남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 하에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핵·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은 현금보상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안별로 보상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사안별 단계적 해결방안이 시간만 끌 뿐 핵·미사일문제 해결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전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 카드 이후 미사일 카드를 들고 나온 전례는 미국에 사안별 해결보다는 일괄타결을 제시한다. 북한 역시 일괄타결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북한이 전략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지원과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을 취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 해결에 단기적 도움만 주었을 뿐 경제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와 북한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괄타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북한이 동결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IAEA의 무제한적인 사찰과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을 허용하고 미사일 개발·생산·수출·배치를 중단한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차관, 농업 개발 지원, 테러지원국 지명 해제에 이어 전면적 경제제재완화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어 전력공급, 송배전망 제공,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인공위성 대리발사 등을 제공한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과의 수교 및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해 연착륙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보상과 전면적 경제제재완화조치는 중국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체제수호, 군사적 수단, 협상 카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를 포기함으로써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지원 및 투자진출을 얻을 수 있어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괄타결이 1~2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은 MD 추진을 위해 북한을 미사일로 무장한 위협국가로 계속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개방·개혁이 체제위협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고 있는 북한의 경우 2년후 있을 미국의 총선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대승리를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간은 서로의 실리를 위해 시간을 조절할 것이고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박 종 철(통일연구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III.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 IV. 남북관계 전망
- V. 맺음말

I. 머리말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한 삼각관계의 전개방향과 연계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로 이루어진 세쌍의 양자관계와 길항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 대두이후 북·미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관계가 초점이 되어왔다.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었으며, 한국은 북·미협상의 뒷전에서 협상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대북포용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순조로운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협상에 의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북한미사일문제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동

시다발적으로 회담을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국제적 제약요인으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동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간에 간격이 생기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상호 균형적 관계를 이루는 이등변삼각형과 같은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면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원칙, 협상방식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평행성과 대칭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조망하고 이에 따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개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북·미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셋째, 북·미관계의 전개방향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을 예상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을 위한 한·미공조의 기본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1) 기본방향

21 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목표, 기본방향, 안보 개념, 외교수단,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화

당과 민주당의 이러한 대외정책상의 차이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드러났다.¹⁾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차별성을 보인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부시 행정부는 힘과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정책노선을 강조한다.²⁾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힘과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한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다자관계보다 양자관계 및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한다.³⁾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엔, NATO 등 다자기구의 역할을 통한 지지확보를 중시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국제질서를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이나 국방부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는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동맹의 연계도 강조된다.⁴⁾

셋째, 부시 행정부는 전통적 군사안보를 강조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 인권, 테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포괄적 안보위협보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가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것도 포괄적 안보에 대한 관심 결여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시 행정부는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usinfo.state.gov/topical/rights/elect2000/dncplatform.htm>,
<http://usinfo.state.gov/topical/rights/elect2000/foreignpol.htm>

2)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0, No. 1. (January and February, 2000)

3) Robert 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4) Robert 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Donald Rumsfeld, "Strategic Imperatives in East Asia," The Fourth Annual B.C. Lee Lecture of Heritage Foundation, March 3, 1998.

교적 협상보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및 군사력에 바탕한 압박정책을 선호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네바 합의(1994)와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단에 관한 모라토리엄(1999)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해 협상전략을 택하기 보다는 미사일방어계획에 의해 방어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미 국방대학 연설에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방어계획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기 위해 19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ABM조약을 폐기하는 한편, 핵무기를 감축할 것임을 선언했다.⁵⁾ 부시 행정부는 기술적 불완전성, 고비용, NATO 회원국 및 러시아·중국의 반발, 미사일위협을 과장한다는 비난여론 등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⁶⁾

다섯째, 부시 행정부는 단극 체제(unipolar system)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 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비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이라크, 북한 등을 가상 적으로 설정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 및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국제적 긴장요인을 강조할 것이다.

여섯째, 부시 행정부는 미 국방정책의 전략적 중심 축을 아시아로 설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전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미국무부 부장관은 한국방문시(2001. 5. 10) 미 국방정책의 중심축의 아시아로의 이전,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병력의 의존도 약화, 신속배치 전력 강화, 정보시스템의 절대 우위 유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력의 기동성 향상 및 경량화 등 새로운 전략원칙을 밝혔다.⁷⁾

한편, 부시 행정부는 아·태지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5)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6) Jack Ruina, "Missile Defense, Part VI," *The Washington Post*, March 4, 2001.

7) 『조선일보』, 2001년 5월 11일.

위상 증대를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탈냉전기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해서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이 대두하였다. 대중포용정책은 중국을 세계경제와 국제적 협력 틀 속으로 끌어들이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중포용정책의 기초에 입각하여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반면 대중봉쇄정책은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군사력 증강을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요인으로 인식한다. 대중봉쇄정책은 대중 무역규제를 유지하고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개선을 강조하며, 중국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중국과 공존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부시는 대중봉쇄정책의 기초에 입각하여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있다.⁸⁾

2001년 4월 초 미국 Ep-3 정찰기와 중국전투기의 충돌사건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관계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미국 정찰기 충돌사건은 대만해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활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누적되어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 정찰기 충돌사건에 대해서 타협안을 택했지만, 양국간 잠재적 갈등요인들이 도처에 잠복해 있다. 미·중간 긴장은 천슈이벤 타이완 총통에 대한 미국방문비자 발급과 달라이 라마 티벳 지도자의 방미 등을 둘러싼 중·미간 신경전에서도 나타났다.

미·중간 갈등은 타이완독립문제 및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되,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⁹⁾ 부시 대통령은 4월 25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whatever it took)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타이완문제에 대해서 지

8) Kim Sung-han, “U.S.-China Relations after Spy-plane Incident,” *Korea Herald*, April, 17, 2001.

9) Statement of Secretary of State-Designate Colin L. Powell prepared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17, 2001.

니고 있었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과는 대조된다.¹⁰⁾ 또한 부시 행정부는 대만에 대해서 잠수함, 구축함, 헬리콥터, 대잠수함 초계기 등을 포함하는 군사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타이완지원정책은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것으로 미·중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반적 기초속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한·미정상회담(2001. 3. 7)은 미국의 대북정책 점검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한·미공동발표문(2001. 3. 7)은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핵·미사일문제의 해결 등을 강조하였다.¹¹⁾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미국무부의 대북정책 6대 원칙(2001. 3. 9)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현실적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¹²⁾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일 3자조정감독회의(TCOG)(2001. 5. 26)에서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2001년 6월 6일 발표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회담을 재개하되, 회의 의제로서 제네바합의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해결, 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의 위협 감소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의

10) David E. Sanger, "Bush Tells Beijing the U.S. Is Ready to Defend Taiwan," *The New York Times*, April 26, 2001.

11) 한·미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재확인,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2차 남북정상회담 기대, 1994년 제네바합의의 유지와 합의이행을 위한 북한의 동참 촉구,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한·미·일 공조,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와 방어체계 강구 등을 포함하였다. Joint Statement by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d ROK President Kim Dae-jung, March 7, 2001. <http://usinfo.state.gov>

12) 미국무부는 대북정책의 6대원칙을 한·미·일 정책공조, 한국의 한반도긴장완화 지지, 북한정권에 대한 현실적 인식,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 점검(monitoring)과 검증(verification), 북한의 무기확산 우려 등으로 정리하였다.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Richard Boucher, "State Department Noon Briefing," March 9, 2001. <http://usinfo.state.gov>

제들을 남북관계, 한반도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의 지역안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에 상응하여 대북지원, 제재 해제, 북·미관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¹³⁾

이상을 통해서 나타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골격은 북한에 대한 인식, 협상원칙, 합의결과 이행,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현실과 변화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점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작성된 페리보고서가 북한의 변화와 체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있는 그대로의 북한’(North Korea as it is)과 협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¹⁴⁾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시 김정일에 대해 개인적인 의구심(skepticism)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환상(illusion)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대북협상의 원칙으로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북·미제네바합의와 북한 미사일발사 중단에 관한 모라토리엄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의무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대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철저히 상호주의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부시 행정부는 합의사항 이행의 원칙으로 점검(monitring)과 검증(verification)을 강조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과의 합의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합의에 대한 완전한 검증절차(complete verification)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⁵⁾

13) Statement by the President George W. Bush,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une 6, 2001.

14)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by William J. Perry. October 12, 1999.

15) Joint Press Conference by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d ROK President Kim Dae-jung, March 7, 2001. <http://usinfo.state.gov>

넷째, 부시 행정부는 북·미협상에 관한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 받을 의도가 없으며,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업적인 19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한 북한핵동결 및 1999년 북한미사일발사 중단 합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¹⁶⁾

다섯째, 부시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포용정책의 성과, 북한의 변화 평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견해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¹⁷⁾

2) 사안별 대북정책

(1) 제네바합의문제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제네바합의의 틀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경수로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제네바합의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장은 우선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수로에서 폴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송배전망의 낙후로 경수로에서 생산된 전력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매년 북한에 공급하기로 한 중유 50만 톤의 가격이 5년 동안 3배 이상 상승하여 1억 달러가 되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대북중유 제공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16) 콜린 파워 미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Colin Powell's Remarks to the Pool after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March 7. 2001. <http://usinfo.state.gov>

17) 김성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1. 4. 14.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미국이 중유공급대신 북한의 발전시설 보수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배전망 수선, 발전소 및 보일러 복구, 연료공급시설 재건설,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¹⁹⁾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일 3자조정감독회의(2001. 3. 26, 5. 28)에서 제네바합의 유지방침이 확인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²⁰⁾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2001. 3. 7)에서 제네바합의 이행을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경수로의 전용가능성과 감독방법, 감시 및 검증방법 등 제네바합의 중 일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합의사항 준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아태차관보는 제네바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였다.²¹⁾

미의회도 북한 핵활동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시 헬름스(J. Helms) 미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3월 9일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확산방지를 위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²⁾

18) Don Kirk, "U.S. Doubts Rise on North Korean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6, 2001; 경수로건설사업은 이외에도 건설일정의 지연, 건설비 증가와 재원조달문제, 핵심부품을 제공하기로 한 GE사의 참여 포기, 북한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와 철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Timothy Savagel, "Modernizing the US-DPRK Agreed Framework." <http://www.nautilus.org/papers/energy/modernizingAF.PDF>

20) TCOG Meeting Joint Press Statement, March 26, 2001, May 26, 2001.

21) Press Briefing following the TCOG Meeting, May 26, 2001.

22) 하이드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Bipartisan Accord on North Korea,"를

미국이 제네바합의에서 특히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경수로 건설의 지연으로 인해 과거핵활동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핵 동결에 관한 제네바합의가 철저하지 못했으며, 제네바합의의 개정에 의해 북한 핵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과거 핵투명성 규명문제는 경수로사업 일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경수로 핵심부품의 북한 전달 시점을 전후하여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모든 임시·일반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과거핵활동이 규명되어야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및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에 근거한 대북제재 해제와 원자력 기술이전에 관한 미·북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게 제공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요구할 것이다.

(2) 북한미사일문제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9월 북한미사일 발사 중단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북한미사일의 수출 및 개발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김정일 면담시 미사일문제에 관한 타협이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미국의 인공위성 대리 발사,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식량·석탄 등 현물지원 등을 조건으로 사거리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 개발 포기, 부품·기술·중개를 포함한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단 등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단, 검증문제와 이미 배치된 미사일의 처리문제는 미합의 사항으로 남겨졌다고 한다. 이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사일협상(2000. 11)에서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시 서명될 기본협정 초안과 양 측의 세부 의무사항을 명시한 비공개서한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다.²³⁾ 물론 협상이 진행되었을 경우 장애요인이 있으며 완전한 타

구성하여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Representative Hyde on North Korea, napsnet@nautilus.org, March 14 2001.

23) Michael R. Gordon, "How Politics Sank Accord on Missiles With North Korea,"

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문제에 관한 큰 틀이 접근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3월 6일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가운데 유망한 요소(some promising elements)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북·미미사일협상의 성과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으나,²⁵⁾ 다음날 입장을 선회하여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아·태차관보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진행된 북·미미사일협상은 매우 불완전하였으며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²⁶⁾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북·미미사일협상의 성과를 계승하기보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회는 미사일 수출중단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미사일개발 중단에 대한 인공위성 발사 등 보상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그 부담을 일본, 한국 등 관련 국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북한미사일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미사일개발은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미사일문제가 협상에 의해 해결될 경우, 미사일방어계획을 구축하려는 명분가운데 하나가 손실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의원인 토마스 앨런, 바니 프랭크, 엘런 토셔 등 5명은 부시 행정부가 MD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 미사일개발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⁷⁾

The New York Times, March 6, 2001; Wendy R. Sherman,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The New York Times*, March 7, 2001.

24) William Drennan, "U.S. Foreign Policy in the New Century," 통일연구원 간담회, 2001. 4. 4.

25) Steven Mufson, "Bush To Pick Up Clinton Talks on North Korean Missiles," *The Washington Post*, March 7, 2001.

26) Press Briefing following the TCOG Meeting, May 26, 2001.

27) 『동아일보』, 2001. 3. 23.

부시 행정부의 고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북한미사일개발을 중단시키면서도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고 북·미미사일회담에 관여했던 웬디 셔먼(Wendy Sherman)은 미사일방어계획과 북·미 미사일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셔먼에 의하면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대북 미사일협상을 타결하고 이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미사일협상과 미사일방어계획을 병행 추진하되, 북·미 미사일협상에서 성과가 있으면 미사일방어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북한미사일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²⁸⁾

(3) 한반도평화와 주한미군문제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한반도불안이 야기되거나 미국의 안보이익이 손상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북한의 전방배치 병력의 후방이동, 군사력감축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과 데니스 블레이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 상원에 출석하여 북한의 군사력이 최근 증강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⁹⁾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정착에서 체제전환방식이나 절차문제보다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및 점검(monitoring)과 검증(verification)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감안하여 김대중대통령은 2001년 3월 방미기간

28) Wendy R. Sherman, "Past Progress and Next Steps with North Korea," Presentation a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6, 2001. <http://www.usip.org>

29) 『동아일보』, 2001년 3월 31일.

동안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서 협의하되,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할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하에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한이 평화문제에 관한 회담을 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은 한반도평화문제에 관한 논의가 북한과 미국 및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다.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는 필연적으로 주일미군의 위상변화와 연결되며,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미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원칙이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 에번스 리비어(Revere) 주한 미대사 대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관련된 부문은 한·미간 협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¹⁾

30) 남북정상회담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미국의 관료 및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케네스 베이컨 미국방부 대변인 “주한미군은 한반도통일후에도 안정 세력으로 남을 것,” 2000. 6. 16; 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이며 양국이 필요로 하는 한 주둔할 것,” 2000. 6. 19;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00. 6. 24;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임,” 2000. 6. 28; 반면, 향후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 제시 헬름스 미상원 외교위원장, “남북한 관계개선이 진정한 것이라면 미국은 주한미군철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2000. 6. 17;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 2000. 7. 1. 『중앙일보』, 2000. 7. 3.

31) 『조선일보』, 2001. 3. 13.

한편, 미국이 세계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파월 미국무장관은 해외주둔 미군사력의 재배치(military realignment)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미 랜드연구소는 미국이 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기동성있는 군사력을 괌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배치하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안하였다.³²⁾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외주둔 미군 전력의 전면적 배치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배치조정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남북관계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부시 행정부는 원칙적으로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긴장완화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남북대화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관계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 진전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남북경협, 군사적 신뢰구축 등에 있어서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남한의 대북 전력지원이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준수 의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북 전력지원이 경수로사업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북 에너지사업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미국은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전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한 미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전체제 관리에 관한 유엔사 및 주한미군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과정, 예상 의제, 남북공동발표문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민감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32) Zalamy Khalilzad, David Orletsky,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2001)

한편,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망 구축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이완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은 한반도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을 위해서 한국이 대중·러에 대해 협력외교를 실시함으로써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감소될 상황을 우려한다. 2001년 3월 초 한·러정상회담시 ABM조약 준수에 대한 한국의 지지 입장 표명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은 한국의 대주변국 균형외교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반응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북·미 제네바합의와 미사일발사 동결을 토대로 북·미관계가 계속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안보, 경제난 극복, 국제사회진출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적 목표에서 연유한다. 북한의 개방과 대외관계 개선도 궁극적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북한에게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2001. 2. 21)은 부시 행정부의 상호주의, 단계적 접근, 경수로사업의 지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을 비난하고, 미사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사일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³³⁾ 또한 북한은 경수로 지연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핵동결을 중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³⁴⁾ 북한이 한반도군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군사력 감축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철수가 재래식군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평화안보를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

33) “북한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01. 2. 21.

34) 『조선중앙통신』, 2001년 5월 16일.

35) 『로동신문』, 2001년 4월 16일.

을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미회담을 위한 협상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대북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³⁶⁾ 북한 『로동신문』사설(2001. 3. 19)은 북·미 대결 해소와 관계개선을 희망하며,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의 의장보고서에 ‘북·미제네바합의’(1994. 10)와 ‘북·미공동선언’(2000.10)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북·미관계 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시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김정일 위원장은 페르손(Goran Persson) 스웨덴총리와의 면담(2001. 5. 3)에서 미국에게 대화를 희망하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미국과의 화해의사를 피력하였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남북대화 중단 이유라고 언급함으로써 한·미공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은 2003년까지 미사일발사유예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유화적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기술 수출은 무역이며, 살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미사일수출은 미국의 보상을 전제로 협상하겠다는 점을 밝혔다.³⁸⁾ 북한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발사 재개는 자제하되,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대가로 미사일수출을 양보할 수 있다는 이중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6월초 북·미대화가 재개된 후 북한의 대미정책은 양면적으로 나타났다. 2001년 6월 18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일단 북·미대화 재

36) 『조선중앙방송』, 2001년 3월 14일, 2001년 3월 17일; 『로동신문』, 2001년 3월 17일, 2001년 3월 18일, 2001년 3월 20일;

37) 『동아일보』, 2001년 5월 25일.

38) 『중앙일보』, 2001년 5월 4일, 5월 5일; 북한은 연간 1백여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 중동국가를 주축으로 4백여기의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키스탄의 가우리, 이란의 사하브-3 미사일도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부품을 바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의제로 설정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재래식군사력문제 등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재래식군사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북한은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공동커뮤니케(2000. 10)가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목할 사항은 북한이 경수로사업 지연에 대해 전력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핵사찰 요구에 대해 북한이 전력손실 보상이라는 협상수단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이처럼 북한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기존에 이루어진 북·미합의의 틀위에서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실리확보를 대가로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황에 따라 대미비난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핵동결 중단 등을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III.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1. 북·미대화 중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북·미고위급회담과 북·미 미사일회담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가 지연되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도 지체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시(2000. 3. 6)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을 의도가 없으며, 미국이 빠른 시일안에 (anytime soon) 북한과의 미사일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⁴⁰⁾

북·미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북·미 진전의 실질적 지표의 하나인 북한의

39) 『중앙방송』, 2001년 6월 18일.

40) 2001년 5월 14일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의 CNN 인터뷰, 『동아일보』, 2001년 5월 16일.

테러지원국 명단도 지속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2000년 3차례(3월, 8월, 10월)에 걸쳐 테러지원국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2000년 10월 테러지원국문제에 관한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북·미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반테러리즘 입장을 표명하고 반테러리즘 조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다⁴¹⁾ 그러나 2001년 5월 미국은 일본 적군파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테러집단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다.⁴²⁾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및 차관도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0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신청을 제출하였으며 2001년 5월 총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그 동안 가입신청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서 연차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은 거부되었다.⁴³⁾

북·미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발사 유예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북·미접촉 창구를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유럽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변화와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스웨덴 총리이자 유럽연합 의장인 페르손 총리의 북한방문은 북한의 대유럽 외교의 상징적 성과였다.

북·미대화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은 북·미관계 경색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공조가 남북대화 교착상태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⁴⁴⁾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이 원인이 미국

41) Joint U.S.-DPRK Statement on International Terrorism, October 6, 2000. USKOREA@PD.STATE.GOV

42) 미국은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April, 2001.

43) 『동아일보』, 2001년 4월 30일.

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에게 대북 접촉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북·미대화가 중단되는 동안 북한은 한·미 균열을 시도하고, 이것이 한·미의 대북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리처드 바우처(Richard Boucher) 미국무부 대변인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남북대화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⁴⁵⁾

2. 북·미대화 재개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2001년 6월 13일 뉴욕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되었다. 북·미회담은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평화담당 특사와 이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간에 이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조명록 북한특사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대화는 실무급회담에서 재개된 것이었다.⁴⁶⁾ 북·미대화의 결과 공식적인 발표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의무 이행, 북한미사일 수출 및 개발 중단, 북한의 재래식군사력 위협 등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전력 손실 보상, 미사일수출 중단에 대한 물질적 보상,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의 의사를 탐색하면서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문제가 가장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양상에 따라 북·미관계의 전반적 범위와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대화의 형태로는 북·미관계의 전반적 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고위급회담과 함께 미사일문제, 미군유해 송환

44) 북한은 ARF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미·북관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2001년 5월 22일.

45) 『조선일보』, 2001년 5월 7일.

46) 『동아일보』, 2001년 6월 14일.

등 세부 의제에 관한 분야별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미사일회담이 초점이 될 것이다. 북·미 미사일회담은 수출, 개발, 검증, 배치미사일의 처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협상 결과, 미사일문제의 각 이슈별로 단계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관련 이슈들을 망라하여 일괄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수출·개발포기에 대해 물질적 보상과 기술적 보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직접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게 부담을 분담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사찰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제네바합의의 수정을 제기할 경우, 북·미핵협상이 또 다시 개최될 수 있다. 미국이 제네바합의의 수정을 제기할 경우, 북한은 일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전력 제공, 송배전망 건설 등 추가 보상을 얻기 위해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응할 수도 있다.

또한 제네바합의의 수정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⁴⁷⁾ 북·미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이후, 북한경수로사업은 KEDO가 주관해 왔기 때문에, 북·미핵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국제원자력기구, 북한-KEDO, 미국-KEDO간의 상대적 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제네바합의의 수정은 미국, 북한, 남한, 일본, 유럽연합, 국제원자력기구, KEDO 등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북핵협상이 될 것이다.

3. 북·미관계 악화와 긴장고조

북·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핵·미사일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

47) 미 외교협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한 서한은 북한핵시설 해체의 지연, 심각한 기술적·법적 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북·미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하되,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과 함께 검토작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네바합의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함. A Letter b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Korea Task Force to U.S. President George Bush, March 26, 2001. <http://www.cfr.org>

견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핵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협상, 회담결렬, 긴장고조, 협상재개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⁴⁸⁾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검증, 점검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핵·미사일을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하거나 무력제재를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실효성이 적으며,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대북 무력제재는 북한의 반격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대북무력제재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북한도 핵동결 파기나 미사일발사 재개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대외개방과 국제관계확대를 송두리째 무산시킬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볼 때, 공화당출신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퍼즈(James Jeffords)의원의 탈당으로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다. 보수주의자인 공화당의 제시 헬름즈(Jesse Helms)의원 대신 외교위원장직을 맡은 조지프 바이든(Joseph Biden)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견제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화당 존 워너(John W. Warner)위원장으로 부터 상원 군사위원회장직을 인수받은 민주당의 칼 레빈(Carl M. Levin)의원은 미사일 방어와 펜타곤의 예산 지출 증액 등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현안에 제동을 걸것으로 예상된다.⁴⁹⁾

따라서 북·미대화가 결렬되고 긴장국면이 조성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의 냉각기를 거친 후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재개하여 최대의 공통이익을 모

48) 북·미협상의 결렬, 긴장고조, 재협상의 반복적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Leon U.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49) "Chair Changes Likely to Alter Priorities," *Washington Post*, May 27, 2001.

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카터 전 미대통령이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듯이 고위급인사가 국면전개를 위한 비공식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⁵⁰⁾

IV. 남북관계 전망

남북관계는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적 안보문제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의 확산방지, 미사일방어계획 등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 한·미 동맹의 역할, 주한 미군의 위상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협력사업의 진전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해결 양상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이다. 또한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등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다.

한편 각 차원별로 주요 행위자가 다르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인 북한핵·미사일문제의 주요 행위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한반도평화문제의 주요 행위자는 남북한과 4자회담이다. 남북관계의 주된 행위자는 물론 남북한이다. 각 차원별 행위자는 상호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의 행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의 삼자간 역학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세쌍의 양자관계와 연계된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전개될 남북관계의 전개양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전망할 수 있다.

50) 예를 들면,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반도 민간전문가회의에서 남북한, 미국, 일본의 비정부 4자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페리 전 미대북정책조정관의 북한방문이 논의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1년 6월 1일.

1. 남북관계의 답보상태

남북정상회담 이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던 남북관계가 2001년 들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5차 남북장관급회담(3. 13일 예정), 세계탁구단 일팀 구성, 적십자회담(4.3 예정) 등이 무산되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텃던 금강산관광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경의선 연결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2차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20만 톤을 북한에게 지원함으로써 남북화해의 끈이 유지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체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남한의 보수적 견해와 대북지원의 경제적 부담이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대미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를 정체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체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북·미관계의 소강상태가 남북관계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강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이 제약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영역을 확대시켰으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정성이 커지고 있다.⁵¹⁾

둘째, 이슈를 기준으로 하면,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핵·미사일문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남북화해·협력의 영역이 제약되게 되었다. 이것은 핵·미사일문제의 전개양상이 남북화해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한, 미국의 3자 관계에서 북·미관계의 비중이 남북관계에 비

51) 김기정,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남북한관계,”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2001. 4. 13.

해 커졌다. 북·미 핵협상 기간동안 남북대화는 단절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북·미관계의 진전없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

넷째, 한반도평화문제에 있어서도 북·미대화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2001. 3. 7)시 남북한이 한반도긴장완화방안을 강구하되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은 4자회담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긴장완화와 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의 군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군사안보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섯째, 한·미동맹의 구속력이 강조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은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정착에 있어서 남북한의 자율적 영역보다 한·미동맹의 규제력이 강해졌다.

여섯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연은 북한의 경제개방 및 차관도입, 남북경협을 제약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합작 생산품의 대미수출을 위해서는 테러지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첨단산업분야에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려면 테러지원국에 대해서 자국기술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르협정의 규제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되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⁵²⁾ 따라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연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방 및 남북경협을 제약하고 있다.

52) 박종철, “북·미경제관계: 적성국관계에서 경협관계로의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 11권 제 2호(1999 하반기), pp. 139~148.

2. 남북관계 진전과 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위원장은 페르손 스웨덴총리와 의 면담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남북대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남한이 남북관계 진전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면,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하도록 설득하여 북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게 한·미동맹 보다는 민족적 차원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남북문제에 접근하기를 주문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미대화 진전과 병행하여 남북대화 재개가 모색될 것이다. 북한은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대외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실리를 확보하는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방식은 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의 현안을 점검하는 방식이 있다. 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경협 확대,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장관급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회담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북·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도 북·미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북·미 대화에 유리하다고 여길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준비 및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한·미 협의가 중요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가운데 북한 핵·미사일문제, 주한미군의 위상,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될 문건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서도 한·미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3. 남북관계의 후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구체화되고 북·미대화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기로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전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남한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점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관계가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보다는 인도적 문제, 남북경협, 사회문화적 협력 등과 관련된 실무적 차원의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미간 핵·미사일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한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위기 고조와 남북관계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이 전면 대결하기보다는 타협책을 발견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런데 북·미관계의 교착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었던 1994년 북·미핵협상 때와는 달리 남북대화 창구가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북·미 대립을 완화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한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악역(bad cop)을 맡는 반면, 한국은 좋은 역할(good cop)을 맡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도 북·미관계의 경색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을 완화시키고 남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개역할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회담을 통해서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V. 맺음말

남북정상회담과 그후 남북관계 진전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및 한·미관계의 복합적 틀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간 정책조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균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원칙, 절차, 속도 등에 있어서 한·미간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북협상을 위해서 한·미공조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공조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며, 대북협상의 효과를 높이는 지렛대이다.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⁵³⁾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대남무력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신 북한에게 체제보장,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및 국제차관 제공을 제안하는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현안들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로드 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미의 역할분담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정책 협조를 위해 한·미는 정부 차원의 협의채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간 협의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연구기관과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간 세미나와 협의채널을 다양화하고 한·미전문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미정책 협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북·미제네바 합의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시설들을 동결하고 있으며, 금강리 지하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였다. 북·미제네바합의는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53)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8일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간담회에서 제안했다.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 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미사일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방어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재정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간동안 상대적으로 비용과 위험부담이 적은 북한과의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미사일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방어계획을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기회의 창을 닫아버릴 이유는 없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수출 및 개발중단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미사일 보상은 일본, 중동 국가, 유럽 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한국의 부담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4자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의 역할과 미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동북아정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한반도군비통제 등 복합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미·중관계의 파동과 영향

이 영 길(한국국방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미중관계의 배경과 과정
- III. 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 IV. 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
- V. 대 한반도 영향과 과제
- VI. 결 론

I. 서 론

미국 대통령 경선 기간중 부시 후보가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중국정책 및 그에 따른 새로운 미중관계의 동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미중관계는 거의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전략을 겨냥한 대중정책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며, 따라서 미중관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그것의 변화 여하는 아시아 안보의 관건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조건에 의한 역동적 미중 ‘양극체제’가 형성됨으로써, 그 역학구조가 동아시아 대륙의 중국 지배와 해양의 미국 지배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관계는 역동적인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대중정책 및 미중관계 동

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나아가 관련 문제인식 및 대응방향 모색에 기여하기 위하여, 먼저 (1)미중관계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한 개관 그리고 (2)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분석 등에 기초한 (3)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을 전망한 다음, (4)그것이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II. 미중관계의 배경과 과정

미국 역대 행정부하에서의 미중관계는 ‘파란-곡절’의 형태를 반복하였다. 정권수립 직후 2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적으로 정의되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1970-80년대 미국은 당면 공동위협 대처라는 전략적 고려에 입각함으로써 중국을 ‘비동맹 우호국가’로 정의하였다. 탈냉전 이후 소련 해체와 함께 미중 양국이 공동의 적을 상실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정의는 ‘모호성(模糊性)’을 띠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미국에게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非敵非友)’,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亦敵亦友)’, 그리고 ‘적과 친구의 중간(介於敵友之間)’ 국가 혹은 ‘협력적 상대’, ‘잠재적 적수’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기 시작하였다.¹⁾

특히 클린턴 집권 8년 동안 미중관계의 역정은 보다 현저한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 및 미국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동기 등이 반영됨으로써 조정을 거듭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접촉’을 통한 미중관계의 기본적인 안정 유지와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 즉 ‘접촉-견제’의 교차 병용으로서, 이른바 (1)‘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 evolution)’, (2)‘포괄적 접촉’, (3)‘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台)’, 그리고 (4)‘전략적 동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중관계는 대체로 (1)‘소극적 안정’, (2)‘제한적 위기’,

1) 傅夢孜, “面向新世紀的中美關係:競爭与合作中求双赢,”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1-2期, pp. 91~94.

(3) ‘적극적 화해’ 등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1. 소극적 ‘안정’

클린턴 행정부 출범 초기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 유지 및 미국 지위에 대한 도전 억제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및 안보적 이익 보장에 기초하였다. 클린턴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시위하였는 바, 여기에는 (1)지역내 상당한 규모의 군대주둔 유지 의지의 표명, (2)탈냉전 시기 국제위협의 불확실성 및 국력의 변화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본 및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 강화, (3)접근이 요구되는 군사적 우발사태에 즈음하여 개입이란 정치적 상징 및 실질적인 군사적 배치를 제공하는 군대 파견에 관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합의 달성, (4)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는 징표로서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대처, 그리고 (5)북한에 의하여 가해지고 있는 새로운 성격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 담당 및 군사적 조정 안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어떠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조정도 당면 지역정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였다.²⁾

경선기간 동안 클린턴은 이미 전임 부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하여 과도하게 연약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이 예고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의 무역관행, 인권문제, 무기판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현저한 그리고 유효한 수법은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와의 연계였다. 1993년 클린턴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 문제에는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및 민주주의 존중”이라는 조건이 부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해 5월 클린턴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1년 연장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다시 1년을

2) Avery Goldstein, "U.S. Policy Toward China: Try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 13, 2001; <http://taiwansecurity.org/IS/2001/FRPR-041301.htm>, p. 1.

더 연장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인권상황 개선에서 전면적 그리고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인권공세를 전개하고 인권을 무역과 연계시킴으로써 미중관계는 불투명한 국면으로 함몰되었다.

1993년 여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클린턴의 결정에 이어 이른바 ‘은하호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미중관계는 보다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사건은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 양국간 유효한 채널 및 대화의 결여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는 마침 미국이 엄격한 비확산정책 추진을 착수하던 시기였다.

이후 미국의 조야는 중국에 대하여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미국 무부는 중국이 MTCR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키스탄에 M-11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국내법에 의거 중국 및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어 미하원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2000년 북경 올림픽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무역역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하에서도, 중국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미국내에서는 ‘인권’에 집착한 대중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마침내 미중관계의 경색이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국의 위상 및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냉전시기보다 더욱 중요성을 더해감으로써 탈냉전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적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미 대중정책을 수정한 서구 및 일본에게 거대한 중국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에 기초한 대중정책의 전환을 검토함으로써 중국과의 ‘포괄적 접촉’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최초의 양국 정상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쌍방은 미중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미중관계가 쌍무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이해증진은 물론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5월 클린턴은 결국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의 분리는 대중정책 조정의 또 다른 중대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미국 재무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등이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특히 10월 중순 페리 국방장관의 방중은 천안문사태 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으로 기록되었다. 페리의 방중은 양국 군사교류의 회복을 의미하였다. 한편 그 해 중국측에서 부총리급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11월 중순 장쩌민 주석이 APEC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클린턴과 제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장쩌민 주석은 양국간의 건설적 관계정립의 필요성 및 평화공존 5항원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동감을 표시하는 한편 양국간의 신뢰구축을 강조하였다. 당시 외국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으로 평가하였다.

미중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에 대한 일부 조정 내용을 비준함으로써 미국 정부와 대만 당국의 보다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고위 경제관료들의 상호 방문이 허용되었으며, 대만 고위관리들의 방미는 불허하되 필요시 그들의 국경통과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제외한 보다 광범한 국제조직 활동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또한 대만의 대미 지위 및 관계 격상이 암시된 가운데 그 해 12월 미국 교통부장관이 미국 각료로서는 외교관계 단절 후 최초로 대만을 공식 방문하였다. 대만과의 관계 조정 의도가 농후한 미국의 조치들은 이후 미중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2. 제한적 ‘위기’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둘러싼 미중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미국과 대

만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됨으로써 미중관계의 심각한 퇴보가 예고된 가운데, 이른바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였다.

당시 ‘중국위협론’은 실제로 중국이 인접국들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여부 및 그 정도를 둘러싼 ‘논쟁’, 즉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 및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장 이상의 이론적 논쟁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논쟁들은 특히 (1)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은 급속한 경제적 및 군사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2)이러한 변화들은 중국연구 분야가 다양한 이유로 보다 광범한 일반적 이론 및 분석들이 중국 행태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념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3)이러한 동향들은 세계정치 및 국가행위의 이해를 위한 많은 분석들이 경험적 및 이론적 수준에서 묘사되거나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3가지의 주요 경향들의 교집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 역사적인 특정 시기를 조건으로 하여 만연됨으로써 그것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즉 당분간 여하한 여타 국가도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면서, 따라서 만연된 불확실성-유도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중국위협’ 논쟁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여타 견제조치들의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은 ‘대만카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5월 미국무부는 리등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비공식 방미 허용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6월로 예정된 츠하오티엔(遲浩田) 국방부장의 방미계획을 무기 연기하였으며, 위전우(于振武) 공군사령원의 방미활동을 즉각 중단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비확산에 관한 양국 전문가회의의 무기 연기 및 주미대사의 소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미중관계는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1996년 3월 이른바 ‘대만화’를 의미하는 최초의 직선제 대만총통

3) Andrew D. Marble, "The PRC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Why the "China Threat" Debate?," *Issues & Studies* (January/February 2000), pp. 1-18.

선거에 즈음하여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의지를 시위하려는 의도가 농후한 대만 주변에서의 미사일 훈련을 단행하고 미국이 중국의 무력시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2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으로 파견함으로써 ‘제3차 대해위기’가 촉발되는 등 미중관계는 위기의 정점에 직면하였다.

대만문제를 제외한 여타 중대한 문제들에서도 미중간의 갈등 및 모순은 증폭되었다.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그 해로 6회에 걸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저지하고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시장개방 등의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미국 의회는 티베트 독립세력을 지지하는 한편 홍콩문제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였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기존의 불개입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미중 쌍방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관계의 회복 및 안정화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미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자태를 솔선하였는 바, 1996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중국 통신위성 판매 금지에 관한 해제 결정을 의회에 통고하였다. 가장 민감한 대만문제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1)‘2개중국’ 반대, (2)대만독립 반대 및 (3)대만의 유엔가입 반대 등에 대하여 확약하였다. 8월 및 9월 외무장관회담을 통하여 미국측은 미중관계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는 한편 미중관계의 기초를 규정한 이른바 ‘3개공동성명(三個聯合公報)’의 원칙 준수를 공약하였다.

3. 적극적 ‘화해’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의 본질적 불확실성이 보다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동의를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의 의미들을 둘러싼 논쟁은 열기를 더하였다. 즉 “예상되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대

하여 미국의 시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분석가들은 대체로 (1) ‘접촉(engagement)’ 혹은 (2) ‘봉쇄(containment)’를 지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였다.⁴⁾

이른바 ‘접촉’을 지지하는 진영의 분석가들은 “세계는 권력 중심의 다극화 전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보다 강화된 역할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접촉’으로 지칭되는 접근을 지지하면서, 국내사안 관리 및 국제이익 추구에서의 중국의 변화 축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이기화’ 및 ‘국제화’가 중국에 대한 강제로 작용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가 미국의 우세 유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중국이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 혹은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면 갈등 및 경쟁이 미국의 주도 및 이익에 대하여 보다 심각한 도전을 예고한다는 우려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봉쇄’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접촉’ 지지자들이 모색하는 이른바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내정책에서의 변화가 입증되기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벽의 강화를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탈냉전 이후 대중정책이 미국 외교에서 일대 난제로 부각된 가운데, 특히 클린턴 집권 이후 중국과의 접촉 유지를 주장하는 주류파의 의견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은 중대한 실책으로써 호혜관계의 정립에 기초한 정책 선택만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5월 이후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정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들은 미중관계가 미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개방되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국제체제에 보다 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4) Avery Goldstein, *op. cit.*, pp. 2~3.

미국의 대중정책 조정은 새로운 단계의 진입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층 접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7월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에 이어, 11월 클리스토프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이 기약되었다. 마침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의 접촉 유지가 회복됨으로써 미중관계의 분위기는 현저히 개선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1997년 10월 장쩌민 주석은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방향 및 구도에 관하여 깊이 논의함으로써 마침내 “21세기를 지향한 건설적 전략동반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어 1998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의 답방은 미중 외교사의 중대사로 기록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규모 방문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5개 도시를 순방하였으며 북경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쌍무문제는 물론 세계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양국 고위급 방문 및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쌍무적 문제들은 물론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 또한 강화되었다. 미중 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라크 무기사찰, 서남아 핵실험 등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당시 장쩌민 주석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 안정, 아시아 금융위기 및 서남아 긴장완화 등의 문제에서 협의 및 협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중요한 역할 및 협력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그 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방중을 5개월 앞당긴 것도 미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10여년 이래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고 심지어 쌍방이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에 대한 진력”이란 구호가 등장함으로써 미중관계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래 최상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9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피폭 사건에 따른 중국 국내에서의 반미감정 격화로 말미암아 미중관계는 또다시 삼각한 저점으로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이는 그동안 중국 WTO 가입을 놓고 진행되어오던 미중 회담의 최종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중 쌍방은 10여년간의 부단한 화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미중 쌍방은 신중한 그

리고 적절한 선택을 결정함으로써 일시 중단되었던 회담을 조속히 회복하는 한편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미중관계는 또다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우발적인 ‘대사관피폭’ 사건이 미중관계에 장기간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제거되었다. 이듬해 클린턴은 그의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의회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지위 부여(PNTR)’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함으로써 이전의 미중 합의를 확인하였다.

Ⅲ. 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정책의 기초를 정립하였다. 미국 사람들은 ‘전략적(strategic)’이란 용어에 대하여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국가안보의 함의가 직접 내포되지 않는 장기적 및 방향적 의미로 이해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의 외교관계 문제에 관한 언급에서 ‘전략적’이란 용어는 통상 국가안보의 함의를 내포한다.⁵⁾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전략적 경쟁상대’란 기본적으로 ‘미국과 세력범위를 쟁탈하는 국가’, 즉 그 미래의 행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한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경한 태도’ 및 ‘광범한 대비’를 통하여 그 행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혹은 ‘위협’을 언급할 때, 주요 논거는 역시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강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역내 세력균형의 파괴, 심지어 미국의 지역 역할에 대한 불만 및 지역으로부터의 미국 축출 등의 가능성에 근거할 것이다. 럽스펠드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군사력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향해야 하며 그 주요 착안점의 하나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에 대하여 도전할 가능성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바로 이러한 전략적 논거 및 고려에서 출발

5) 張少威, “布什‘失言’還是政策轉變?,” 『大公報』, 2001. 4. 28.

하였을 것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및 미중관계는 보다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세계적 및 지역적 사안 그리고 쌍무적 관계에서 복잡한 의존관계 및 광범한 공동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항구적(durable)’ 관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만문제 및 미국 정치행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 대사관 피폭 및 군용기 충돌 등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돌발적’ 요소, 그리고 천안문사태 등과 같은 ‘구조적’ 및 ‘돌발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많은 불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매우 ‘취약한(fragile)’ 관계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⁶⁾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정책과 관련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초 위에서 상당한 조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현안들은 역시 구조적 요소로서의 대만문제 및 그것과 관련된 미사일방어(MD) 문제일 것이다.

1. 대만문제

1990년대 이후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팽창과 함께 ‘대만독립’을 천명한 민진당의 천수이볜엔(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됨으로써 대만정세 및 양안 관계는 50년 이래 최대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은 이른바 ‘평화통일 및 1국가 2체제(和平統一, 一國兩制)’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대만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양안문제와 관련 오직 평화적 과정을 중시할 뿐이며 중국통일 및 대만독립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⁷⁾

중국에게 ‘조국통일’의 결의는 외세의 침략 및 간섭으로 말미암은 굴욕 및 좌절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고려들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1)중국공산당의 정통성 유지 일환으로서의 ‘민족주의’ 고취, (2)중국 주변 ‘분리주의’ 차단, 그리고 (3)미국 ‘패권주의’ 억지 등이 포함된다.⁸⁾

6) 林東來, “中美關係脆弱而有韌性,” 『聯合早報』, 2001. 5. 28.

7) 吳心伯, “展望: 布什政府的對華政策與中美關係,” <http://china.donga.com/20010412>, pp. 2~3.

최근 미-중-대 삼각관계는 ‘군용기충돌’사건 및 미국의 대대만 군사판매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군용기사건 이전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이 미중관계의 대국적 틀을 중시함으로써 대만에 대하여 ‘오보’를 보내지 말 것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할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수차 촉구하였다. 중국은 ‘오보’가 바로 미국의 대대만 첨단군비 판매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이른바 ‘무력에 의한 통일 거부(以武拒統)’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⁹⁾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대만이 요구한 품목 가운데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액은 40억불에 달함으로써 10년이래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이지스함 판매를 거부하였으나 최단 기간내 키드급 잠수함 판매로 보상하는 한편 재래식 동력 잠수함 및 대잠항공기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공격성 무기 판매 불가라는 ‘금기’ 공약이 붕괴되면서 대만은 방어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대대만 군사판매 문제는 미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돌출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군사판매 방식을 통한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계 가입 실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하여 견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이지스 및 TMD 체계 판매를 부단히 고려할 것이다.

중국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기판매 결정 직후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대대만 방위협력’에 관한 언급이었다. 그는 “대만이 대륙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일체의 수단을 다해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면사’를 걷어냄으로써 대해전략과 관련 기존의 ‘모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비쳐졌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엄수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으나, 부시의 발언은 ‘대만관계법’이 규정한 ‘예의 주시’라는 한계를

8) Avery Goldstein, *op. cit.*, p. 3.

9) 范海泉, “中美關係的新變化,” 『大公報』, 2001. 5. 3.

훨씬 초월하였다. 이는 미국이 대해정책(台海政策) 위에 덮어두었던 ‘모호성’이란 면사를 걷어내려는 의도로서, 중국이 설정한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대만에게 보다 넓은 탈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방위협력을 포함한 미국의 대만전략은 자신의 국가이익, 동아전략 그리고 대중정책 등의 고려와 상호 연계되는 추세 및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대만전략의 중심이 대대만 방위협력 및 대양안 균형유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적극적’ 배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대만 군사판매에서 나타난 중대 변화로서 중국의 민감한 반응 및 고도의 경계를 수반할 것이다.¹¹⁾

2. MD문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미국 미사일방어(MD) 구상의 주요 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의 MD 계획들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미국의 MD는 그들의 억지능력을 침식함으로써 그들의 안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의 MD 구상에 대하여 견지하는 수사만큼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¹²⁾

미국의 MD 구상은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적 단면이 중국의 가장 민감한 군사적 자산 및 미국의 가장 역력한 취약성과 직결됨으로써 MD는 향후 장기간 미중관계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MD 구상은 중국에게 복합적인 전략적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MD는 중국의 대대만 압박, 위기시 대미일 분리 및 대미국 억지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은 MD가 자신의 보복능력을 박탈할 것으로

10) “中美關係憂多於喜,” 『聯合早報』, 2001. 5. 1.

11) 朱鋒, “分析:美國對台軍售政策究竟出現了什麼變化,” 『環球時報』, 2001. 4. 13.

12) Michale J. Green and Toby F. Dalton, Asian Reaction to U.S. Missile Defense, *NBR Analysis*, vol.11, no.3 (Nvember 2000) p. 31.

우려한다. 중국에게 핵억지력의 보장은 지역이익의 보호를 위한 행동자유의 확보라는 장기목표에 필요하다. 냉전종식 이후 1991년 걸프전쟁, 1996년 대만위기 및 1999년 NATO의 코소보작전 등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MD 대처에 긴박성을 더하였다. 압도적인 미국의 재래식 우세하에서 중국은 핵능력을 통한 대미억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단극적 세력균형 유지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MD는 또한 중국의 대지역 및 대대만 야망을 위협할 것이다.¹³⁾

즉 중국의 반대는 주로 미국 기술능력에 대한 우려와 그 체계들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능력 및 보다 원거리를 겨냥한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관심은 특히 MD가 주로 대만 혹은 대만을 지원할 미군 보호에 치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상쇄할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¹⁴⁾

중국은 미국의 MD 계획이 나아가 (1)세계 전략적 균형 및 안정의 파괴, (2)강대국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의 저해, (3)국제적 군통군축 과정의 저해 및 새로운 군비경쟁의 유발, (4)국제확산방지기제 기반의 동요 및 미사일 확산의 자극, (5)국제관계에서의 군사적 요소의 체고, 그리고 (6)국제 평화 및 안정의 저해 등 국제안보환경에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⁵⁾

MD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 우려들은 미국의 MD 논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MD 체계가 중국의 당면 무기체계들을 완전 제압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MD의 진정한 목적이 점증하는 ‘중국위협’ 대처에 있다는 미국의 명시적 시사로 말미암아 중국은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¹⁶⁾

그러나 만약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위협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제한적 MD 능력에 의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도모한다면 이 문제에서의 미중 마찰은 통제될

13) *Ibid.*, p. 32.

14) Avery Goldstein, *op. cit.* p. 5.

15) 吳心伯, 前揭書, pp. 3~4.

16) Avery Goldstein, *op. cit.*, pp. 5~6.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은 모두 이 문제와 관련 전략적 대화를 희망하였다. 긍정적 결과는 대화를 통한 다협외 달성으로서, 예를 들면 미국은 오직 제한적 MD체계만을 개발하며 중국은 전략무기의 증강을 자제함으로써 전략적 경쟁의 수위 상승을 방지하는 길이다. 부정적 결과는 미국이 대규모의 MD계획 추진을 결의하고 중국이 불가피하게 반응함으로써 쌍방의 군통, 군축 및 비확산 방면에서의 협력 종식, MD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 새로운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 미중 전략관계의 심각한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MD 및 TMD는 미중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건적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¹⁷⁾

3. 비확산문제

미국은 줄곧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의 확산을 자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비대칭적(asymmetric)'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며 확산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각종 대응수단을 강구해 왔다. 따라서 비확산 문제는 당연히 부시 행정부의 군비통제 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비확산 문제와 관련 파월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시 행정부의 급선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비확산을 자신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문제를 미중 및 미러 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2000년 11월 중국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비확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국의 PNTR 부여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비확산 방면에서의 미중 협력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¹⁸⁾ 첫째,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가 중국으로 하여금 비확산 문제를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와 연계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MD 관련 동향 또한 비확산 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吳心伯, 前掲書, pp. 3~4.

18) 上掲書. p. 4.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비확산 문제와 쌍무관계를 상호 연계시키는 정도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¹⁹⁾ 즉 비확산 문제와 관련 미중간 이견의 근원은 비확산 문제가 국가이익이란 전체 구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문제가 국가이익의 기타 부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중국의 인식과 비확산 문제를 기타 문제들과 연관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 사이의 차이에 있다. 또한 중국은 기존의 비확산 메카니즘에 대한 상당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들은 모두 비확산 문제에서의 중국의 협력 의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질적으로 양국 이익의 상호작용 상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4. 기타 문제

중국의 WTO 가입 및 미국의 PNTR 부여 등에 따라 미중간 무역의 정치화 문제는 대체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무역 자체의 문제는 부단히 제기될 것이다. 전년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역조가 800억불을 초과함으로써 중국은 최초로 일본을 대체하고 최대 대미흑자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는 보호주의를 초래할 수 있으며 2001년 11월로 예정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공약이행의 문제와 연계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규정 준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 향후 이른바 ‘인권문제’ 또한 미중간 이견을 증폭하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 될 것이다.

IV. 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

미국의 대중국정책 방향은 중국요소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미중관계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역시 기존의 경향 특히 클린턴 집권 2기의 전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대체로 (1)‘포괄적 접촉’, (2)‘불시적 조정’, (3)‘전향적

19) Evan S. Medeiros, *US-China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Progress and Prospect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00, pp. 3~4.

접근' 등 3가지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포괄적 접촉의 추진과 함께 특히 대중전략의 다양화 및 효율화를 겨냥한 그리고 정세변화에 부응한 수단의 적시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전략적 요소 및 일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여곡절이 예상됨으로써 미국의 정책적 조정은 보다 융통성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중관계의 양상은 '지리-조건'적 강제에 의한 (1)'구조적 안전' 그리고 그 틀 속에서의 양국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2)'불시적 긴장' 및 (3)'모호적 공존'이란 3가지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 구조적 '안전'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는 민주주의, 상호의존 및 다자체제 등 이른바 '평화 3요소'의 결여로 말미암아 긴장 고조의 우려가 만연되었다.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 및 그에 따른 권력이동이 지역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열강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그리고 신현실주의자들은 다극체제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세력균형적 평화 관리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지리적' 요소가 '구조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경쟁은 반드시 긴장, 위기 및 전쟁 등으로 특징지워지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세력균형 및 평화조건의 지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망하였다.²⁰⁾ 즉, (1)세계는 단극체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나 당면 동아시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즉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역내 열강들—러시아 및 일본—이 한 극으로 부상하기 위한 '지리적' 조건이 결여됨으로써 양극체제가 보다 안전할 것이며, (3)미국과 중국은 상호 상대방에게 잠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리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상호 숙명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나, (4)'지리'는 갈등의 주요한 원인들—능력, 관심, 안보 딜레마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의 안정 및 질서에 기여할 것인바, 특히 동아시아의 균형적 경향, 미중 양국의 '지리-조건'적 이익 그리고

20)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4 (Spring 1999), pp. 81~82.

안보 딜레마에 대한 지리적 요소의 완화작용 등에 의한 미중 양극체제가 보다 안정적이며 훨씬 평화적인 경향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동아시아는 ‘지리’가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적시적 균형유지 및 질서창조를 위한 열강의 능력 및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적 갈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3대 갈등’은 (1)남사군도에서의 주권분쟁, (2)한반도에서의 충돌위험 및 (3)대만을 둘러싼 미중대립 등으로서, 그중 남사군도 갈등은 그 심각성에서 최저 수준이다. 미국에게 남사군도는 전력투사를 요하는 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가 빈약하며 중국은 군사적 추방을 위하여 현상유지에 도전할 능력 및 전략적 관심이 미흡하다. 한편 한반도는 미국이 대륙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미국은 기습에 취약한 지상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습 억지를 위하여 핵무기에 의존해 왔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로서 중국이 현상유지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자극할 전략적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탄력을 유지해 왔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력균형 혹은 해상안보와 관련 주요 요소는 아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긴 해안선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철수에 따른 대일위협 및 한중협력은 최저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미국의 안전보장 혹은 세력균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문제 역시 양대 세력의 사활적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동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대만 협력 및 대만의 대중국 거부는 미국의 세력균형 혹은 해운이익과 무관하다. 미국은 중국 연안의 ‘불침항모’ 및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장기적 선택을 상실하더라도 중국 연안 해역에 대한 지배 및 봉쇄 유지를 위하여 일본 및 괌의 미군기지와 동남아의 해군시설을 연하는 접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의 전력투사는 150마일의 확장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1995~96년 위기처럼 이익에 기초한 정책으로부터의 고립적 및 단기적 이탈 혹은 단기적 결과의 수반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 및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은 열강 갈등의 전형에 불과하며 냉전 혹은 열전의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미중 양국은 고도의 긴장 없이 갈등의 적절한 관리 및 광범한 관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²¹⁾

2. 불시적 ‘긴장’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전성’이란 거시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 동안 미중관계는 일련의 시련을 맞고 있다. 양국관계에서의 경쟁적 및 대항적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당면 양국관계는 일종의 ‘소극적 안정’ 혹은 일시적 악화의 상황을 예고한다.²²⁾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미중관계가 위기의 절정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 미중관계는 1995년 5월 미국이 리등후이 대만 총통의 비공식 방미를 허가하고 이어 중국이 주미대사를 소환함으로써 그리고 1996년 3월 미국이 2개 항모전단을 대만으로 파견함에 따라 이른바 ‘제3차대해위기’가 촉발됨으로써 미중관계의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만약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현재 미중간에는 위기의 절정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그리고 더욱 심각한 미중관계의 위기를 조장 혹은 추구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의 위기는 무엇인가?” 사실상 현재 미중관계는 확실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가운데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련의 마찰 및 갈등들은 또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및 건설적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²³⁾

미국 대선공약 제시부터 일련의 사건 발생 이후 상호 응대까지 그리고 최후 정책 암시에 이르기까지, 큰 흐름에서 미중관계는 ‘오리무중’의 경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언행이 세련되지 못한 가운데 매우 공세적이며, 중국은 대응이 보다 신중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세적이다. 이러한 상호 공수 및 진퇴는 교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중관계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

21) *Ibid.*, pp. 111~114.

22) 吳心伯, 前掲書, p. 6.

23) 朱鋒, “歷史的經驗告訴我們什麼?,” http://military.china.com/zn_cn/critical2/20010526.

다. 당분간 미중관계는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의 보수정책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며 설사 부시 행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나머지 현실적 회귀를 시도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기간의 조정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출범 당시 중국에 대한 위세에 비하면 작금 부시 행정부의 언행은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²⁴⁾

국제정세의 다극화 경향 속에서 중국은 전략적 및 경제적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지속적 견지 및 장기계획의 축차적 달성 등에 힘입어 국력의 지속적인 증강이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은 지역적 및 세계적 사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상호 의존적 및 견제적 속성이 보다 현저해지는 상황하에서 중국위상에 대한 전략적 정의 및 미중관계의 합리적 설정 문제는 미국에게 계속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3. 모호적 ‘공존’

미중관계가 세계 및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매우 ‘복잡한’ 쌍무관계로 부각된 가운데, 양국 사이에는 ‘경쟁적’ 요소와 ‘협력적’ 요소들이 병존한다. 그러나 ‘협력’이 더욱 요구됨으로써, 그것은 향후 양국관계를 주도할 것이다. 양국관계 속에서 직면한 문제, 갈등 및 모순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이란 목표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지만, 양국관계는 이미 어떠한 갈등도 감당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경험한 1995년 리덩후이의 방미 및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의 대치는 미중간의 ‘안정’ 형태에서 모종의 이변에 불과하였다. 1970년 초 이후 미중 양국은 상호 긴요이익의 유지를 허용하는 가운데 여타 문제들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만정책을 모색하였다. 당시 중국은 대만의 대미 전략적 자산화 거부와 함께 대만의 독립 및 고립을 방지함으로써 대만주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대대만 안보공약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저지를 달성하는 한편 대만에게 보상적 위

24) “中美關係何去何從,” 『聯合早報』, 2001. 5. 8.

신 제공에 대한 만족 및 국제정치에서의 비주권적 지위 수용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장기적 공식에 기초하여 양국은 이미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²⁵⁾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지지 및 ‘대만독립’ 반대를 재삼 천명해 왔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카드화’ 의도가 분명하나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통일 되지 않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不統不獨)’ 국면의 장기적 유지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중관계를 규정한 ‘3개성명(三個公報)’을 철저히 위반하거나 대대만 관계 발전을 위하여 대 중국 관계를 희생하는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중시 및 경제적 실리 추구에 진력할 것이다. 점차 확대되는 중국시장은 그만큼 미중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매력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미중관계의 성격을 클린턴이 갈망하였던 ‘전략적 동반’ 관계와 배치되는 ‘전략적 경쟁’ 관계로 규정하고 이후 양국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였던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미중관계가 영구적 적대관계로 돌변하였다는 이른바 이분법적 단언들에 대하여 단언 오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중관계는 불가피하게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관계로서, 당면 딜레마의 파생들은 분명히 기존의 ‘상호 전략적 의심’을 심화시킬 것이지만 관계의 ‘저변’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상호작용의 영역들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에게 대중국 접촉은 미국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하여 단절될 수 없다. 양국은 그들을 무한한 인적관계로 결속하는 일련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상업적 및 여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연성력(soft power)’의 가치로 묘사되는 광범한 비정부간 교류는 보다 변화무상한 정부간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투자는 변화무상한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안보 영역에서도 구체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무한하다.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 및 비핵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최근 정찰기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 미중관계는 ‘협력’, ‘경쟁’ 그

25) Robert S. Ross, *op. cit.*, pp. 113~114.

리고 ‘공존’의 요소들을 동시에 전시할 것이다. 사실상 일련의 사건 여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한편 보다 광범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하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의 편차가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호전적 및 적대적 관계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모호 속에서의 공존” 관계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다.²⁶⁾

V. 대한반도 영향과 과제

미국의 대중정책들은 과도한 단순화 도식에서 선택 스펙트럼의 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접촉’ 혹은 ‘봉쇄’ 주장 사이에서 논란이 반복된 가운데 그 주류는 역시 소박한 ‘접촉’의 주장도 그리고 완고한 ‘봉쇄’의 도전도 아닌 각각의 논리적 배경을 구비한 설득력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극단의 타개 및 균형이 유지되어 왔다.²⁷⁾ 미중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구조적 및 역동적 ‘안정성’의 유지, 즉 ‘우호’와 ‘경쟁’ 양단 사이에서의 역동적 ‘균형성’ 모색이란 속성을 구현해 왔다. 즉 중국과 미국은 ‘우의’와 ‘경쟁’ 사이의 어떤 곳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추세는 국제체계의 기본적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그 추세는 방지될 수 없으며 당연히 관리될 것이다.²⁸⁾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 및 그에 따른 여하한 미중관계의 긴장 고조도 지역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非敵非友)’ 불투명한 미중관계에 기초한 보다 융통성 있는 지역판도가 적이 아니면 친구(非敵即友)란 훨씬 삼엄한 이분법적 지역판도로 진화된다면 지역의 안정 및 번영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²⁹⁾

26) David Shambough, "The Inescapable Ambiguity," <http://taiwansecurity.org/News/2001/Asiaweek-042001.htm>.

27) Avery Goldstein, *op. cit.*, pp. 2~3.

28) Peter W. Rodman, *Between Friendship and Rivalry: China and America in the 21st Century*, The Nixon Center (Washington, DC, May 1998), pp. 4~5.

29) “亞太外交新格局展望”, http://military.china.com/zn_cn/critical2/20010525.

1. ‘중립’ 시험

미중관계의 긴장 고조는 특히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충성도’ 시험을 강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막강한 전략적 및 경제적 영향력 앞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의 계속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³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역에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역내 최대 인접열강으로서 지역에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 및 번영에 계속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강요 혹은 규칙 주도를 바라지 않으며, 동시에 미국의 철수 및 그에 따른 중국의 유일 강대국 부상도 바라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역의 안정 및 번영 세력으로 계속 남기를 염원하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긴장 분위기는 이러한 희망들을 점점 상쇄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된 탈냉전 체제 속에서 매우 어렵게 적응하고 있으나 미중관계에서의 새로운 변수들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중립’ 지향을 강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현안들이 ‘미중대결’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는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내 주요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중 양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³¹⁾

한반도 상황과 관련, 미국은 물론 중국 역시 한반도 안보에 적극 기여해 왔다. 사실상 ‘안정’에 대한 고려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배해 왔다. 중국의 정책은 ‘이념’보다 ‘이익’ 및 ‘현실’에 기초하기 시작하였는 바,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한 묵시적 및 명시적 협력, 주한미군에 대

30) 曹雲華, “變化中的中美關係:進退維谷的東南亞”, 『聯合早報』, 2001. 5. 10; “亞洲國家辛苦應對中美新冷戰”, <http://military.china.com/20010521/180577.html>.

31) 陳有爲, “中美關係:從交往轉向交鋒”, 『聯合早報』, 2001. 4. 27.

한 목인 그리고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 망라되었다.³²⁾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불투명한 대미관계 그리고 대만문제 및 미일동맹 등에 대한 우려들과 분리 고려해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비핵화 유지 등에 관하여 공감해 왔다.

중국의 광범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북한이 중국의 맹방도 적도 아닌 오직 이웃일 뿐”이라는 최근의 언급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관심은 이념적 우방의 보호를 초월한 한반도 안정의 유지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한국정책 역시 이익에 기초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대한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방자한’ 평양정권에 대한 유용한 지렛대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신중한 외교를 통하여 대북한 및 대남한 관계에서 ‘균형’ 유지에 성공하였다.

최근 한중관계는 경제교류, 대북전략, 대일인식 등 광범한 공동이익에 기초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었다. 역내 여타 미국의 맹방들과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 세력의 부상에 대하여 가장 적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국력 증강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고조와 때를 같이 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최후 후원자로 남아 있지만 중국의 대북한 군사관계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축소되었다. 한중 양국은 특히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하에서 상당한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도발 억제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긴장완화에 진력해 왔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도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중국도 반드시 한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열강들의 틈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타 열강들을 상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그러나 지배할 만큼 강하지 않는 중국을 환영할 것이다.³³⁾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중국도 미중관계에서 보다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동북아 세력균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함으로써 한국의 기대에서

32) David M. Lampton and Gregory C. May, *A Big Power Agenda for East Asia: America, China, and Japan*, The Nixon Center, 2000, pp. 16-18.

33) *Ibid.*, pp. 18-19.

떨어질 위험이 있다.

2. ‘남북’ 경색

미국의 원대한 지역전략 및 강경한 대중정책은 ‘북한변수’를 매개 혹은 ‘북한위협’론으로 포장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전략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아시아의 도전들이 ‘한반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한국에서 대미생존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지역 및 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 MD계획의 논리적 초점이 ‘불량국가들’, 특히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바,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및 이후의 상황은 이미 미국의 MD 결정을 복잡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렛대 획득을 위하여 북한의 절대적 후원자로 군림하려 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계획과 관련 대북한 개입의 대가로서 중국은 미국의 MD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에게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MD 구상의 주요 구실을 제공하였다는 논리에서 합리적인 흥정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능력의 박탈과 미국 미사일방어의 포기를 연계한 흥정의 가능성은 미국의 외교적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³⁴⁾

부시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대북접근의 원칙으로 철저한 검증과 상호주의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매우 복잡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부시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서의 동의를 보내지 않고 있다.”³⁵⁾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따른 한미 이견 및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그의 남북관계 추진과 연계시킴으로써 그 전망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한을 방문하지

34) Kurt M. Cambell and Michell B. Reiss, "Korean Changes, Asian Changes and the US Role," *Survival*, vol.43, no.1, Spring 2001, pp. 53~63.

35) 래리닉쉬(Larry Niksch), “美는 北 檢證을 願한다”, 『朝鮮日報』, 2001. 7. 4.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한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형철 북한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북미간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면 남북한의 화해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한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정책을 실시하는 한 남북한 관계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경고하였다.³⁶⁾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뉴스위크지와 의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한 향후 남북관계가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매우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실토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및 이후 쌓아온 대화 및 교류의 성과들을 침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한편 미국의 전략문제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관련 협력의 기초를 모색할 것이나 그것이 중대한 긴장의 징조를 보인다면 영향력을 둘러싼 공개적 경쟁 유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³⁷⁾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단극화’의 강화 및 미국 ‘패권’의 약화를 위하여 공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중러 양국이 미국의 MD에 반대하기 위한 연합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미국의 역내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 또한 만약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동조할 경우 미-일-한 체제에 대응한 중-러-북 체제라는 냉전적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³⁸⁾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협력 및 군사 관계 강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000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 회담을 포함한 최근의 공식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의 ‘단극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7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MD의 성격이 단극주의적 군사 및 안보 이익 추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국가

36) 『東亞日報』, 2001. 5. 21.

37) Kurt M. Cambell and Michell B. Reiss, *op. cit.*, pp. 63~68.

38) 『중앙일보』, 2001. 5. 4.

안보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상회담 직전 중국 외교부 사주강(沙祖康) 군축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안보위협을 제거 혹은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및 수단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담 및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밀접한 관계는 대응조치의 공동 개발 및 중국의 대러 군사장비 구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³⁹⁾ 최근 북러 사이에 대규모의 ‘군사거래’설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⁴⁰⁾ 지난 4월 북한은 소련해체 이후 최초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위시한 군사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와 ‘방위산업군사장비분야협력협정’ 및 ‘2001년 군사협력협정’ 등 2개 협정을 체결하고 전투기, 정보수집체계 등 7,000억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⁴¹⁾

미국의 MD 구상을 비롯한 새로운 지역전략이 결과적으로 미-일-한 ‘남방관계’와 중-러-북 ‘북방관계’라는 이른바 ‘편가르기’ 및 ‘줄세우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의 대북방 및 대북한 입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협력’ 위축

동북아는 강력한 경제적 보완성 유지 그리고 쌍무적 및 다자적 경제협력을 통한 각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는 나아가 유관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당연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는 또한 이 지역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자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⁴²⁾ 즉 다자주의

39) Michale J. Green and Toby F. Dalton, Asian Reaction to U.S. Missile Defense, *NBR Analysis*, vol.11 ,no.3, November 2000, pp. 38~41.

40) “俄羅斯出售朝鮮5億美金軍備,” http://military.china.com/zh_cn/news2/20010430.

41) 『世界日報』, 2001. 5. 16.

42)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셋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위원칙 (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유형”을 말

의 발전 및 그것에 대한 증시는 탈냉전 이후 만연된 새로운 안보관념의 요소로 부각되었다. 다자주의는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수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간 동안 동북아 지역은 다자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이 지역의 다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력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한반도 4자회담, APEC, TRACK II 다자안보대화 채널, NEACD 등은 지역 다자주의 발전 및 촉진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원대한 포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국가들은 1989년 창설된 APEC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미 ARF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하였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지역 다자주의 건설에 대하여 회의 및 관망에서 점차 수용 및 개입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다변외교에 대한 관념 및 행위는 큰 변화를 보였다. 중국은 국제 및 지역 다변외교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그것은 이미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동북아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 다자협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⁴³⁾ 중국은 APEC 정상회담에 직접 참가해 왔으며 ‘상해협력조직(SCO)’, ASEM, ARF, 10+3 및 10+1 회의 등 지역 다자활동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왔다. 금년도 APEC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은 일련의 다변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반도 4자회담 개최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 적극 지지해

함. 여기에서 ‘일반화된 행위원칙’이란 특정상황에서의 전략적 필요 혹은 당사자로서의 특정이해와 무관한 유형의 행동과 어울리는 행위를 규정하는 원칙을 말함. 따라서 다자주의는 다수 국가들이 상호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생성된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이란 2가지의 특성을 지님. 포괄적 호혜성이란 Keohane의 특정 양보에 대한 시간적 및 공간적인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는 구체적 호혜성 (specific reciprocity)에 대응되는 개념임. 다자주의는 (1)협력의 촉진 및 (2)안정의 유지 등 2가지의 강점을 발휘함. John G.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Summer 1992); Robert O.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0, no. 1 (Winter 1986) 참조.

43) 張小明, “中國与東北亞地區合作,” <http://www.china.donga.com/2001041200006>.

왔으며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NEACD의 회원국으로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이미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금까지 동북아지역의 다자주의 수준은 상당히 저조함으로써 다자협력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 발전 전망은 현재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 안정 및 번영과 관련 역내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유관 국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미중관계를 포함한 역내 쌍무관계의 긴장은 모두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국제적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등과 유사한 아시아 경제공동체 결성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의존 뿐만 아니라 강대국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⁴⁾ 만약 미중관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새로운 ‘편가르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역내 협력은 그만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VI. 결 론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동향과 관련된 안보환경 및 국제관계의 새로운 양상 속에서, 한국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정위(定位) 및 정향(定向)을 포함한 역할 정의에 모아질 것이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지리’가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균형유지 및 질서창조를 위한 열강들의 능력 및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적 갈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이 극적인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미소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는 사실상 미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극체제’ 그리고 러일을 망라한

44) 『東亞日報』, 2001. 5. 24.

‘다극체제’로 대체되고 있다.

일찍이 국제체제가 미소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다극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는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그 ‘안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구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 바, 국제체제의 ‘안정’이란 관점에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장점들이 합쳐진 그리고 그 단점들이 상쇄된 이른바 ‘양-다극체제(bi-multi polarity)’가 보다 소망스럽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다. 즉 양-다극체제하에서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경쟁적 및 조화적 측면을 내포함으로써 경쟁관계는 순수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향이 희박해지며, 다극화가 진행될수록 ‘동맹’과 ‘중립’의 차이 또한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⁵⁾

현재 아시아에서 어느 열강도 균형유지를 위한 압도적인 능력 발휘의 전망이 희박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균형도 ‘다극적’ 균형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다극적 균형은 냉전시대의 양극적 균형과 달리 일방의 승리가 타방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음으로써 군사력에서의 대칭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극적 질서체제는 전통적 세력균형보다 군사력의 상당한 불균형과 영향력의 광범한 차이를 허용함으로써 위계구조의 색채가 희박해질 것이다. 세력균형 속에서 국가들의 지역적 우위를 결정하는 영향, 관심 혹은 책임의 범위가 존재할 것이나 ‘견제-균형’체계에 의하여 패권의 방지가 모색될 것이다. 가장 야심적인 혹은 공격적인 구성원(들)의 시도는 여타 국가들의 공동 노력들에 의한 견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에서 경제를 포함한 ‘연성적(soft)’ 요소들이 중요성을 더함으로써 세력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중급국가들(middle powers)의 존재 및 부상은 열강들의 정치적 위상 제한을 의미한다. 열강들의 게임에서 중급국가들의 정치적 역량은 최소한 패권에 대한 부분적 견제로 작용할 것이다. 동시에

45) K. W. Deutch & D. Singer,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Free Press, 1969), pp. 315~324; Richard N. Rosecrance,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ames N. Rosenau ed. *op. cit.*, pp. 325~335;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 (서울: 三英社, 1977), pp. 350~367 참조.

중급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이 열강간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가장 잘 보장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한 지역의 지배에 대하여 위협을 느낄 것이며 상호간의 견제 및 균형 조치들을 그들의 안보 및 자주성 조건으로 간주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열강의 세력균형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균형의 유동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상쇄체제를 모색할 것이다. 사실상 열강간의 온건한 경쟁상황은 역내 국가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위협한 열강간의 연합 그리고 침예한 경쟁 혹은 대립의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훨씬 광범한 행동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⁶⁾

따라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만연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불확실한’ 상황 및 우려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내 역학구조의 필연적인 ‘다극화’ 경향 및 미중관계의 필연적인 ‘안정화’ 속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른바 ‘견제-균형’ 및 ‘경쟁-협력’의 구도 속에서 ‘주체성’과 ‘융통성’의 조화적 모색이 보다 요구될 것이다.

46) Paul Dibb,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IISS, 1995, pp. 6~24.

북한의 對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전 현 준(통일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북한의 對서방국가 외교 배경과 목표
- III. 북한과 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 과정
- IV. 북한의 對EU관계 개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 V. 결 론

I. 서 론

2001년 5월 14일 유럽연합(EU)이 대북수교 결정을 함으로써 북한은 EU 15개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의 연쇄적인 수교와 함께 對유럽외교의 大尾를 장식하였다. 북한이 서유럽국가와 수교를 시작한 시기는 스웨덴을 비롯한 9개국과 수교했던 197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북한이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한 이유는 ‘세계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라는 측면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차관도입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차관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은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외에 세계적인 유가파동으로 인해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국가’로 낙인찍히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북한이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나 ‘자본주의화’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김일성이 ‘외화벌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이였다.¹⁾

1) 김일성은 “가공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 나라의 현조건에서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가공공업 발전에 필요한 외화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에 금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의도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무산되었다. 미국이 1950년 6월 28일 대북 ‘수출통제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²⁾ 이후 자본주의국가들의 북한과의 교역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완만한 형태를 띠기는 하였지만 침체가 지속되었다.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자력갱생로선’ 채택에 있지만 자본주의국가들의 대북 경제제재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는 북한의 최종 ‘은신처’를 파괴해 버렸다. 북한경제는 급전직하로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북한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일성 사망, 1995~1997년間に 발생한 자연재해 및 수십만의 아사자 발생은 김정일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³⁾이라는 배수진을 치도록 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경제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1997년부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자본주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⁴⁾ 1997년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경제 연구를 위해 담당관료들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

필요한 외화문제를 해결하자면 유색금속생산을 늘여 그것을 수출하는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시장에서 유색금속, 특히 금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금을 많이 캐서 자본주의시장에 내다팔면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필요한 외화를 얼마든지 벌수 있습니다. 금을 캐서 팔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멸망하기전에 금을 많이 캐서 팔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중요유색금속광산지배인및모범로동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93.

- 2)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국신, 『클린턴행정부와 의회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3 참조.
- 3) ‘고난의 행군’은 1939년 김일성이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하면서 사용된 구호였으나 김정일이 1995년 대홍수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자 주민을 통합하기 위해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재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1998년부터 ‘사회주의강행군’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4)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줄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김정일체제의 지속과 변화』 (고려대학교북한학연구소 창립 3주년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5. 4), pp. 12~15 참조.

류하고는 있었지만 미국은 북한을 ‘책임있는 세계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자본주의학을 묵인하였다.

경제난 극복이 체제생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 김정일은 1998년 8월 22일 ‘강성대국’론⁵⁾을 제시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김정일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1970년대 중반이후 소원해졌던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 1999년 9월 백남순 외무상은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UN에서 서방국가 외무장관 및 차관들과 수교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였다.⁶⁾ 물론 그 배경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사일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우회통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對EU와의 관계개선 노력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금년 5월 14일 EU의 대북 수교결정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북한과 EU간의 수교는 지속되었고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의 남북한 중재 역할로 인해 EU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할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세계혁명력량과의 련대성 강화’ 전략의 성공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인가? 북한과 EU와의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미국은 EU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를 좌시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 답하기 위해 북한이 EU와 관계개선을 서두른 배경이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북한-EU관계가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5) 이에 대한 북한측의 자세한 설명은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참조.

6)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1999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54차 UN 총회에 참석, 20여개국의 대표와 회동했는데, 유럽지역의 덴마크·이탈리아 외무장관 및 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노르웨이 외무차관과 회담하였다. 『연합뉴스』, 1999. 9. 29.

II. 북한의 對서방국가 외교 배경과 목표

1. 자주외교 확대

북한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모인 29개국이 중립주의와 비동맹 문제를 토의한 소위 ‘반둥회의’를 기점으로 대외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배경에는 물론 1953년 스탈린 사망으로 사회주의권내의 국제적 세력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전판을 마련하고자하는 김일성의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에 발표한 ‘사상에서의 주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에 대한 경계도 많이 하였다.⁷⁾ 그 이유는 스탈린 비판 운동의 북한내 침투를 우려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김일성의 우려는 1956년 ‘8월종파사건’으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외교대상의 확대방침은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희미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일성은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국가들의 평화애호적대외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체계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평화적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강화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우리당은 앞으로…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사이의 평화적공존에 대한 레닌적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권에 립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관계와 실무적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

7) 김일성은 “쏘련의 형식과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투쟁경험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박영빈의 ‘평화공존론’을 극한적으로 공격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저작집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75~478.

니다”⁸⁾

이후 북한은 소련·중국 및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진영외교’로부터 탈피, ‘인민외교적’ 차원의 외교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전까지는 서유럽의 공산당에만 관심⁹⁾이 있었던 북한은 1957년부터 서유럽국가 자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 당국제부 산하에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창설하였고, 1958년 아프리카의 중립국인 알제리아와 기니 2개국과 수교하였다. 이와 함께 1950년대말이나 1960년대 초부터 북한은 서유럽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 각종 공업제품과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차원에서 영국, 스웨덴, 서독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 무역관계는 더욱 촉진되어 60년대말경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 북한의 민간무역대표부가 설치되었다.¹⁰⁾

북한이 대내·외정책 수립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게된 주요요인은 한국 전쟁에서의 쓰라린 경험, 전후 독재정권 강화 필요성,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국원조의 감소, 對중·소 균형외교 필요성 등 때문이었다.¹¹⁾ 물론 북한이 주체를 강조했다고 해서 소련과 중국을 경원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중심의 강대국 의존외교는 결국 강대국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김일성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제3세계에 대한 외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동시에¹²⁾ 상대적으로 패권주의가 약한 서유럽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1956년 4월 23일),” 『김일성저작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82~183.

9) 김일성은 1948년 제2차 당대회에서 “서구라파 여러나라의 공산당들은 로동계급과 전체근로인민의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강력한 정당으로 되었으며 서구라파민주력량의 선봉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48년 3월 28일),”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02

10) 박재규, “북한의 대서구정책,” 고병철 외,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극동문제연구소, 1977), p. 106; 한중수, “북한의 대유럽정책,” 양성철·강성학,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 306.

11) 정진위, 『북방3각관계』 (서울: 법문사, 1987), pp. 30~31.

12)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정책은 줄 저, 『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정책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년 8월) 참조.

물론 1964년에는 소위 ‘3대혁명력량강화’를 대내외정책 기조로 공표¹³⁾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서유럽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상 특징은 우선 민간무역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민간친선협회를 결성하고,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을 초청 또는 방문함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다음 국교를 맺는 형식을 채택한다. 그 결과 북한은 1971년 말타와의 수교를 필두로 1973년에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수교하였고, 1974년에는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와, 1975년에는 포르투갈과 수교하는 개가를 올렸다. 더불어 1975년에는 남한을 제치고 비동맹회의 회원국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교국과의 관계는 원만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서유럽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체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남한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서구로부터의 외채증대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미해결은 채무국과의 마찰을 일으켰고 중국에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더구나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마약밀매와 밀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1976년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북한 대사관원 전원을 추방하였고, 북한은 핀란드와 스웨덴 북한대사관을 자진 폐쇄시켰다.

서유럽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한 이유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데탕트 무드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3년 ‘6.23선언’ 발표 등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국가들의 정치적 자유분방함도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상한’ 행동은 결국 서유럽국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필두로 북한과 EU간에 급류를 타듯이 수교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1970년대 초반처럼 1998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3)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49.

2.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획득

김일성이 ‘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7년부터였다.¹⁴⁾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외화벌이’를 본격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였다. 그 이유는 1949년부터 시작된 ‘2개년인민경제계획’ 완수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였다.¹⁵⁾ 김일성은 북한에 매장된 다양한 유색금속 즉, 금이나 아연 등을 팔아 외화를 획득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전쟁중인 1952년에도 외화가 강조되었고, 1953년부터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외화벌이’가 강조되었다. 이후 매년 김일성은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외화벌이’를 위한 김일성의 관심은 당연히 서방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김일성은 1947년부터 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처럼 ‘대외무역’에 대해서도 1947년부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자본주의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북한이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¹⁶⁾을 수행하는 기간이었다. 1965년에 내린 김일성의 ‘교시’에는 애절함까지 배어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자본주의 시장 개혁과 시장다변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와의 교역과 자력갱생 노선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주목된다.

“우리 나라 대외무역에서 주요한 결함의 하나는 사회주의시장에만 진출하고 자본주의시장에는 얼마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오

14) 김일성은 “물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름은 질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 팔면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외화’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명하였다. 김일성, “평양곡산공장 노동자들앞에서 한 연설(1947년 4월 19일),” 『김일성저작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27.

15) 김일성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설비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러자면 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금을 많이 캐서 자본주의시장에 내다팔면 기계설비를 사오는데 필요한 외화를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유색금속광산부문일군들의 과업(중요유색금속광산지배인및모범노동자대회에서 한 연설 1950년 2월 21일),”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93.

16) 그러나 이 계획은 군사비의 과다지출로 인해 1970년에 끝났다.

직 미제놈들만이 악질적으로 우리 제도를 반대하여 봉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원래 대외무역에서 한두개 나라에만 치우치면 여러가지 폐단을 가져올수 있습니다...대외시장을 넓히며 특히 자본주의시장에 널리 진출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¹⁷⁾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970년대는 서유럽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형국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경제는 과다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제1차 대외개방을 시도하였다. 즉, 서방세계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필요한 물품의 수입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외화벌이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자본주의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려면 외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외화가 없이는 자본주의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올수 없습니다.”¹⁸⁾

위와 같은 논리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 개척과 함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프랑스, 서독, 스웨덴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15%에 불과했던 對서방무역이 1974년에는 對공산권무역과 거의 같은 42%에 육박하였고, 1975년에는 비공산국가와의 교역이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능가하였다.

17) 김일성, “당사업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년 11월 15~17일),”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154~156.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2년 10월 23~26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487~488.

<표 1> 북한의 차관도입현황

(단위: 만달러)

연 도	OECD 국
1970년	300
1971년	1,700
1972년	20,400
1973년	37,500
1974년	40,000
1975년	24,300
1976년	-

아울러 김일성은 ‘6개년계획’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사업방법뿐만 아니라 1973년에 이미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 문제까지 ‘교시’하였다.

“지금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에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물물교환의 형식으로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주의시장에도 널리 진출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아직 우리 상품의 질이 높지 못할뿐 아니라 우리의 무역부문일군들이 장사를 잘할줄 모릅니다. 우리 나라에 외화원천은 많습니다…우리 나라의 금강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앞으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더 잘 꾸려야 합니다.”¹⁹⁾

김일성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부진을 질타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의존에서 탈피하고 자본주의 시장개척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19) 김일성, “제일 조선상공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제2차제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과 한 담화 1973년 1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93~594.

“대외무역과 외화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였는데 앞으로는 제3세계나라들,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에게 필요한 외화를 많이 벌기 위하여서는 제3세계시장과 자본주의시장에 적극 진출하여야 합니다.”²⁰⁾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생독립국가들과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우리는 사회주의시장에 계속 의거하면서 자본주의시장에도 적극 나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사와야 합니다.”²¹⁾

“우리는 무역에서 일면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시장뿐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과 제3세계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하면 여러가지 좋은 물건들과 원료를 사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²²⁾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자본주의 무역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의 근본적 모순, 국제적인 유가파동, 북한 외화가득 원천인 비철금속의 국제가 하락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한은 <표 2>에서 처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채무 불이행(default) 선언’을 하였다.

20) 김일성, “제2차7개년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계획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7월 10~11일),”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355.

21)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134~135.

22) 김일성, “올해 농사를 잘 계속지으며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6월 22~23일),”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215.

<표 2> 북한의 對서구 채무현황

(단위: 백만불)

국 별	채무총액
프 랑 스	162
서 독	125
스 웨 덴	130
오스트리아	90
영 국	60
네델란드	70
핀 란 드	19
스 위 스	32
이탈리아	20
덴마크	7
벨 기 에	4

* 1976년말 현재

한편 1980년대 들어 김일성은 ‘합영법’ 채택이전에 대외무역의 다각화를 강조하였고 특이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환경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를 내린 점이다. 아마 김일성은 ‘합영법’을 통해 대외 개방을 시도하면 자본주의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 같다.

“나는 요즘 우리 나라 대외무역이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주되는 원인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데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그전에는 우리가 자본주의시장에 진출하려고 해도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수 없었지만 그런 장애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²³⁾

23) 김일성,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무역

그러나 북한의 대외 신용도로 하락은 1984년 공표된 ‘합영법’마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은 필수적임을 인식했던 것 같고,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시장 상실 이후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1990년에는 ‘무역제일주의’²⁴⁾를 주장했다. 이후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 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특구’ 지정 직전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 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시하는 한편, 합영합작까지 지시하고 죽었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방법을 고쳐야합니다...지금은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²⁵⁾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경제 합작과 합영도 하여야 합니다...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합영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 기본목적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자금을 리용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과 자금을 대게 하고 기업관리는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하여야 하며 될수록 많은 리윤을 얻도록 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합니다.”²⁶⁾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3월 13일),”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34~236.

- 24)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1차회의, 정무원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28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35.
- 25)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일, 26일),” 『김일성 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30~233.
- 26)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연합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III. 북한과 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 과정

1. 북한의 관료에 대한 자본주의교육 확대

김일성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자본주의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관계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현시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자본주의시장을 대상하여 무역을 할수 있는 능력있는 무역일꾼들을 많이 늘이는것입니다…우리는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본주의나라들과 능란하게 무역을 할수 있는 준비된 무역일꾼이 많아야 합니다…가만히 앉아서 합병, 합작 대상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졌다고 걱정이나 하여서는 언제가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²⁷⁾

북한으로서는 사상적 침습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학습할수 있는 대상을 서유럽국가로 본 것 같다. 특히 ‘흡수통일’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던 독일과의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통독직후인 1991년 북한이 독일에 무역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본주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인 것으로 보인다.²⁸⁾ 그 이유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지원 아래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 연수를 시작한 시기가 지난 1997년께 부터였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은 주로 미국, 호주,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중국, 헝가리 등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27) 김일성, “현시기 정부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2년 12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28) 이하의 사건들은 『연합뉴스』에서 추출한 내용들이다.

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는 200여명 정도였다. 1997년 UNDP의 지원하에 최초로 경제관료 15명을 중국 상하이에 파견했고, 동년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2명의 관료를 파견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매년 10여명의 북한외교관들이 스위스 '다자협상실습연구소(CASIN)'에서 자본주의 연수를 받고 있다. 1999년에는 UNDP의 지원하에 109명이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방법, 사유재산 개념 등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았다.

한편, 북한시장경제 연수단은 대체로 선진국의 대학이나 정부연구소에서 마련한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 연수단은 연수대상국 정부가 마련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2월에는 '나진선봉특구'내 나진기업학교 교원 14명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보내 기업회계, 재정, 경영, 재무관리 등을 익히도록 했다. 1998년 7월에는 경제전문가 27명을 세계적인 금융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중부유럽대학'에 3주간 파견, 국제금융동향을 배우도록 했다.

북한관료 10여명은 1999년 9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아시아재단'과 미국 뉴욕대학이 공동 후원한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거래 분쟁시 중재방법, 외국기업에 대한 건물 및 토지임대 요령, 국제거래법 등을 학습하였다. 1999년 4월에는 5명의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 등을 순방하면서 수력과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을 체득하였고, 농업분야 전문가 몇 명은 2000년 7월 중순부터 핀란드 트르나바 감자연구센터에서 다수확 품종 감자재배법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체재비 10만 마르카(1,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00년 1월말 호주 에너지사업 대표단을 초청, 북한의 전력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11월에는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산업·무역장관을 초청하였다.

2001년들어 북한은 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들이 1월 말부터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방문하였고,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럽연합 경제협력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농업과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활동을 벌였으며 스위스-스웨덴계 산업설비 생산

업체인 ‘아세안 브라운 보베리(ABB)’ 그룹 대표단이 1월 9일부터 1주일 간 평양을 방문,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기로 합의하였다.

2월 24일 전승훈 금속기계공업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대표단이 이탈리아 방문하였고, 미국의 『스탠리그룹』 초청으로 지난 2월27일 내각의 무역성과 재정성 등 5-7명의 관리들이 방미하였다. 김봉익 무역성 부상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2월 28일부터 6일간 이탈리아를 방문, 자동차, 섬유 분야에 대한 투자상담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2. 북한과 EU간 관계 개선

북한은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의 수교²⁹⁾를 필두로 2001년에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델란드 등 6개국과의 수교가 성사되었고 5월 14일에는 EU가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록 G7국가 중 최초로 이탈리아와 수교를 했지만 다른 EU국가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북한과 독일과의 수교 의미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과 EU간 수교의 의미를 고찰해 보려 한다. 북한과 독일간 수교는 여타 EU국가들과의 수교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시 ‘파격적인’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활동하는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②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지켜볼 자유 보장, ③ 북한내 독일기자의 활동편의 제공 및 원칙적으로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 ④ 북한측과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문제를 망라한 군비관리 논의 등이다.³⁰⁾

29) 이탈리아는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과 수교하려 했으나 북한이 반대하였고, 1991년 UN가입 이후에는 북한이 수교하려 했으나 이탈리아가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이탈리아가 G7국가들중 최초로 북한과 수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김일성이 1948년부터 이탈리아공산당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한 점, 이탈리아 정계의 좌파적 분위기, 1970년대이후 수십차례 북한과 접촉한 이탈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의 헌신적 역할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 카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후 최초로 조문한 서방인이었다. 『연합뉴스』, 2000. 1. 5.

30) 3월 2일 주한 독일대사관은 독일과 북한간의 1일자 수교를 확인하면서 4개항의 합

<표3>북한-서유럽(EU포함)수교현황

국 가 명	수 교 일
말 타	1971. 12. 20.
아이슬란드	1973. 5. 21.
덴마크(EU)	1973. 5. 21.
스 웨 덴(EU)	1973. 5. 25.
핀 란 드(EU)	1973. 6. 1.
노르웨이	1973. 6. 22.
오스트리아	1974. 12. 17.
스 위 스(EU)	1974. 12. 20.
포르투갈(EU)	1975. 4. 15.
이탈리아(EU)	2000. 1. 4.
영 국(EU)	2000. 12. 12.
네델란드(EU)	2001. 1. 15.
벨 기 에(EU)	2001. 1. 24.
스 페 인(EU)	2001. 2. 7.
독 일(EU)	2001. 3. 1.
룩셈부르크(EU)	2001. 3. 5.
그리스(EU)	2001. 3. 8.
프 랑 스(EU)	미 수 교
아일랜드(EU)	미 수 교
EU 수교결정	2001. 5. 14

* 2001년 5월 31일 현재

상기 합의 내용은 그 동안의 북한 행태에 비추어 매우 전향적인 조치들이다. 북한이 독일과의 수교에서 전형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과 독일간 역사적 관계와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념·정치·경제적으로 선린우호관계에 있었던 舊동독 붕괴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북한은 통일독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통독후 최초로

의 사향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01. 3. 2.

1991년 1월 24일부터 경제무역대표단을 독일에 파견하였다. 북한대표단장은 대외무역부 부부장 김정우였으며 방문 목적은 독일당국과 수출보험 재개 문제, 무역 및 경제관계 확대, 외교관계 수립 협의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핵협정 가입문제, 독일의 대남한 관계 고려 등으로 인해 북-독 수교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북한 핵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던 북한과 독일 관계는 1994년 11월 독일 기업대표단의 북한방문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구동독과 맺은 40~50개의 협정 복원과 공식수교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9년부터 백남순 외무상을 필두로 대유럽 외교에 매진하였고 동년 UN총회를 계기로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포함, 20여개국 대표들과 회담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수교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쉬뢰더(Schroeder) 독일 총리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회의 기간 중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향을 표시하였고, 독일 정부는 북한의 수교요청을 받아들여 2001년 1월 24일 각료회의를 통해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승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 독일은 2월 26일부터 베를린에서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장과 독일 외무부 관계자간에 수교협상을 벌였다. 수교협상시 독일은 북한 측에 외교관 및 구호단체 요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독일의 요청을 수락, 3월 1일 수교협상이 타결되었다.³¹⁾

북한과 독일이 수교한 의도는 각각 다음과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정치적 의도로서 EU의 중심국가이면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독일을 활용,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시 도움을 받는 한편, 북미 수교협상시 독일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줌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앞당기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31) 북한은 3월 1일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북-독수교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도이쉴란드련방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은 자주성의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 나가며 호상관심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1. 3. 1.

경제적 의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脫 중·소외교’ 차원에서 舊동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동독은 각종 경제분야에서 대북 지원을 하였다. 동독은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CMEA) 회원국들 중 구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었으며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주된 차관제공국이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산업시설의 상당부분은 동독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 또는 지원된 것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은 물론 구동독 기술자들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과 수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통독이후 독일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관계 유지도 수교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1995년 2월 북한과 청산결거래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6년부터 평양에 티센, 지멘스, 바이멜, BASF, 메르세데스 등 17개기업이 ‘동아시아협회(OAU)’를 결성, 장기투자에 대비하고 있고, 2000년 10월에는 ‘북한-독일 기술 및 과학센터’가 설립되어, 북한 기술자들에게 선진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있다.³²⁾

둘째, 독일의 의도는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독이후 독일은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등 EU의 중심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양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舊동독과의 인연을 매개로 대북 투자에 대한 선점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독일은 1992년 현재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국가차관은 미국의 6천여만 달러보다 많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對독일 신뢰도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³³⁾

32)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 중 EU국가로서는 독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2000년도북한의 대외무역동향』(2001. 6. 2) 참조.

33) 북-독 수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성,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7』(2001. 4) 참조.

IV. 북한의 對EU관계 개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1998년 8월 ‘강성대국’ 건설 표방이후 적극적인 대서방 외교 특히, 對EU 관계개선에 매진하였는 바,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EU 15 개국 중 13개국과 수교함으로써 폐쇄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북한과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권장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EU간 관계개선이 크게는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보다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국간 회담 재개 가능성 제고

스웨덴의 페르손(Goran Perrson) 총리는 방북후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 확정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겠다”라고 언급했음을 확인하였다.³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은 EU의장국인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공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비록 페르손 총리에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EU-북한간 관계 개선이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남북관계는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면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고 특히 남한의 대북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남한의 대북정책은 금강산관광사업이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에서 보듯이 대북지원이 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남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중심으로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중국, 러시

34) 『연합뉴스』, 2001. 5. 3.

아, 일본 등 이해당사국들의 대한반도 정책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정책선택도 주변국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과 EU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은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³⁵⁾

물론 현재까지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EU의 역할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EU의 한반도 문제 개입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도 EU의 대한반도 정책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³⁶⁾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기본적으로는 대북포용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⁷⁾ 이러한 이유에서 EU의 한반도정책은 남북대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경제협력 관계 회복 계기 부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금년들어 IT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조선컴퓨터센터(KC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관련 영재교육을 위해 금성 제1, 2고등중학교 및 각 지방의 제1고등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료는 물론 전주민들에게 정보기술 실력배양을

35)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8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 방문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므로 반대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월 27일 한-러 정상회담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36) 페르손 총리도 ‘미국을 의식’하여 방북목적은 북한-EU관계 개선으로 한정하였고, 미국은 페르손 방북전에는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다 북한의 2003까지 미사일 유예 약속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5월 14일 북한-EU간 수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2001. 5. 15.

37) 현재까지 미국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환영(5.30), 북한의 TCOG 참여 허용(5.29), 페리 前대북조정관 북한방문 가능성 등 대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독려하고 있다.³⁸⁾ 이와 관련 EU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북한 관료들에 대한 자본주의교육도 약속하였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 등은 이미 북한대표들에게 어학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빈도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방의 최신정보 및 기술, 자본 등이 필수적인 분야로서 서방국가들의 도움없이 북한이 ‘자력갱생식’으로 경쟁력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EU국가들의 대북 경제지원은 남북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 각종 기술 및 자본 지원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EU의 대북지원은 국내경제 침체 및 여론의 양극화로 인해 대북 경제지원이 곤경에 처해 있는 남한에게 ‘국제 콘소시엄’ 구성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상 북한이 ‘불량국가’로부터 해제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진출도 이에 상응하여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펜티엄Ⅲ급’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³⁹⁾ 미국의 대북 기술제제가 별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IT산업 관련 남북경협이 요원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3.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협력 증대 가능성

EU는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38)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5월 19일 “과학전, 정보전의 세기가 도래했다”면서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21세기 정보전을 위해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1. 5. 19.

39) 『조선신보』, 2001.5.17.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펜티엄Ⅲ’ 생산 기술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1. 5. 18.

40) 금강산 국제그룹 회장인 박경윤씨는 남한의 『하나비즈』와 북쪽의 『평양정보센터』를 묶어 IT분야의 첫 남북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만들었음. 『한겨레신문』, 2001. 5. 21.

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에게 밀려 UN인권위원회에서 탈락되고,⁴¹⁾ UN마약통제위원회 등에서 제외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EU가 UN이나 여타 국제기구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적 경쟁’ 관계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특히 1973년 이후 남북한은 한반도내 유일 정통성 확보를 위해 UN을 무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거의 사생결단에 가까운 남북간 대결은 1991년 UN동시가입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경쟁이 종식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일회적으로 1991년 남북탁구단일팀 및 청소년축구단일팀이 구성되어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있지만 국제정치분야나 국제경제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이룬 경험은 거의 없다.⁴²⁾

그러나 EU의 역할 증대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IMF, ADB, IBRD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용이해 질 것이고 이 경우 남한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된다.⁴³⁾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북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EU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만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성공한다면 남북한간 협조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간 경제협력도 증대될 것이다. 경제적 비용 문제로 인해 대북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고 이를 통해 경의선 및 경원선 복원, 대북 SOC 지원 등이 달성된다면 남북연합단계 진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41) 미국은 지난 5월 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위원회 선거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에 이어 4위를 해 서유럽 및 북미지역에 배정된 3석내에 포함되지 못했다.

42) 남북한 외무장관은 2000년 7월 26일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ARF외무장관회의에서 회동,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남북 재외공간의 상시협의 채널 구축, 외무장관회담 정례화 등에 합의한 바가 있다. 『연합뉴스』, 2000. 7. 26.

43)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하고 북한의 IMF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IMF가입 이전에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한은 가능하면 북한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고 돕고 있는 입장이다. 진년 부총리는 지난 5월 10일 제34차 ADB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ADB가입을 촉구하였다. 『연합뉴스』, 2001. 5. 10.

4.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등장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주로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예상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47년부터 ‘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자본주의와의 무역을 수많은 ‘절대적 교시’를 내렸으나 경제난 타결은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 수령유 일지배체제 및 주체사상 고수, 인민들의 사상적 이완 우려 등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89년에 ‘모기장’론을 제시하였다.⁴⁴⁾ 이것은 사회주의권 붕괴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지나친 유입으로 인해 ‘우리 식 사회주의’ 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그는 현재 북한변화의 중심에 서있으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IT산업 육성까지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고수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김일성과 같은 ‘자본주의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자들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무역방법을 허용하면 사회주의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후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여러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가끔 자본가들과 거래하고 외화를 망탕 쓰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대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될수 있습니다…누가 돈을 희사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덥석덥석 받다가는 우리의 사상과 조국까지도 팔리울수 있습니다…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사람이 돈맛을 들이게 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기마련입니다…”⁴⁵⁾

44) 김일성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을 관찰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89년 6월 7~9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2.

45)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찰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8~11.

이외에도 김정일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옹위를 강조한 대표적인 문건으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등이 있다. 이러한 문건들이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하기전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⁴⁶⁾ 결국 김정일의 이러한 자본주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나 EU의 중재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구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불신은 더욱 심화된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남한경제의 침체, 국민적 합의도를 곤란, 미국의 자국중심의 한반도 전략 등이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란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주변국의 도움은 받되 자체적으로 10년 내지 20년 후를 예상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북한이 서유럽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말로서 ‘주체적’인 외교를 시도한 때 부터였다. 주로 서유럽국가내의 공산당이나 사회당들과의 연계이기는 하였으나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유럽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증오심’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경제발전 계획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 그리고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북한은 서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상정해 왔다.

북한이 서유럽 외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다. 북한은 경제발전계획 달성을 위해 서유럽으로부터 차관을

46) 가장 최근의 사회주의 교수 천명은 지난 5월 27일이었다. 『조선중앙방송』, 2001. 5. 27.

도입하였고, 몇몇 국가와 정식수교도 달성하였다. 특히 그 대상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이었다. 1970년대는 북한의 對비동맹외교도 활발했던 시기였고, 1975년에는 비동맹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불황과 겹쳐 서방세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방세계는 북한을 불신하게 되었고, 북한과 서유럽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경제발전을 위해 ‘합영법’을 채택하고 1991년에는 ‘제한적’ 개방을 시도하였으나 서방세계는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그 이유는 북한수령체제에 대한 불신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시장상실, 연속된 대홍수 등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였다. 경제적 난관은 민심동요를 유발하였고 김정일 정권 및 주체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위기탈출을 위해 김정일 정권은 국제사회의 구호를 요청하는 한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고 주민들의 이동이나 상행위를 묵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단기간내에 성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적극화하는 한편 對유럽외교에 외교역량을 집중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1998년 대북포용정책을 채택한 김대중 정부가 남한에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對EU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시작하였다. 1999년 9월 백남순 외무상은 UN을 무대로 유럽외교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월 G7 국가들 중 최초로 이탈리아와 외교관계를 맺는 개가를 올렸으며 2001년에 들어서는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운 공화당 정권의 등장은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경색시키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을 ‘불량배’로 보는 정도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큰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된 이후에나 남북관계를 고려할 것임을 내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는 5월 2~4일까지 북한과 남한을 동시 방문, 남북간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물론 현재까지는 페르손 총리의 중재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EU회원국들과 북한과의 수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EU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지만 미국도 대북포용정책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고, 북한도 남한과의 관계개선이외에는 경제난 타결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EU의 중재는 머지않아 과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오 기 성(서울대학교)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한 문화의 다름
- III.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
- IV.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 V. 결 론

I. 서 론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 문화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과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¹⁾는 당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한 문화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주로 70년대에 남북한 냉전체제하에서 정립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북한 문화에 있어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

1)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서울: 통일부, 2001), p. 4.

질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이질적 측면, 즉 ‘다름’일지라도 양자의 화해협력과 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선 그 동안 논의되어온 남북한 문화의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 통합에 있어 이질성의 부정적 기능이라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화해협력과 통합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남북한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을 분석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같음, 부정적 같음, 부정적 다름의 논의는 제외된다.

본 논문은 남북한문화의 분석을 위해 톰슨의 문화에 대한 구조적 개념을 토대로 김정동의 인지적 경험문화, 심미적 표출과 감상의 문화, 평가적 규범의 문화로의 분류를 원용하였다.²⁾ 이를 남북한 문화의 하위구조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예시될 수 있다.

인지적 경험문화	상징적 차원	이념과 문화관, 언어, 종교
	외현적 차원	의식주생활문화와 산업화에 관련되는 물질문화
심미적 문화	상징적 차원	문학 및 예술의 주요 가치지향
	외현적 차원	문학, 미술 및 공연예술의 형태, 문화향수 실태
규범문화	상징적 차원	공식적 가치와 관련된 도덕규범과 이상적 인간상
	외현적 차원	비공식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적 태도

이러한 문화의 분석 틀은 문화를 예술로 치환하거나 등치시키는 오류를 벗어나게 해 준다. 또한 문화가 정치이념적인 영역과 완전히 분리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반대로 정치이념을 포함하는 인지적

2) J. B. Tompson,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p. 148; Jeffrey C. Alexander and Philip Smith,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Agency*, Vol.22, No.2, (1993), p. 156; J. V. Baldridge, *Sociology* (M.Y.: Wiley, 1975), p. 81; 김정동, 『현대의 사회학』(서울: 박영사, 1997), pp. 41~47 참조.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이 심미적 및 규범문화에 대해 기계론적·단선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을 남북한 문화의 분석에 적용할 경우 문화를 단순히 예술로 치환하는 것을 넘어 예술은 심미적 문화로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이외에 의식주 생활문화, 이념, 규범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징적 및 외현적 차원으로서의 구분은 특히 북한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지향에 기초하여 문화가 발현되는 측면과 아울러 이념이나 가치지향에 기초한다고 해도 그 투영 정도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찰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의 분석 틀을 토대로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문화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문화의 다름

1. 다름을 보는 시각

현재 국내에서는 남북한의 문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두 갈래의 인식이 쟁점화되어 왔다.³⁾ 그 하나는 민족내의 이질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이다. 이 같은 인식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사상체계가 동족간에 위화감과 이질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동일 민족으로서의 정체意識이 사상이나 이념 등으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수 천년 동안 이어온 민족적 동질성이 단기간 내에 변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견해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견해의 근거를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건설한 점에서 찾고 있다. 즉 남북한 문화의 극심

3) 박상천 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pp. 13~15 참조.

한 이질화, 다름의 초래는 전적으로 북한이 주도하였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굴절된 문화를 전개해 온 북한의 문화를 온전한 남한의 문화가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5000여년의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화와 비교해 볼 때 50여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분단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질화는 그 동질성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화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강하며 따라서 동질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통일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논리가 지닌 공통점은 5천년의 역사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50여년 동안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오는 동안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문화 부분은 동질성(전통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 이질성이 문화를 포함하는 다른 여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 즉 다름의 형성은 남과 북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모습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근대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이건, 사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달라졌다.⁴⁾ 즉 남과 북이 다름의 측정을 남한의 현대를 잣대로 삼는 까닭에 모든 다름은 북한의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름의 상대성을 망각하거나 무시하여 북한의 상대적 다름을 반공논리로 절대화하게 된다면, 북한 사회의 다름은 실제의 두배로 환상적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어떤 면에서 남한이 민족의 전통적 특수적 고유의 생활양식이나 풍습 가치관 등으로 포기한 측면이 많

4)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1993. 9. 23), pp. 5~

6;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p. 141.

은 것을 볼 때, 북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감각하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로 남한 사회가 변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현상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 관습, 그리고 전통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적 지식을 초월한다. 이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사회적 유산의 일부가 된다.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마련된다. 제도는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의 복합체이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 세계안에서 나는 다른 개인과 언어 그리고 기타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나누는 바, 이것이 곧 문화이다. 일상어의 낱말과 어구는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지식이 전파되는 정형화의 매체이다.⁵⁾ 따라서 생활세계는 ‘활동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다.⁶⁾ 비록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활세계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한 문화현상의 전개를 현상학의 생활세계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우리는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생활세계와 분단 이후의 남북한간의 생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분단 이전의 생활세계는 한민족이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형성했으며, 풍습, 관습 및 전통적 행태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문화의 하위구조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단 이후의 단절된 생활세계는 양측의 지향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상이한 사회제도를 형성시켰고 이는 다름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즉 체제상응성이 없는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 의해 하위문화가 채색됨으로써 다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이 각각의 하위 문화들에 대해 채색되는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상징적 차원이 외현적 차원에 기계론적으로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 동질성의 단서가 된다. 후자의 경우는 이념과 체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같음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

5) 차인석, 『사회인식론: 인식과 실천』(서울: 민음사, 1992), pp. 113~116 참조.

6)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p. 7.

적 차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긍정적 다름의 요소가 추출될 수 있다.

2. 다름의 실제⁷⁾

남한의 사회체제는 대체로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를 기초로 남한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에의 접근기회를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증가시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문화지원정책이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실질적인 문화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한에서 문화의 목표는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제시되기보다는 체제 자체의 자율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문화는 국민의 공동체意識의 함양, 국민 정서의 순화를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의 제도,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순수예술론의 관점에서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⁸⁾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그리고 이에 토대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문화는 대체로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메카니즘의 측면에서도 김정일의 문예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와 내각의 문화성이 있다.

7) 남북한 문화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서울: 통일원, 1998), pp. 37~45;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221~278 참조.

8)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pp. 53~55.

따라서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과 관련하여 남한에서도 문화 관광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에서도,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또한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인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1) 인지적 경험문화

우선 인지적 경험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 볼 때, 남한은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⁹⁾가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고, 되도록 문화현상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특징으로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수령과 노동당이 문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여 집행해 왔다. 여기에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남한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북한에서는 중앙권력, 특히 1인 중앙집권의 경향을 지님으로써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양 체제의 다름은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어의 경우 남북한의 언어관은 크게 다원주의적 사고와 일원적 사고, 또는 이성관에 바탕을

9)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는 김경동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어떤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힘의 배분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민주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변화의 우선 순위와 수단을 설정할 것이고, 또 다른 사회는 일인 또는 소수의 전체적 지도자에 의한 과두적 결정유형으로써 하게 될 것이다. 이 양극의 가운데는 갖가지 민주적인 조직원리로부터 권위주의적인 것에 이르는 유형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서울: 나남, 1994), pp. 87~89.

둔 서구적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에서 이 질성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어휘분야, 특히 정치적 용어의 차이는 심하다. 이외에 남한에서는 산업화, 개방화와 함께 수많은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북한에서는 어휘에 이념이 내포되어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였다.¹⁰⁾

2) 심미적 문화

인지적 경험문화의 다름은 심미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은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 보장을 큰 장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외현적 차원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현실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여 문학예술적 형식과 내용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덕주의와 유미주의는 때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주도로 상징적 차원이 이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김정일의 『영화예술론』(1973.4), “연극예술론에 대하여”(1988.4), 『무용예술론』(1990.9), 『음악예술론』(1991. 7), 『건축예술론』 (1991.10), 『미술론』(1991.10), 『주체문학론』(1992.5)이 상징적 차원의 경직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차원을 기반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가동맹이나 예술가동맹의 구성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학예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의 심미적 문화는 문학예술의 다양성과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정책,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문학예술작품이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창작방법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상적 알맹이라는 ‘종자’를 작품의 생명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창작방향에서도 ‘우리식’이라는 말 처럼 조선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서양적인 것을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10) 상징적 차원과는 달리 의식주 생활문화와 같은 외현적 차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로의 수렴론 차원에서 볼 때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은 동질성을 보여준다; 임채욱, 『남북한 접착과 문화변용』(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p. 22~23.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창작방법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3) 규범문화

규범문화의 상징적 차원 또한 이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덕목 중에서 미래사회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오상과 무위, 그리고 자연의 도덕적 명령을 따르는 순천절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덕목과 함께 앞으로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덕목으로 인권존중, 공정성, 준법정신과 책임감 그리고 정직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러한 규범문화를 기반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바람직한 한국인상으로서 주체적인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규범문화는 주로 집단주의 차원에서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상부상조의 관습, 금욕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로 요약된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덕목을 지닌 이상적 인간의 모델로서 수령의 전사이며 제자, 진짜배기 일군·충신·혁명가로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문화와 이상적 인간상은 북한주민의 가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¹³⁾

- 11) 문학예술의 주요 가치 지향을 나타내는 심미적 문화의 상징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및 예술의 형태의 측면인 외형적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이질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pp. 257~260 참조.
- 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편,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p. 158~159.
- 13) 이러한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도덕규범은 연구는 1993년부터 1997년 동안 4월에서 8월기간 중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그 언급회수를 측정하였다; 오기성, “북한의 규범문화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8호(1998.4), pp. 262~27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차원이 추구하는 공식적인 가치의 내면화 정도는 남북한 주민 개개인들에게 있어 일률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특히 여기에는 체제의 이념과 사회현실상에 불일치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

III.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의 모습

1. 인지적 경험문화

1) 언어

남북한은 상이한 인지적 경험문화를 기초로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이룩해 왔다. 따라서 이념과 문화관, 종교부문에서 서로 다름을 형성해왔다. 언어부문에서도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부분은 당연히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같은 어휘라고 해도 그 의미 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전자는 해당 사회의 어휘론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의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우선 남북한의 언어관의 차이는 크게 다원주의의 사고와 일원적 사고의 차이 내지는 이성관에 바탕을 둔 서구의 사고와 혁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적 사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또한 언어변화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를 원칙으로 하면서 언어와 사상을 하나로 보는 언어사상일체관의 관점에 서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도구관의 입장에 있으나, 언어가 사람들의 목적적 작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언어사상형성관의 관점에 서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언어변화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당 주관하에서 언어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언어가 정치에 종속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휘정리 부문에서는 남한의 ‘국

통일연구원, 1994), pp. 248~250.

14) 남기심·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91~94 참조.

15)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1993), pp. 221~222.

어순화’ 운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말다듬기’에 대한 논의와 그 사례이다.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은 어휘정리사업이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낡고 쓸데없는 말들은 빼버리고 고유어에 기초한 어휘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1966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말다듬기 원칙은 ① 쓸데없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친다. ②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굳어진 것만을 쓰도록 한다. ③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발굴하며, 선후를 가려 늘 쓰는 말부터 점진적으로 고쳐나간다. ④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고유어를 쓴다. ⑤ 고유어의 어근에 따라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나간다. ⑥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지상토론을 전개한다. ⑦ 다듬은 말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통제하며 교육부분과 출판보도부분에서 먼저 수용하여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¹⁶⁾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발된 용어들에서 우리는 남북한 언어의 긍정적 다름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나름대로 고유어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용어들은 남한이 외래어와 한자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보다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민족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풍’을 ‘가느바람’, ‘도넛’을 ‘가락지빵’, ‘브래지어’를 ‘가슴띠’, ‘산책로’를 ‘거닐길’, ‘여과기’를 ‘거르게’, ‘횡단보도’를 ‘건널길’, ‘패도’를 ‘걸그림’, ‘외풍’을 ‘겉바람’, ‘아파트’를 ‘고층살림집’, ‘쥬스’를 ‘과일단물’, ‘투피스’를 ‘나넌옷’(동강숙), ‘원피스’를 ‘나리옷’(외동옷), ‘버라이어티쇼’를 ‘노래춤음악’, ‘하이힐’을 ‘뒤축이 높은 구두’, ‘음료수’를 ‘마실물’, ‘가발’을 ‘덧머리’, ‘계절풍’을 ‘철바람’, ‘노크’를 ‘손기척’, ‘팬티스타킹’을 ‘양말바지’, ‘스포츠뉴스’를 ‘체육소식’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들은 남한이 받아들여 사용해도 무방한 용어들이다.

16) 외래어 및 한자 사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박상훈·리근영·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p. 11~28 참조; 남북한 간의 어휘정리 원칙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남북한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 대한 연구는 이상섭, “국어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국어의 순화와 교육』(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 111~112.

2) 의생활문화

의식주생활문화는 각 문화의 필요성에 따라, 또는 각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의 의식주 문화가 근대화 에 따라 서양식으로 많이 변화된 측면이 많다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근대화 상황 아래서 현대적 미감을 중요시하면서도 민족적인 전통을 강조하고 있다.

의생활문화의 경우 남한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은 의복의 소비행태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¹⁷⁾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는 1970년대에 이어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¹⁸⁾ 우선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기 연예인의 복장이 젊은 층에 유행하였으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1980년대 신세대라는 새로운 젊은 층을 형성시켰고, 이들은 전례없는 속도와 힘으로 일반 복식을 패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제 의복은 단순한 실용적 차원을 넘어 미적 가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도구로 변화된다.

이에 비해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크게 보아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의복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분류된다. 특히 민족적 형식을 중요시하여 의생활에서 조선옷을 강조하는 방향을 추구했다고 평가된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현대화라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의류소비 실태는 식량사정보다는 덜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물론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스스로의 개인적 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²⁰⁾ 예컨대 여성복의 경우 북한은 직물 생산

17) 박찬부, “한국 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155.

18) 이은영, “의생활의 변화”, 이기영 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pp. 125~126.

19)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서울: 당대, 2000), p. 223.

20)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참조; 조선

량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의생활의 통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주의 건설 동원으로 작업복 착용시간이 많다. 유행과 디자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옷차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의복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부 특수층에서만 이 의복선택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옷, 특히 여성의 조선옷이다. 조선옷은 나름대로 전통을 현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발전시킨 개량한복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조선옷은 색상면에서 단순했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색상에서 다양성을 띠게 되고 아울러 디자인이나 문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남한 또한 1960년대부터 한복의 패션화 현상이 시작되면서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개량한복이 개발되었다. 개량한복은 아직 각자의 생활수준이나 혹은 담당하는 일의 성격에 맞게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지만 그 대중화가 진행중이며,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여성 조선옷의 경우 현대복식 기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옷에 기울인 북한의 관심 속에 형성된 전통 한복의 문향, 디자인 등과 같은 축적된 노하우는 남북의 화해협력 형성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다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남한이 쌓아올린 현대복식의 노하우와 개량한복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심미적 문화

1) 음악

음악의 경우, 북한 민족음악의 역사적 원칙은 민족전통음악을 복원하고

일보사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서울: 조선일보사, 1991 신년호 별책부록), 허문화의 증언, p. 117.

보존하되, 그것은 역사주체인 인민대중들의 현대적 미감을 중심적인 근거로 삼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은 풍부하게 발전하였지만, 바로 그 역사적 원칙 때문에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전통음악의 기반은 남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다. 바로 이것이 남한의 음악과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다름이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차원에서 볼 경우, 북한음악에 있어 새로운 악기를 개량하여 실제 음악계에 적용,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다름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량악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전통음악 연주는 물론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 전통악기와는 달리 배음과 음량이 풍부해져 합주할 때 저음이 풍부하고 음량이 확대되고 독주악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독주때 전통악기보다 기교를 더 부릴 수 있게 된 점, 서양식 관현악단과 배합(전체 또는 부분배합)이 이루어져서 같이 편성(배합관협악)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²¹⁾

2) 무 용

무용의 경우 남한은 30년대 이후 민족문화의 복원과 회복, 활성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민족 고유의 무용들을 보존, 계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순수 창작무용에 있어서도 발레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 각색의 무용들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용은 순수한 민족무용을 개조하여 집단무용으로 획일화시켰으며 예술적인 무용도 우리 춤과는 달리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서양의 발레처럼 기본동작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있다.²²⁾

또한 남한의 무용은 민속춤의 경우 고유한 모습과 향토적 특성을 살려

21) 예컨대 개량단소나 옥류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서울: 웅진출판사, 1996), pp. 230~231;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1992. 4), pp. 315~316; 한국예술연구소,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구성안 연구』(1995), pp. 69~71.

22) 이병옥,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1993, 여름), pp.102~103.

가면서 계승시키고 있다. 예술무용의 경우 서양무용인 발레와 현대무용의 기본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무용과 전통적인 각종 무용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창작하는 각양각색의 무용작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춤과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조선춤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혁명과업에 맞도록 가공하여 획일적인 민족무용으로 전형화시켰다.²³⁾

따라서 남한무용과 북한무용을 놓고 볼 때 예술 철학적인 면에서는 한국무용이 개개인의 창작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예술로서 예술자체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 무용은 예술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무용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이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로, 민속무용인 경우 춤사위가 기계적이고 각이 많은 춤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기후풍토나 북한사람들의 고구려적 기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부지역의 향토춤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둘째로, 공연형식에서 보여 준 무대장치라든가 조형 등 무대공학적인 기술은 우리들이 수용해야 할 것도 있고 전해주어야 할 것도 있다고 본다. 셋째로, 북한의 무용이 민족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여 조선춤의 특징을 나름대로의 시각에 입각하여 정선된 동작과 감각을 살려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는 새로운 창작예술, 자유예술의 구현, 외래예술의 무비판적 수용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적 색채와 전통성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²⁴⁾ 넷째로, 1987년 북한은 새로운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을 완성하여 발표했다.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에서는 무용작품의 양상과 정서감정, 그리고 소도구의 이름이나 생활적인 동작 같은 것을 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²⁵⁾ 무

23) 이러한 경향은 주로 무용창작의 기본방향에서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김정일,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8~51 참조.

24) 이병욱,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p. 97.

25)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Ⅱ(서울: 고려원, 1991), pp. 91~145; 이현경·최대석,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95

용표기의 기호학적 발상인 무용표기법이 육체의 언어인 춤동작을 얼마 만큼 정확히 표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연극

연극의 경우,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 남한의 연극은 정치사 및 정신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일제 잔재 청산, 봉건 잔재 청산, 분단문제(좌우익 사상의 대립),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분단문제와 더불어 전쟁, 이데올로기, 독재권력의 인권침해가 극작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또 1980년대 중반부터는 '5공정권이 빛은 각종 정치사회악과 환경문제, 붕괴된 도덕성',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사회에서의 윤리의 피폐성이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다.²⁶⁾

반면 북한은 공연예술 분야로서 연극과 우리에게는 낯설다고 볼 수 있는 가극이라는 분야를 두고 발전시켜왔다. 우선 가극부터 살펴보면, 북한에 있어 혁명가극이란 김일성이 30년대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연극을 6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지도로 다시 가극으로 각색된 작품을 말한다.²⁷⁾ 북한에는 이 혁명가극 외에 혁명연극, 혁명가요 등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일성이 지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창작했다는 작품들이다.

남한의 경우, 열린 사회만큼이나 희곡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어느 한 형태도 확고하게 정립시킨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마당극이 1970~80년대에 풍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희곡형태로 정립되지 못했고, 뮤지컬은 오늘날 무대를 점유하지 못하지만 그런 희곡을 제대로 쓰는 작가 한사람 없는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26) 이외 한국연극의 흐름에 대한 논의는 김웅태, 『연극이란 무엇인가』(서울: 현대미술사, 1997), p. 185;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연극』(서울: 현대미술사, 1996), pp. 36~37; 유종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서울: 민음사, 1997), p. 224, 235 참조.

27)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서울: 신원문화사, 1990), pp. 56~58 참조.

북한 희곡은 이와는 별개의 것이다. 북한연극에 대한 강령적 문헌은 김정일의 논문인 “연극예술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북한 연극에 있어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연극혁명의 필요성, 극문학론, 연극 무대형상론으로 구분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⁸⁾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극무대형상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흐름식 입체무대 미술론이다.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은 장면을 중단없이 전환시킴으로써 관객의 감정흐름을 단절없이 지속시키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⁹⁾ 아울러 북한의 공연장들은 우리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무대의 깊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독창성은 무대장치나 공연에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극의 경우 남북은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남한의 다양한 장르의 연극 발전과 북한의 공연장기술, 흐름식 입체무대예술은 한국 연극의 보편성 속에서의 독특성 확립을 위해 서로 교류,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4) 미 술

미술의 경우, 남한 미술은 일제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을 통해 서구미술을 강제로 수용했고, 6·25 이후에는 대략 10년 주기로 신속하게 서구미술을 수용해 왔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이식된 미술은 서구양식인 ‘리얼리즘’이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서구적인 미술양식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미술과는 양식과 이념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³⁰⁾ 또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에 도입된 ‘추상형식’

28)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4.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 103.

29)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p. 57;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은 성황당이다;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pp. 54~55;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효과”, 『북한문화연구』, 제2집 (1994), pp. 192~193; 서연호, 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서울: 고려원, 1990), pp. 258~259.

30) 박영택, “90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 (1991. 12), p.26.

은 리얼리즘 양식 및 이념과 거리가 먼, 특히 기하학적 경향의 것이었다. 반면 1970년대는 ‘미니멀 추상’(minimal abstraction)의 영향속에서 정착기의 두 추상양식이 극복되고 리얼리즘 경향이 퇴조하였다. 70년대 후반 이후 ‘포스트 미니멀’의 영향가운데서 서술적 경향의 미술이 붐을 조성하였다. 이에 비해 80년대는 ‘변혁과 갈등’의 시대였으며 이에 따라 미술계는 이른바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침체하게 진행되어 왔다.³¹⁾ 반면 미술문화의 수용과정에서 서양미술의 무조건적 수용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해방 이후 창의성 결여, 이념부재, 현실적인 참여의지 빈약에서 벗어나려고 한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1950년대 중, 후반기에 앵포르멜과 액션페인팅으로 요약되는 추상미술운동에 자극받은 추상화물결이 그 하나이며, 일부이기는 하나 1980년 중반의 수묵화운동,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채색화운동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술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주체사실주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은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여기서 당성은 사회주의 미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식’ 유희기법이 중요시되고 있다.³²⁾ 또한 실제 작품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실주의의 정향과 방법과 다른 미술사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이러한 북한 미술이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은 이기주의적 사적 세계의 산물이거나 대중과 유리된 고급상품으로서의 미술이 아니라는 점이다.³³⁾ 아울러 현실에 사상미학적 근거를 두면서 주체적 시각에 의해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조선화는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수립하여 대중

31) 일제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미술의 주요경향에 대한 논의의 대표 저작은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서울: 미진사, 1993), pp.133~136; 오광수, “한국미술의 현장”(서울: 조선일보사, 1988), pp.60~61;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 『미술세계』(1992. 4), p. 29; 서성록, 『한국의 현대미술』(서울: 시공사, 1994), pp. 358~400 참조.

32) 김정일, 『미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22, 39, 98, 106.

33)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1993, 여름), pp. 64~65.

속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술적 기량이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³⁴⁾ 북한미술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념조형물 제작 기법, 쪽무늬 벽화 기법, 검은 옥돌에 수작업으로 초상화를 새기는 특이한 기법 등으로써 이들은 북한 미술가들이 창출해 낸 것이다.³⁵⁾ 따라서 다양성을 기초로 서구적 미술양식과 한국 전통미술 양식의 조화를 지향해 온 남한의 미술과 북한의 독특한 미술기법의 묘합(妙合)을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외국 미술계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3. 규범문화

북한 사회는 그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인 생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집단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곧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삶과 동의어로 타도 대상이었다. 이에 비해 그 동안 남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된다. 남북한 주민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규범의 차이는 이상적 인간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공동체 삶에 요구되는 덕목인 협동·순종·겸손·이타·인내·절제·화목·충성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홀륭한' 사람, 즉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자기 수양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간주했다. 한편 남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덕목인 개성·창의·합리·능률·자율·공정·책임·독립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 즉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이고 자기 실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했다.그런데 양쪽 체제에서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인간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직한 자질만을 갖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³⁶⁾ 왜냐하면 한 체제에서 바람직한 자질이 다른 체제에서는 오히려 바

34) 정희섭, “북한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민족예술』(1996.4), pp. 40~41.

35)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람직하지 못한 자질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양 체제가 상이하게 빗어 낸 이상적 인간은 모두 강점과 동시에 약점도 갖고 있는 것이다. 양쪽 인간 중 어떤 인간상도 온전하게 이상적인 인간상은 아니다. 동시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버리기를 강요한다면 갈등은 확대된다. 따라서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도정에서 많은 만남과 다가서기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인간상을 점진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IV.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1. 통일교육에서 문화적 접근의 의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기초로 북한을 대결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민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제위에서 기존의 반공이나 안보의 문제를 포용하는 적극적 의미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50여년간 상이한 체제와 이념하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간의 내면적 또는 의식적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의식적 통합에 대한 강조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통해 볼 때, 체제통합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 또는 일방의 흡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활세계의 통합, 즉 문화통합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다. 이는 곧 통일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문화적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통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통일된 독일과 예멘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근 홍콩 반환 후 나타

36) 이수원, “통일과 새 인간상 정립”, 문화방송 편,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서울: 문화방송, 1997), pp. 54~59 참조; 이와 같은 관점으로는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 과제: 남북한 인성차이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주최 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1994. 11. 25), pp. 29~31 참조.

나는 중국과 홍콩지역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갈등에 주목할 수 있으며, 비록 통일은 이루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 대만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갈등³⁷⁾은 남북한 문화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통일을 이룬 국가이든 제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빈번하게 밀접한 교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양 지역 주민들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통일의 기반이 문화이며, 동시에 통일교육에 있어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내용에서 정치적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한 의사소통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문화적 접근은 남북 양 사회에서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게 하며,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평화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³⁸⁾ 나아가 문화적 접근은 남북한 사회의 분단 반세기 동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전시켜 온 부문도 엄존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동질적 측면이 있음을 소개함으로써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 남북한 사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추상적이고 거창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화해협력할 수 있는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다.

37) Nathan, Andrew J.,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문화방송, 『정보화시대의 남북한 문화통합』(서울: 문화방송, 1998), pp. 200~201.

38) 임현진·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제1호(1999), pp. 339~340 참조.

2. 『통일교육지침서』의 문제점

1) 총론적 차원의 문제점

1978년 서독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 지침』³⁹⁾에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독일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인 동서독 현안 문제, 동독 사회 이해의 문제,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동질성 및 이질성 문제,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이라는 이중성, 양 사회의 비교와 가치판단의 문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지도 방법 등 그야말로 ‘지침’들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통일교육지침서는 ‘지침서’라기보다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요약한 교과서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이해 및 통일문제 이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본서의 접근은 지나치게 정치학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이념이나 체제, 제도, 정책적 측면, 즉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생활세계를 일구어 가는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흔히 이러한 체계통합적 접근을 취할 경우 주체사상이나 노동당 및 그 외곽 기구 등을 포함하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기술이나 정당화담이나 남북교류상의 문건지상주의적 소개로 말미암아 남북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는 선언적 진술로 끝을 맺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2) 북한 이해 부분의 비중과 내용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범주적으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로 구분된다.⁴⁰⁾ 이렇게 볼 때, 이 지침서에서 제시되는 통일의 필요성에

39)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Bonn, 1978)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2); 오기성,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 「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2000, 봄호) 참조.

40) 전자의 경우는 분단의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문

대한 내용의 구성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북한 이해” 부분(2개의 절 분량)이 약 20쪽을 차지하는 반면, 4~7절, 즉 “통일환경 변화”~“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42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러한 비율은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일환경의 변화”~“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현재 4개의 절을 통해 장황하게 진술되고 있는 바, 구성비율의 문제도 있거니와 어떤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용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다분히 보인다.

북한의 문화 부분은 이념이나 체제 문제보다 남한과 동질성이 많으며, 이질적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 남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엄존하고, 따라서 이러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단순히 부분의 합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화해협력의 적극적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 특히 문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문화 관련 내용에서 이러한 측면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지침서에서는 북한의 문화정책에 대한 개략적 소개, 김정일의 역할, 문화의 선전선동적 역할, 최근 문학과 예술의 경향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다.⁴¹⁾

3. 긍정적 다름의 통일교육적 함의

1) 민족화해의 단서로서 긍정적 다름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은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라는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민족화해교육’과 ‘민족통합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함으로써 보다 개념적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간의

제와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는 남북한의 통일노력 및 통일정책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의 체반 현상,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등이 포함된다.

41) 통일부, 앞의 책, pp. 26~27.

적대감과 대결감정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에 기초하여 인적, 물질 교류를 이루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민족통합교육’이란 제도적 및 영토적 통일, 즉 체계통합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갈등을 완화하고 화합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두 형태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지만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화해교육에서 중요시되는 범주는 상호공존을 통한 이문화(異文化) 이해교육이다. 민족화해교육은 우선 남북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배타적 대결상태를 넘어 ‘상호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시한다. 이해의 과정에서 파악되는 같음은 사람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름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민족화해교육은 단순히 전통적인 동질성에 대한 확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가 다름에도 협력할 경우 단순한 합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례를 발굴, 교육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화해교육은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화해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족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인 긍정적 다름에 대한 소개를 중시한다. 따라서 민족화해교육은 기존의 단순한 전통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민족공동체의식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을 지향한다.

2) 긍정적 다름의 반영 방안

200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북한 이해부분인 2장 2절 북한사회의 모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7절 4항

의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부분에서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선 현재의 “2.4 북한의 교육과 문화”에서 문화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먼저 북한이 문화를 독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공간에서 북한의 문화를 소개할 경우 인지적 경험문화적 측면이나 북한 문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심미적 문화와 규범문화를 상징적 차원과 외현적 차원으로 구분, 설명하고 그 간극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을 지침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문화가 지닌 상대적 장점도 제시함으로써 화해협력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단서 제공을 토대로 “7.4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의 실적, 건수, 통계중심의 나열을 벗어나서 그러한 교류협력 속에서 남북이 상호 냉전 및 적대의식이 완화되고, 서로의 문화를 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과정도 소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내용에서 동질성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려는 변화된 입장, 상호 협력할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의 증대 등을 다루어줌으로써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화해 협력에 있어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V.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통일교육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있어 진정한 삶의 통합의 매개가 되는 문화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아울러 북한사회의 이질적 측면을 부각시켜 모든 원인을 북한에 전가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논의는 자라날 수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 밝혀 본 바와 같이 남북한 문화는 분단 50여년이 지나면서 이질적 측면과 아울러 동질적 측면을 지녀왔다. 그러나 동질적 측면이 통합에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듯이 이질적 측면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합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질적이라고 해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그리고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측

면이 엄존하고 있다.⁴²⁾

1994년 북한핵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남북 공연예술 교류사례를 통해 볼 때, 남한의 예술이 전통 원형보존 계승 정책의 한편에는 서양식 예술이 예술의 주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북한은 전통예술을 변형시키고 외래예술과 접합시켜 예술계의 주류 경향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⁴³⁾

이렇게 볼 때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전통예술 계승관을 지니고 있는 셈이며,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성과는 다 일정한 공과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측의 성과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민족의 문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료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 문화에 있어 획일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며 우상숭배적 요소는 극복되어야 할 측면이다. 그러나 문화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지향적 요소, 현대화의 노력과 그 산물 등의 요소는 발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⁴⁴⁾ 또한 남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이고 사대적인 요소, 비대중화적 전통성 등은 지양하되,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요소는 수용되어야 한다.

발전적인 문화란 자국문화의 전통 속에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원성을 추구하는 문화이다. 북한 문화의 주체성과 현대성, 남한문화의 다원성과 자유스러움이 서로의 만남과 다가서기를 증대함으로써 장단점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문화접변을 이룬다면 화해협력에 현실적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민족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문화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우리는 이제 통일된 사회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에서 북한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발전적 문화의 시각에서 남북한 문화

42) 연구자의 지적 한계로 인해 서예, 영화(애니메이션), 음식(음료), 서예, 가극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43) 김준미 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pp. 56~57.

44)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p. 346.

의 이상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이를 기초로 문화의 긍정적 다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적극적인 소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이 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에도 기여하리라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서울: 나남, 1994.
- _____.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97.
- 김복영. “80~90년대 한국미술의 다원화의 양상과 갈등구조,”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제34집 1995.
- 김응태. 『연극이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1997.
-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 (영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 4. 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 _____.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미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춘미 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5.
-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남기심, 김하수. “북한의 문화어,” 고영근 편.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노동은. 『노동은의 음악상자』. 서울: 웅진출판사, 1996.
-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 박상천외.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박영택. “90년대 미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세계』. 1991. 12.
- 박찬부. “한국 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서성록.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과 실제의 양상,”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한국미술의 새로운 이해』. 서울: 시공사, 1994.
- _____. 『한국미술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미진사, 1993.
- _____.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시공사, 1994.
- 서연호, 이강렬. 『북한의 공연예술 I』. 서울: 고려원, 199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개발위원회 편. 『고등학교 윤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송수남. 『한국화의 길』. 서울: 미진사, 1995.
- 양혜숙. “80년대 한국연극의 발전적 위상과 양상,” 『문학사상』. 제201호 1989. 7.
- 에베레트 트라이얀스. “민족통일 : 그 문화적 측면,” 『통일정책』. 제4권 4호, 1978.
- 오광수. “80년대 한국미술의 정황,” 한국미술평론가협회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미진사, 1993.
- _____. 『한국미술의 현장』. 서울: 조선일보사, 1988.
- 오기성. “문화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방안 연구,”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종합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서울: 통일원, 1998.
- _____. “북한의 규범문화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8호 1998. 4.
- _____. “서독의 통일대비 정치교육~ 『독일문제 교육지침』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2000 봄호.
- _____. 『남북한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유민영. “해방 50년의 회곡,” 유종호 외, 『한국현대문학50년』. 서울: 민음사, 1997.
- 윤범모. “북한미술의 특징과 조선화의 세계,”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 윤준근. “한국미술의 전환기인가,” 한국방송공사 TV심포지움 발표논문, 1988. 2.
- 이강렬. “북한연극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1995.
- 이광규. 『새로운 민족관의 수립을 위하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 이구열. 『근대한국화의 흐름』. 서울: 미진사, 1988.
- 이미원. 『포스트모던시대와 한국연극』. 서울: 현대미학사, 1996.
- 이병옥. “북한무용의 이념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 여름.
- 이상섭. “국어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국어의 순화와 교육』.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 이수원. “통일과 새 인간상 정립,” 문화방송 편,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 이영철. “문화변동과 미술의 대응~창작과 비평의 비판적 소고~,” 『미술세계』. 1992. 4.
-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9. 23.
- 이은영. “의생활의 변화”, 이기영외, 『광복 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 이춘길 외. 『김정일의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이헌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임채욱. 『남북한 접촉과 문화변용』.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임현진, 정영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남북통합의 모색: 현실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제1호, 1999.
-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통일원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1993.
- 전병재. “사회의식구조 동질화 과제~남북한 인식차이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주최 학술회의 주제발표 논문, 1994. 11. 25.
- 전영태. “민족적 대서사시 창출을 위한 준비작업,” 『문학사상』. 1992. 4.
- 정병호 외. 『북한의 공연예술II』. 서울: 고려원, 1991.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 정희섭. “북한미술의 이해를 위하여,” 『민족예술』. 1996. 4.
- 조선일보사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월간조선 신년호 별책부록).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서울: 당대, 2000.
-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 서울: 민음사, 1992.

통일부. 『200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1. “통일을 대비한 21세기 한국미술의 전망”; <http://art.joongang.co.kr/199912/art140.html>.

한국비평문학회편. 『북한 가극, 연극 40년』. 서울: 신원문화사, 1990.

한국예술연구소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구성안 연구』. 1995.

한옥근. “연극예술의 회곡문학,” 유종호외, 『한국현대문학50년』. 서울: 민음사, 1997.

현재원. “북한 혁명가극에 나타난 가요형식과 극적효과,” 『북한문화연구』. 제2집, 1994.

Alexander, Jesffrey C. and Philip Smith. *"The Discovery of American Civil Society : A New Proposal fo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Agency, Vol.22, No.2, (1993)

Baldrige, J. V., Sociology . N.Y.: Wiley, 1975.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Ohio Univ. Press, 1993.

KMK.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 Bonn, 1978.

Nathan, Andrew J. *"Promoting Politico~Cultural Integration : Lessons for Korea from the Chinese Experience"*, Paper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 sponsored by the Hankuk Foundation and Munhwa Broadcasting Company (Nov. 26, 1997)

Tompson, J.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1990.

Turner, J. H. *"Analytical Theorizing,"*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eds.), *Social Theory Today*.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1987.

Tyler, E. *Primitive Culture*. Gloucester, MA: Smith, 1924.

Peterson, Richard A. *"Revitalizing the Culture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ety. Vol.5 (1979)

남북한 사회통합과 해외동포 모국 수학생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연구: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을 중심으로

조 혜 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공동체 형성 방향 모색에 대한 논의
- III. 중국동포 현황
- IV. 재중동포의 남북 교류를 위한 역할 개관
- V. 통일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한 인식
- VI. 모국관 및 민족의식
- VII. 결 론

I.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함께 교통·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국가 간의 교류 및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및 각종 통신 매체, 전파 등을 통하여 우리는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동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화상 회의도 한다. 더욱이, 한반도 내에서 최근 불고 있는 남북 화해의 바람, 즉,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교류 및 장관급 회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는 한민족에게 새롭게 그 위상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내에 조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와, 각 국가의 지리적 영토 개념이 희석화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경향은 한반도 남북의 사회통합에 대한 해외동포의 역할 및 비중이 커질 것임을 암시한다. 해외 한민족은 한반도 통일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 사회 통합과 함께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 진정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확립되는 것이다. 즉, 한민족 통일은 국지적이고 정치적인 테두리인 한반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및 정치 단위를 초월하여 남북한 및 세계 도처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남한과 북한에 각각 4400만과 2300만이 살고 있으며,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의 수는 530만에서 56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남한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이다.¹⁾ 이러한 배경에서 한민족 통일 및 화합은 단지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평에서 다양한 모습을 아우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²⁾

해외동포³⁾들은 한반도를 떠나 다양한 국가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과 여러모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내의 남북관계 변화는 해외동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 한

1) 이만우, “한민족공동체(KC)의 이론 정립”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49~81.

2)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82~112.

이만우, “한민족공동체(KC)의 이론 정립” 『한민족공영체』, 제7호, (1999), p.49~81.

3) 현실적으로 해외동포의 개념은 용어상의 통일성이 없이 재외동포, 해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재외국민’이다.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외국민’을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의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외국민, 해외동포, 재외동포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1998, pp. 3~4). 이 글에서도 해외동포는 재외동포, 교포, 혹은 해외 한민족과 차별을 두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민족도 그들의 모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디를 모국으로 삼느냐에 따라 같은 민족 간의 대치나 불화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양상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왔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재일동포 사회도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 각각 북한을 모국으로 하거나 남한을 모국으로 하여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분단을 겪어야 했다. 대다수의 재일동포가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좌익과 우익 등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 때문에 북한을 자신의 모국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6.2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이들은 총련과 민단으로 분리되어 각각 북과 남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⁴⁾ 이러한 대립 양상은 한반도내의 화해 무드와 함께,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한반도 내의 화합이 해외동포 사회에서의 민족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외동포 사회와의 교류 확대는 한반도 내의 통일을 매개하리라 보여진다. 특히 북한 동포와 접촉이 많은 재중동포, 재러동포와의 교류는 이를 촉진시킬 것이다. 근래에 러시아나 중국 등지로 기업이나, 교육, 종교 단체 등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예컨대, 재러동포가 거주하는 연해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재러동포, 중국의 조선족, 남한동포, 북한동포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재중동포와 북한동포가 노동 인력으로 진출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및 문화, 민족 교육 등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 정책, 동포 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때, 연해주 거주 한민족은 남북한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⁵⁾

한편 중국내 조선족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상당히 보존하고 있으며, 근래에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3만명에서 5만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많게는 10만명), 북한동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⁶⁾ 따라서 이들 재중, 재러동포 사회를

4) Ryang, S.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5) 이광규, 이종훈,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재외한인학회 1999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p. 31~71.

6) 윤인진, “국내외 탈북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향,” 『재외한인학회 1999년 연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p. 112~131.

매개로 한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남북한 직접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진다.⁷⁾ 이처럼 해외동포 사회는 남북한 사회의 관계 변화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해외동포의 존재는 남북한의 제한된 영토와 미약한 정치 경제력으로 인해 스스로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 통일을 이루기 어려운 시점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주체적인 통일노력을 실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⁸⁾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고국관 및 통일관, 민족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이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국과의 연계성, 분단된 고국에 대한 인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민족이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해외 한민족을 포괄하는 한민족 화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해외 한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한민족 공동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족’ 및 해외동포들(Diasporas)은 현재의 사회과학 담론에서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다루겠다. 이러한 배경 지식과 함께, 기존의 논의를 통하여 해외 한민족이 통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그 후,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재외동포의 의견을 분석해 보겠다.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 중 주로 중국동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동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⁹⁾ 이들은

7) 이종훈, “중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가 갖는 정치 경제적 의미,” 『재외한인 연구』, 제7호, (1998), p. 121~130; 이광규, “통일시대 민족의 자산 해외동포,” 『자유공론』 (1994. 3), p. 258~267.

8)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제12권 1호, (2000), p. 5~24; 윤인진,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 공동체, 민족번영 새모형,” 『통일한국』 (2000. 8), p. 28~31.

9) 참고로 한국을 찾은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 현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2년 1명, 1983년 2명, 1984년 6명, 1985년 8명, 1986년 5명, 1987년 11명, 1988년 10명, 1989년 15명, 1990년 21명, 1991년 15명, 1992년 16명, 1993년 9명, 1994년 31명, 1995년 17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높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친숙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국동포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우선 2000년 10월과 11월에 걸쳐 한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무료 컴퓨터 교육장에서 재중동포 모국 수학생들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참관하였고 이 교육장에서 알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2001년 2월과 3월에 이 중에서 몇 학생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들의 인터넷 사이트(www.koreanchinese.com)를 방문하여,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족의 위상 및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 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특히 인터넷상의 토론은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동포의 위상 및 한국과의 관계, 혹은 한국인과 중국동포 사이에 생기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진솔한 의견들이 많아 보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actor)로서 해외동포에 의해 구술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러티브나 표현된 글을 분석의 텍스트로 사용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통일관 및 민족의식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¹⁰⁾가 보여왔던 지극히 단순화되고 일반화된 결론을 보다 생생한(vivid) 사례로 보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명, 1996년 74명, 1997년 70명, 1998년 55명, 1999년 328명, 2000년 562명으로 한중 수교후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9년 이후로는 중국 동포 모국 수학생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펴낸 『2000학년도 모국 수학생 명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의 수는 15에서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조선족 인구의 10%에 이른다.

www.koreanchinese.com

- 10) 해외동포의 통일관이나 민족의식에 대한 양적 연구로는 평화문제연구소 및 한미 교육개발원의 『미주동포들이 보는 조국: 통일문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992), 문애리의 “재미교포 여성의 한국문화관과 통일의식” (1995), 김일평의 “민족통일과 재미동포” (2000), 임채완의 “중아시아 고려인들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성향” (2000), 오태근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외 한인의 역할” (1998), 공보처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1995) 등이 있다.

II.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공동체 형성 방향 모색에 대한 논의

1.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 및 한민족 정체성 인식 정도

해외동포 및 그 자녀 세대들을 한민족이라는 범주로 이해하고, 남북 사회통합을 매개할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민족과 남북한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서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어왔다. 이들 논의들은 주로 민족의 혈통, 역사, 문화의 ‘공유’ 및 ‘단일성’ 등 객관화된 특질을 근거로 한민족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시각은 주로 민족 개념의 원초론적, 초역사적 성격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민족 개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론’(primordialism)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도구론’(instrumentalism)이다.¹²⁾ 전자는 인종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면서 민족주의가 조상, 종족, 종교, 언어, 영토라는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는 민족주의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며,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원초론적 시각은 객관주의적 민족이론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언어, 공통의 문화유산,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것들을 민족의 기초를 형성하는 객관적 특질로 본다. 민족은 국가에 선행하며 공통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에 기초

11) 김일평, “민족공동체 발전과 해외동포,” 『광복 50주년 기념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통일 번영의 한민족 시대 전망』. (통일원, 국민생활 체육 협의회, 1995), p. 107~138; 이정희, “남북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제48집, (1994), p. 46~69;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p. 82~112.

12) Smith, A. D.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Tim Ingold, 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umanity, Culture and Social Lif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 706~733.

를 둔 실재라는 것이다. 반면 도구론적 시각은 주관주의적 민족 이론과 연결되며, 이것은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 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고 믿는다.¹³⁾

민족은 초역사적이고 자연적 실재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실재이다.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 특질들의 공유를 강조하며 한민족의 결속을 외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정태적인 민족 개념으로 회귀될 수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한 보수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상황, 이민의 역사 등이 동질적이지 않은 만큼, 이들이 지닌 실질적인 민족관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한국인과 해외 한민족들의 민족의식 및 고국관 등의 개괄적인 모습은 동질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양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공보처에서 실시한 『광복 50주년 기념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해외동포들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성인들보다 한민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는 남자, 고연령 층일수록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p. 5~24.

<표1>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동일시정도

*심리적 동일성 ~ 한민족 느낌이 드는 정도								
문) oo님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자신이 ‘한민족 (고려인/한인)’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자주 하십니까?								
결과	한국 (N=1,000) %		미국 (N=400) %		일본 (N=400) %		독립국가연합 (N=400) %	
매우 자주 한다	17.6	75.5	73.6	95.0	35.8	81.6	40.9	83.0
가끔 한다	57.9		21.4		45.8		42.1	
거의 하지 않는다	21.8	24.5	3.2	4.0	12.2	18.4	7.5	15.5
전혀 하지 않는다	2.7		0.8		6.2		1.5	
모름/무응답	0.0		1.0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p. 136

한편, 한국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에 대해서 남자는 24.1%가 ‘매우 자주 한다’라고 대답한 반면 여자는 11.3%만이 한민족이라고 매우 자주 느낀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한민족 느낌이 드는 정도가 21.5%가 매우 자주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40대가 19.6%, 30대가 14.6%, 20대가 15.9%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한민족으로서의 심리적 동일성을 느끼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⁴⁾

비록 단순화되어진 수치이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동일시 정도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등 추상적 이념으로서 한민족을 묶어내기보다는 한반도 및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및 개인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 언어, 역사, 문화의 공유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단지 정치적 구호 혹은 공허한 이념으

14) 공보처, 『광복 50주년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 (서울: 공보처, 1995).

로서의 민족주의로 그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해외 각 곳에 퍼져 있는 한 민족의 각기 다른 이민사와 현재 거주국에서의 특수한 존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와의 교류에서 어떤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적 이익 등 실질적 이득을 떠난 맹목적인 민족 의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1,800여만 명이 퍼져 있는데, 미국에 580만명, 이스라엘 본국에 480만명, 유럽에 150만명, 구소련에 200만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성(Ministry of Immigration)과 외무성의 세계 유대인국(World Jewish Affairs Division)을 통해 해외 유대인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친가, 외가, 조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유대인이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이 이주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유대인 총회(WJC), 세계 시오니스트(WZO), 유대인협회(JA)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국 지원 및 유대인의 본국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본국에 대한 경제 지원이 활발한데 United Israel Appeal, United Jewish Appeal 등 200여개의 모금 조직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을 하고 있다. 미국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포춘지 선정 100개 기업주의 3분의 1, 상원의원의 10%,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¹⁶⁾

한편, 세계 136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화교의 숫자는 약 3,000만 명에 이른다. 대만의 2,100만명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거대한 경제력으로 동남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화교들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의 화교 조직은 약

15) 박승록,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경제권 구축,” 『한민족 공영체』, 8호, (2000), p. 52~82.

16) 위의 글 pp. 75~76.

9,500여 개가 되는데, 아시아에 6,500개, 미주에 약 2,500개가 있다. 현재 대중화경제권은 대만의 제조 기술, 싱가포르의 마케팅 및 서비스, 중국의 노동력, 북미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전 세계 화교자본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한 경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화교들은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등 전 세계의 중국계 기업간 기구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운영하여 화교들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화교들간의 경제권 형성 실태를 보면, 1978년 중국의 개방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화교 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따른 서방의 경제 봉쇄를 탈피하기 위해 전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또, 화교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도 조세감면 등 독자적인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1983년에서 1994년 간 약 700억 달러의 화교 자본이 유입되어 전체 외자 유입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화교는 중국에 10만개 이상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기술과 자본을 이전하였다.¹⁷⁾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실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혈연이나 혈통, 문화의 동질성 등 객관적 특질들을 강조하다 보면 배타적인 민족공동체가 될 수 있다. 즉,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한인과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를 배제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자녀 세대들이나,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입양아나 이민 후속 세대들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객관적인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주관적으로 한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¹⁸⁾ 따라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재외동포를 한민족 공동체에 귀속시키고 이들이 한반도의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동질성이나 혈통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존의 혈통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 개념은 민족 문화와의 유

17) 위의 글.

18)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p. 5~24.

대가 강한 1세나 2세들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고 거주국의 사회 문화에 동화된 이민 3세, 4세에는 적합하지 않다.¹⁹⁾

2. 해외동포에 대한 이해의 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

근래의 이민자 연구 및 민족 집단에 대한 연구 동향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정보, 문화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집단과 모국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에 이민자들은 국경 및 국적을 초월하는 삶을 살며, 그들의 고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경향이다. 이는 그들의 고국이 현재 주재국과 지리적으로 먼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일군의 사회 과학자들은 초국가적 혹은 초국적적(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는 이민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가족,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의 고국과 현재 거주국 사이의 다중적 관계가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지며, 이러한 이민자들(immigrants)은 transmigrants라고 불린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민자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고국과의 유대를 끊은 사람들로 개념화되었으나, 근래에는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을 하였어도 지속적으로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²⁰⁾

1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해외동포의 역할,” p. 5~24; 윤인진, “열린 민족주의와 한민족 공동체, 민족변영 새모델,” p. 28~31.

20)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Towards a Definition of Transnationalism: Introductory Remarks and Research Questions." N. G. Glick Schiller, L. G. Basch, and C. Blanc~Szanton, eds.,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2), pp. ix~xv;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 68, No. 1, (1995), pp. 48~63; Glick Schiller,

근대 민족국가 건설과정은 통치 엘리트 세력이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ies)과 역사적 담론(historical narratives)을 구성하여왔던 정치과정이었다. 즉, 국가라는 지리적 영토 안에 단일한 국민이 거주하고, 이들은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단일한 정부에 충성한다는 신화를 창조하여왔다.²¹⁾ 민족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화가 고정되어 있는 국가 경계를 암시했던 반면,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밖에 살고 있는 자국의 이민자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국가의 본질을 재개념화하게 한다.²²⁾ 즉,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고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목함으로써, 초국적주의는 민족공동체를 특정한 지리적 영토에 국한시키지 않고, 해외 민족까지 자국민에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적 공간(transcendental territory)으로 민족국가(nation~states)의 영역을 확장한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 (여행, 유학, 이민, 망명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따라, 특정 장소나 국가, 문화, 사회를 하나의 결속되어진 단위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등장한다. 즉, 국가적, 지리적 경계는 더 이상 문화를 정적인 특질들의 총합으로 나타내지 못한다.²³⁾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은 타문화간의 역동적 교류를 증진시킨다. 이

N. "Citizens in Transnational Nation~States: The Asian Experience." K. Olds, P. Dicken, P. F. Kelly, L. Kong and H. W. Yeung, eds., *Globalisation and the Asia~Pacific: Contested territ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p. 202~218; Glick Schiller, N.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Charles Hirshman, Philip Kasinitz, Josh DeWind, 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p. 94~119.

21) Glick Schiller, N., Basch, L. G. and Blanc~Szanton, 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pp. 48~63.

22) Glick Schiller, N. and Fouron, G. "Transnational Lives and National Identities: The Identity Politics of Haitian Immigrants." Michael Peter Smith and Luis Eduardo Guarnizo, 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1998), pp. 130~161.

23) Gupta, A. and Ferguson, J.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어도, 현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상징적 혹은 실질적으로 고국과의 관련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²⁴⁾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이들 이민자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에이전시들은 고국과 이들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²⁵⁾ 따라서 이민자 집단(Diaspora)은 현재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회와 그들의 고국에 대해 이중적 관계(doubled relationship) 혹은 이중의 충성심(doubled loyalty)을 갖게 되는 것이다.²⁶⁾ 이민자들은 고국과 그들의 현재 주재국을 연결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본, 노동, 기술, 미디어의 초국가적 흐름과 함께, 이민자 사회는 국가적 경계 및 ‘남’과 ‘우리’를 구분지어 왔던 뚜렷한 경계에 대해 문제시한다.²⁷⁾ 이러한 초국가적 흐름은 특정 문화가 고정된 영역 안에 묶여져 있다는 기존의 개념에 도전한다.²⁸⁾ 이러한 초국적주의는 이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다중적이고 동시적인 관계들, 예컨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족적 관계들을 망라하며,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정체성은 다중 정체성의 형태를 띤다. 즉, 재외동포의 국적 혹은 시민권과 민족성은 별개의 존재인 것이다.²⁹⁾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Vol. 17, No. 1 (1992), pp. 6~23.

24) Clifford, J.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Vol. 9, No. 3, (1994), pp. 302~338; Safran, W.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991, Spring), pp. 83~99

Tölölyan, K.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Vol. 5, No. 1 (1996), pp. 3~36.

25) Portes, A. and Rumbaut, R. G. *Immigrant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26) Lavie, S. and Swedenburg, T. “Introduction.” S. Lavie and T. Swedenburg, eds., *Displacement, Diaspora, and Geographies of Ident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 14

27) Sharpe, J. “Is the United States Postcolonial? Transnationalism, Immigration, and Race.” *Diaspora*, Vol. 4, No. 2 (1995), pp. 181~199.

28) Chuh, K. “Transnationalism and its Pasts.” *Public Culture*, Vol 9 (1996), pp. 93~112; Kearney, M.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4 (1995), pp. 547~65; Lavie, S. and Swedenburg, T. “Introduction.” pp. 1~25.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질 때, 재외동포는 한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이들의 제3자적 위치는 분단된 남과 북의 교류를 매개하는 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재중동포가 통일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중국동포의 일반적인 개황을 살펴보겠다.

Ⅲ. 중국동포 현황

1999년 외교통상부 발행,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주요 국가 및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 204만여 명(2,043,578), 미국에 205만여 명(2,057,546), 일본에 66만여 명(660,214), 독립국가연합에 48만여 명(486,857) 등으로 이들 주요 국가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걸쳐 56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³⁰⁾ 이 수치는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남한인구 4400만여 명과 북한인구 2300만 명을 합친 본국 인구 대비 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³¹⁾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그들이 이주 해간 시기, 이민 세대, 주재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한국 문화와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민족 의식을 형성해 왔다.

중국으로의 한인의 이주는, 청조 말기에 국경 통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1860년대 대홍작을 맞은 평안도, 함경도 지역 농민들이 대거 간도 지방으로 이동해갔다. 1883년에 청-조선간에 『길림 조선 상민 무역 지방규약』을 체결하고, 1885년에 두만강 이북 지구를 한인 개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한인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인들은 중국인이나

29)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p. 5~24.

30)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1999).

31) 윤인진, “해외동포의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통일로』 (1999. 1월), p. 39.

만주족이 사용하지 않는 늪지대나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어 만주 일대에 쌀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한인들은 개간한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나 머슴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일합방이 되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우국지사들이 활동의 근거지를 찾아 만주로 이주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 거주 한인은 1910년에 10만 명을 넘어서고, 1916년에는 20만 명, 1921년에는 30만 7,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주한 우국지사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청산리대첩, 봉오동전투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³²⁾

1932년 일제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건국되자 이곳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예속 하에 들게 되고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만주의 황무지 개간과 지하활동을 하는 독립운동가, 한인 공산당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1934년까지 한인 10만 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 농민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이 지역의 한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만주 지방에 거주하던 180만 명의 한인들 중 80여만 명이 귀국했으나 1947년 당시 약 100만 명이 귀국하지 않고 잔류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국·공내전시 공산당에 협력하여 공을 세웠고, 한국전쟁시에는 다수가 중국 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9월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를 세우게 되었고 이는 1955년 자치주로 개칭된다. 1958년 9월에는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건립되었으며,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골 자치구 지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도 인구 규모의 다소에 따라 30여 개의 민족향과 100여 개의 민족 자치촌이 건립되었다.³³⁾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교육·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20여 년의 이주과정 속에서도 민족어와 문화전통을 보존하였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긍지와 농경 생활 위주의 집거 생활을 하면서 민족학교를 세워 민족문화 보존에 힘써왔고,

32)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이광규, “한민족공동체(KC)와 민족문화,” p. 82~112.

33) 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 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체계적 교류, 협력망 구축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8).

주재국 당국의 소수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다. 1982년부터 1990년 사이에 흑룡강과 길림에서 9만 명, 그 후 한국 회사들의 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약 20만 명이 도시로 진출하였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 친척 방문 등의 인적 교류 급증 및 1992년의 국교 수립은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한국인과의 교류에서부터 오히려 반한감정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였다.³⁴⁾ 또한 조선족 농민들의 도시 진출은 인구의 분산,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 축소로 조선족 민족 교육의 황폐화, 조선족 민족 공동체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다.³⁵⁾

IV. 재중동포의 남북 교류를 위한 역할 개관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통합된 방향이나 이론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들의 상황과 동포 사회 형성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인접해 있으며, 많은 동포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중국동포 사회는 한반도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 군사적·경제적 도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보다 남북 교류에 있어 그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³⁶⁾

중국동포의 역할 중 중요한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매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6.25이후 적대 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는

34)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경남대 동북아연구』, 4권 (1998), p. 175.

35) 박동준, “한민족공동체(KC)를 위한 교육방안,” 『한민족공영체』, 8호 (2000), p. 13~51.

36)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4호, (1998), p. 186~190.

1970년대에 대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 및 1972년 7월의 7.4 남북공동성명을 거쳐 1980년대, 1990년대의 대화의 길이 열리면서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1971년 8월에 있었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제기된 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85년 9월에 이산가족고향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실현되었으나 그 숫자는 2천만 이상의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5년 9월 20일 남북 쌍방의 이산가족 방문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 방문 길에 올라 평양에 간 방문단에서 35명이 북에 있는 가족 및 친척 41명과 상봉하고 서울에 온 북한 측 방문단 가운데 30명이 남한의 가족 친지 51명과 상봉하였다.³⁷⁾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가족 및 친척의 생사 여부나 안부를 모르는 상태이다. 통일 이전의 독일이 분단 상태에서 친척 방문이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대만이 1987년부터 ‘탐친’이라는 이름으로 대륙의 친척 방문을 허락한 이후 현재까지 약 3백만 명이 본토를 방문한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³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의 역할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 연길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동포 사회에서는 연변 라디오 방송국 해외연락부, 연길 이산가족 소개소가 현지 정부의 승인 아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하고 있다. 연변 라디오 방송국 해외연락부에서는 1993년 1월 1일부터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연길 이산가족 소개소는 자치주정부의 허락을 받아 1993년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소개소는 북한을 찾는 중국동포들에게 부탁하여 이산가족의 소식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80명의 이산가족을 찾아주었다.³⁹⁾ 특

37) 서일범,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 정책 자료』, 제48집 (1994), p. 86~100.

38) 유관지,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연구소, 한스자이텔 재단, 1994), p.226~234.

39)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7

히,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선린관계를 이용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를 승인하게 하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⁴⁰⁾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은 이들 동포가 갖는 국적상의 중립성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동포 사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¹⁾

또한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재중동포 사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1만명에서 2만명의 중국동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에 한국의 국제적 상황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⁴²⁾ 중국 흑룡강 신문사 부사장인 김충일은 “재중교포들의 경우 역사적인 원인으로 북한과 관계가 밀접했고 지금도 서로간에 교류와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복을 설득시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는 데 우세하다”고 말한다.⁴³⁾ 중국 연변대학의 고경수도 “중국에는 소위 친북 단체도 없으며 친남 단체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공정한 입장에서 민족의 화해를 촉진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⁴⁴⁾ 이들 해외동포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도 규모가 작긴 하지만 남북간 인적 교류를 증개하고 지속시키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남북간 직접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남북한의 이질적인 시각을 절충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⁴⁵⁾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직접 교역에 어려움이 큰 만큼, 간접교역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국동포의 역할이 부각된다. 특히 북한·중국 국경지대에는 국경무역의 통상구가

40) 서일범,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p. 86~100.

41) 이종철, “동포사회 통합시각에서 이산가족문제 봐야한다,” 『통일한국』, (2000. 8), p. 40~43.

42)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7

43) 김충일, “해외동포 사회에서 본 한반도 통일,” 『분단 50년, 한반도 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 한스자이텔 재단, 1995), p. 40.

44) 고경수, “두 개의 모국과 중국동포,” 『한민족포럼』, (1999. 11), p. 66~67.

45) 이종훈, “남북한 인적교류에 있어 해외동포의 역할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분단 50년, 한반도 통일과 해외동포의 역할』 (평화문제 연구소, 한스자이텔 재단, 1995), p. 111~130.

있으며, 양국은 이러한 통상구를 통해 국경 무역을 의욕적으로 번성시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전통적 경제 협력 대상이던 구 소련이 몰락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서 북한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이 양국간 국경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북한 간에는 중국동포의 북한내 친지 방문, 북한동포의 중국내 친척 방문, 경제 교류에 수반된 상호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당 수준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⁴⁶⁾

학술, 예술, 종교 단체들의 행사를 통해서도 남북한 인사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변 대학에서는 조선학 국제학술세미나(1989, 1991) 등 여러 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남북간 간접 교류를 추진해왔다.⁴⁷⁾ 끝으로 재중동포는 통일 후를 대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던 재중동포를 통해 북한동포의 의식과 가치관, 행동양식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통일 형태를 취하든 간에 우리는 이들 재중동포와 유사한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은 통일과정 및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⁴⁸⁾

위에서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재외동포의 통일과정에 대한 기여를 논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재외동포들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치중해 있었다. 통일이 장기적인 과정이고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도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청년세대가 통일 및 그 이후 사회통합과정에 주요 참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인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남북 교류를

46) 방수옥, “남북한관계의 전개와 재중동포의 역할,” p. 188.

47) 이동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변화된 세계, 새로운 통일론』, (평화문제 연구소, 한스자이델 재단, 1994), p. 219~225.

4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10장, 교민정책의 현황과 방향,” 『교포정책자료』, 제51집, (1995), p. 101~127.

위한 역할 인식 및 고국 및 민족관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북한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하고, 나아가 남한 사회에 와서 일정기간 체류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남북한 관계를 증재하고 매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된 재중동포 및 재외동포의 통일과정 및 남북교류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재중동포 모국 수학생의 개별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재외동포 개개인은 통일준비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국 및 민족, 통일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들어보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V. 통일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1999년 이후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 동안에 두드러지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⁴⁹⁾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성(남북한에 친척의 유무, 고국관, 통일관, 정체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모국 수학생의 고국관이나 통일관에 대한 일반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살려 피면담자의 의견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⁵⁰⁾ 또한 기존에 제기된 일반적인 재중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및 고국·민족관에 대한 연구담론과 관련하여 개별 행위자의 인식은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 제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되, 관련되는

49) 국제교육진흥원, 『2000학년도 모국수학생 명부』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2000).

50)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연구가 아니며, 일반화가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살리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집의 크기를 늘림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무작정 늘림으로써 참여관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 질적 연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용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참조.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부제보자들의 의견도 보충한다.

주요 제보자로 선정된 박군은 연변 출신으로 1998년에 한국에 와서 한 공학 계열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중국동포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타 조선족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그는 현재 대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학부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신촌으로 나갔다. 3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되어버린 연구자에게 이제 신촌거리는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흰 얼굴에 안경을 끼고 마른 체구에 쏘니 비디오 카메라 세트를 어깨에 매고 등에 배낭을 짊어진 채 나온 박군은 연구자보다 훨씬 신촌 거리에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조선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군은 행사를 비디오에 담고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중국에서 컴퓨터그래픽을 공부해서 그런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데 능숙해 보였다. (텔레비전 코미디에 등장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중국 연변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신촌거리에서 연구자는 조용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곳으로 어디가 좋은지 찾을 수 없었다. 지난주에 만났던 조선족 여학생과 갔던 곳 역시 음악소리가 시끄러웠다. 박군은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며, 그리로 나를 안내하였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문화공간이라며, 거기서는 세미나도 하고 책도 보고 음료수는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시간제로 돈을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신촌에도 있고 대학로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문화에 있어서는 연구자보다 더 ‘한국적’인 것들에 익숙해 보였다. 박군을 따라 그 곳으로 갔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한 카페로 갔다. 역시 적응하기에 힘든 시끄러운 대중 가요와 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았다. 주위에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여자들끼리 모여 앉아 담배를 피거나,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남녀도 보였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더욱이 신촌이라는 특정 지역 안에서조차 연령에 따른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며, 박군의 통일에 대한 견해와 그와 관련된

중국동포 및 연변 조선족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박군은 중국 동포가 통일을 매개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한이 북한 사회를 잘 모르고,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 친숙하며 남한 사회도 접해 본 조선족 사회가 두 극단을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가 만나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계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 지난번에 훈춘에서 한국인 피해 사건 있었어요. 연변 훈춘에서 한국인 부부가 다방을 운영하는데 살해 피해를 당해서 조사해보니 북조선 20대 청년들이 여자 둘, 남자 하나, 조선족 하나 모두 네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자 두 명이 다방에서 아르바이트했어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게 많잖아요. 사모님 보니까 금도 있고 뭐도 있고, 금가락지 끼고, 뭐 끼고… 근데 자기네는 보니까, 한 달에 백 원씩 밖에 못 받는대요. 북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족이면 한 달에 삼백 원씩 받거든요. 그 백 원 벌어서 북조선가면 잘 살 수 있겠는데, 그 연변이라는 사회에서 살자면 백 원이 아무것도 아니예요. 경제적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합심해 갖고, 조선족이 택시 몰았거든요. 합심해 갖고 뛰어들어가서 죽이고 금은보화 같은 거 다 뺏어 가지고 달아났대요…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 가지고 몇몇이 피해 봤잖아요. 그것이 똑 같아요. 북조선하고도 갑작스러운 통일을 하게되면 그런 사건, 사회적인 문란이 꼭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전제하에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연변이 그런 피해 사건이 없는 게 뭐냐하면, 지금은 연변이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다 있다. 한국이라는 거는 별로 부럽지 않다. 그냥 나도 한국 갔다오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가진 돈이 부럽지 않다 이거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럽죠. 내가 요만큼만 가져도 굉장히 잘 살겠는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경제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적인 교류도 해 갖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제가 보는 견해겠

어요.

남북 통일에서 연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보면 북한과 흡사하면서 또 한국하고도 흡사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북조선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 다 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북조선도 알면서 한국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저도 한국 기업에 한번 들어가 봤고, 저의 누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한국 기업에 취직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족 관리자들이 한국 사람 기업 관리와 충돌이 잦았어요. 한국식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조선족을 연구하고, 조선족은 중국에서의 국위기업 그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관리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조선족에 대한 신임, 이런 것 때문에 회계를 맡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국 기업에서 돈 갖고 달아나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조선족이 한국 어느 정도 아니까, 또 북조선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안에서 관리자 직을 맡게 되면, 그 회사 운영이 어느 정도 순환된다는 거예요.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쪽을 적대관계로 맺었어요. “너네 미국 괴뢰군이다” 그러니까 조선족은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에게 의사전달하고, 한국도 조선족을 통해 의사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21세기 남북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단지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에 앞서서 한국에 있는 더 많은 단체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선족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외동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할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중동포인 박군도 해외동포 특히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조선족 사회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회를 매개시키고, 절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겪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겪

어왔기 때문에, 통일 후에 남북한 주민이 직접 부딪히면서 겪게 될 혼란을 그 동안 남한 사람들이 조선족과의 접촉에서 빚어졌던 부작용들을 통해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고, 북한 주민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조선족이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남한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변 등 조선족 사회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함으로써, 조선족의 대북 투자 잠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데도 한국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조선족은 한국에 돈을 벌러 오고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 및 개방에서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김정일이 상해 방문했는데, 신의주를 대외 개방하는 것, 중국식 개방한다는 것이 조선족에게는 유리해요. 조선족 돈 많은 사람들 많아져서 신의주 개발에 들어가서 또 다시 무역 시장을 개척해서 그러고 나면 신의주가 성공한다 할 때는 북조선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중국처럼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하에 자본주의 경제가 실시될 수도 있고, 그것이 통일의, 하나의 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오직 경제로서 먼저 발전시켜 갖고, 그래야지 사람들의 의식이 트이지, “아, 이제 우리는 김정일만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갖고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래에 있었던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 언급한 신의주 대외개방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개방바람을 불게 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보였다. 특히, 이 개방을 선도할 주역으로 조선족을 꼽기도 하였다. 여기서 조선족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측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남한의 기업이 조선족 사회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조선족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 예로, 연길시

서기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기술 및 투자 자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동포 학생들을 모아 연변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좌담회를 서울대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들은 여기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고 한국 투자자를 많이 유치해서 조선족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⁵¹⁾ 이처럼 중국동포의 통일 과정에서의 기여는 단지 이념적으로 고국 혹은 한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뿐 아니라 고국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이해를 구하고, 거주국 안에서의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즉, 이들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주체적인 참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고국 및 거주국 사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통일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VI. 모국관 및 민족의식

남북으로 고국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해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조상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며, 민족의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마치 한국이나 한국인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처럼 여기고, 남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동포들

51) 연변 조선족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은 조선족들이 너무 자치주 내에서만 생활하고 더욱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사회 안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조선족들은 자치주 안에서 조선어를 쓰며, 조선어 교육을 받으며, 심지어는 중국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연변 파기대 출신 학생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못해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의 조선족 자치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노력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선족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민족’이라 하여 무분별하게 한국 정부에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 모국개념은 주재국의 정치이념이나 외교관계 혹은 해외동포의 개인적인 가족사나 이념지향에 따라 남한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모국’이나 ‘민족’에 대한 의식적인 반추가 없을 수도 있다. 박군은 모국과 민족에 대한 의식 형성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모국이나 민족에 대한 의식이 없이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동포들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중국 시장경제 개방과 한·중수교 등을 거치면서 미제와 괴뢰로 대표되던 남한의 위상은 새롭게 동포와 고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제가 한국이라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는 1988년 올림픽 개막식 볼 때 알았어요. 개막식 보기 전 날도 몰랐거든요. 그냥 남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북조선 만화책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보면 이승만 괴뢰군이고 그런 그림책들이 많았고 미국애들은 코 크고 남조선은 전부 괴뢰군들만 살고 있고, 사회가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 때 이것이 과연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그래서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녔어요. “저게 한국이다, 저게 한국이다.” 그래 갖고 사람들 막 들뜨고, 그래서 그 때 한번 사람들 혼란 시기 겪었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한국 갔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돈 많이 벌게 되고 그것이 계기 됐어요. 그치만 단지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경제적인 도움 받지 그 사회에 대한 연구나 학자들도 많이 없었어요.

조선족 사회는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국경을 넘어 왕래도 이루어졌다. 박군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박군의 어머니는 소학교 교사였으나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직업을 포기하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변에서 의류를 사서 북한에 갖다 파는 장사를 시작하였고, 박군도 엄마를 따라 소학교 4학년 때 북한에 가서 체류하기도 하였다. 도문을 통하여 북한에 건너가게 되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먹

을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갈 때는 항상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야 했고 가서 체류하는 집에도 돈보다는 현물, 특히 쌀을 주면 좋아했다고 했다. 기억나는 것은 북한에 머물 때, 체류하는 집에 딸아이가 있어서 박군의 어머니가 사탕을 주었는데 주인 집 딸아이의 엄마가 사탕을 반으로 쪼개서 반만 먹고 반은 나중에 뒀다가 먹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찬도 김치와 고추장뿐이었고, 아이스크림을 팔기에, 사먹었더니 물에 소다 탄 것을 얼린 것이라 맛이 없어서 한 입 베어먹고는 뱉어버렸다고 했다.

사회주의 이념 지향적 태도에서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실상이 어떻든지 간에, 북한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고, 남한은 돈을 가지고 있을 뿐 미제 괴뢰도당이었던지만, 이제는 남한의 대중, 물질 문화가 조선족 사회에 파고 들어 자리잡게 되었다. 연변에 노래방, PC방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으면 다음날은 바로 연변에서 “뜬다”고 했다.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세대 댄스 가요나 유행하는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또 다른 중국동포 여학생도 한국의 경제와 대중 문화가 유입되면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경제 위기와 탈북자들을 보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모국에 대한 의식이 없이 북한 사회와 친밀하게 지내왔던 중국 동포들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모국과 민족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모국 선호도도 바뀌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북조선을 모국이라 했는지 남조선을 모국이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때는 북조선과 많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고국이요, 모국이요” 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민족 문제까지 되기까지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전파했다고 생각돼요. 제가 한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변 사회에서는 우리 고국은 한반도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까지 없었어요.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상이 완전히 중국화 됐거든요. 오직 우리는 당을 따라서, 그리고 항상 감사 발표할 때, “당의 령도 하에서 이렇게 잘됐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딱 박혔어요. 학생들도 처음에 배웠

을 때, 공산당의 영도 하에 잘살고 어찌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이 꼭 잡혀있어 가지고 고국이나 민족관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특별한 민족 연구 뭐 이런 사회학자들 제외하고는… 족보도 문화혁명시기에 다 타버렸거든요. 홍위병들 다 뺏어가 버리고 태워버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족 관념이 없었어요. 한국 갔다오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자꾸 중국에 오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누나 (연변)과기대 다녔거든요. 그때 누나 동아리 해 갖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광청 지방에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처음에 가보니까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있고 소울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대요. “와, 이거 우리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막 감동돼갔고 눈물 흘리셨대요. 그거는 농촌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 민족이라고 관심해 주는구나. 그 때도 우리 민족이라고 조금 조금씩 인식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민족이다, 우린 꼭 뭉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전수해 주고, 그 영향으로,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 갖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받았다고 봐야 돼요.

북조선은 뭐냐하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어찌구저찌구…” 똑같은 거거든요. 체제가 다르지만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의 영도 하에 어찌구저찌구, 거기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 어찌구저찌구… 민족이랑 흡사해요. 사회주의 체제가 중요하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위에서 보여지듯이 민족 및 고국에 대한 의식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족 개념에 대한 의식은 한국 사람들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동포들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없었으며, 당의 지도노선을 따르기에 급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람들이 중국동포 사회를 방문하여 ‘우리 민족’이라는 정서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특히 연

변에 가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거나 연민을 보내며 ‘한민족’임을 자각시켜왔던 것이다. 이는 물론 민족주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눈물어린’ 민족정서의 감정 표출은 받아들이기에 어리둥절한 것일 수 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한국 사람들에게 의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모국의 말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불쌍한 동포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한 중국동포 여학생은 지적한다. 중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며, 조선족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에 기여했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자치주를 얻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한국 사람들은 종종 민족과 국적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한민족의 경우, 거주국의 국적을 지닌 그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해외동포가 동일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귀속시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koreanchinese 홈페이지 토론방에서 어떤 한국인이 일본동포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우리 민족’이라는 동일시를 하게 되지만, 중국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외국인”이라는 의견을 폈는데, 그에 대해 한 중국동포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폈다. 이는 단일 민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국인이 가지기 쉬운 국가(국적)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잘 지적하고 있다.

국적이 곧 ‘민족이고 동포’하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민족은 혈연이고 문화공동체이지, 국가와 이코올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헛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도 않고, 한국말을 못쓰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중 다수는 점점 자신의 조국은 현지이고, 조상의 고국은 ‘조선’, ‘고려’라는 사람들이 늘어갈 겁니다. (일본은 특유의 배타성 때문에 ‘조국’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 그들은 모두 다 동포로서 대접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굳이 한인3세니, 교포2세니 이런 말하는 것도 언어도단이구요?

민족과 국가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곧 한민족이 되고, 한국인이 되는 한국상황과는 다른 동네가 중국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의 일원이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저 건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 또 저 너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고, 또 이 옆에는 ‘일본국’의 국적을 갖고, ‘우즈베크’의 국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의 동질’을 말하는 것이지 속해 있는 국가 즉 조국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 님의 분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동포’가 되는 건가요? 그런 편협한 시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보지도, 보지도 못한 ‘고국’을 ‘조국’으로 삼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고국’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헷갈리지 마세요.

해외한민족은 국적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한민족을 지칭할 때 “한국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은 국적과 민족 구성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가 지구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민족 개념과 국가, 국적 개념의 테두리는 점점 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가 점차 벌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의 고국에의 개입도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재외동포는 한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한민족의 향방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제3자적 위치는 분단된 남과 북의 교류를 매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

VII. 결 론

이상으로 재중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중에서 중국동포 학생의 고국과 민족관 및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와 함께, 교통통신 등의 발달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을 증가시켜왔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흐름은 체제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들은 재외동포는 고국을 떠나(uprooted), 새로운 사회에 정착함으로써 고국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던 반면에 근래에는 해외동포들은 고국과 다중적인 관련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민족 국가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국을 망라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경제나 물질 자원이 확립되지 않은 한반도는 해외한민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해외동포의 역할은 주목할 만 하다. 통일과정에서 해외동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이산가족 교류를 매개하거나, 학문적, 인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으며, 경제 투자를 하거나, 문화적, 이념적 완충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재중동포 학생과의 면담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동포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통일과정에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체제, 이념, 문화가 이질화된 남과 북이 충돌을 극소화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경험하고 그 둘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개입하여 두 극단을 매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재외동포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의 고국이 무조건적으로 한국 혹은 남한이라고 귀속의식을 강요하거나, 중국동포에 대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사회로 박제화시켜 놓는다는지,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불필요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재외동포를 통일 역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본국에의 귀속 여부나, 현재의 국적 자체를 문제시하여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나를 따지며 배타시하기보다는 이들이 모국과 다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네트워크와 역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투자나 기술 자문 이외에도 개별 학생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역할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재외동포 모국 수학생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사람이나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즉, 현재에 실시되고 있는 언어나 민족 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개선시켜, 모국 수학생과 한국의 대학생들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이나 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모국 수학생들의 비공식적 역할도 한국과 중국 동포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주제보자인 박군은 중국의 대학들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중국어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민족 공동체 형성 및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추상적인 이념으로서 해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간직했는지, 혹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에 대해 논하며, 이들이 통일과정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이 해외 각 곳에 거주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적응력과 저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국 및 그들의 거주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겠다. 또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찾아내는 것 뿐 아니라 해외 한민족이 보유한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과정과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에 관한 연구

안 혜 영(국립보건원)

◁ 목 차 ▷

- I. 서 론
- II.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과 특징의 변화
- III.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need)와 지원
-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 V.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방향과 역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단을 규정하여온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발생과 대응방안은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방향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은 남북분단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 성격은 달라졌으며 특히 1994년 이후 이탈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이 시기에 따라 달라져 온 것은 남북과 관련된 주변정세 및 국내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기인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의 변화를 야기하고, 변화된 욕구에 대응하여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진입 순간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

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들은 상호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남한사회의 적응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지원정책은 남북분단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었다기 보다 남북대결에 보다 의미가 실려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이 남북 양체제의 선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체제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새로운 환경인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이들의 후세대, 그들이 통일 후 주민이든 혹은 그 이전 대량 탈북 사태의 주민이든 간에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자체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본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성원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사회적응의 상태를 유지 시켜 나가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빈곤, 실업, 부적응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인간을 중심으로 완충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적응의 상태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충족, 사회체계의 적응,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궁극적인 적응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연금, 의료보장, 생활보호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은 초기의 일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도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돈의 시간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개별화된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해 나가는 서비스로서 정책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상자 욕구에 맞게 무제한적이고 풍부한 서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특히 사회적 변동의 시기에 개인적 삶이나 개인적 위급 상황에 밀착되어 다양한 욕구 충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판이한 정치적 이념과 생활가치를 갖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혁명적인 흔들림이 있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의 기능은 특히 이러한 시작의 시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립 필요성의 당위가 있게 된다. 특히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의 방향 설정은 한국통일에 있어서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개별적 욕구에 대응한 준비 작업이며, 통일의 후유증을 줄여 나가는 방안개발에 기준점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적응과 통일후의 북한주민의 남한생활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즉 자발적으로 남하한 북한이탈주민과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하한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자발적이긴 했지만 단독이나 일부가족만 남하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탈주민과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하할 수 있는 통일이후의 상황과는 사회적응에 매우 차이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통일이후의 상황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에서의 생활에서 남한생활로의 전환과정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복지 영역이 담당해야 할 몫을 정립해 나감으로서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사회복지 지원책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적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 이후 탈북의 증가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가 남한사회

에서 잘 수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절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은 어떤 형태이어야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남한사회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적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 이와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해 나가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무작위로 7명을 심층 면접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집단대화모임에 참여하였다. 이 집단대화모임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이우정)에서 주관하였고 1997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기획되었다. 1998년 3월부터 1998년 7월까지의 주제는 「북한이탈여성의 북한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1998년 9월부터는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및 욕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통일부 주관 북한이탈 주민의 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수한 성격으로 연구자 개인의 전수조사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의 사용은 불가피 했으나 통일부 자료 보고서의 경우 본 논문의 방향과는 다소 달랐다. 따라서 원자료를 다시 CODING작업을 한후 SPSS(7.5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하였다. 원 자료¹⁾의 대상자는 1949년부터 1998년까지의 입국자였다. 그러나 1969년까지의 18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 1970, 1980년대의 입국자는 1명도 없었으며, 1990년대 입국자의 전부, 즉 1990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의 입국자 328명 중 유아·사망·미배출자 등의 42명을 제외한 국내 거주자 286명이 대상이 되었

1) 통일부의 자료 보고서의 조사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 1990년 이후 입국자 329명 중 국내 거주자 286명(유아·사망·미배출자 제외)대상으로 다시 총 214명(75%)의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함.
- ② 조사분석방법 - 설문지를 통한 우편 조사 (경찰청 협조)
- ③ 조사기간 - 1998.10.19 ~ 1998.11.14 (27일)

다. 이중에서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입국한 국내거주자 286명 중 응답해온 응답자 221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중에서 응답의 내용파악이 거의 불확실한 2명을 제외시켜 총 219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II.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과 특징의 변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주변상황과 남북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결정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남한사회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고찰해 나가는 과정을 본 장에서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특징 변화와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의 변화

1) 발생환경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주변적 상황과 시대적 변수에 따라 그 성격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관련된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남북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1990년을 전후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특징적 구분²⁾을 할 수 있다. 1990년 이전

2) 시기적 구분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1) 동구권의 변화로는 1990년 10월 독일통일, 1991년 12월 소연방해체 등의 요인들과 동구권과 남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 즉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정식 수교, 1990년 9월 소련과의 수교,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개선시기 등도 고려하였다.
- (2) 북한의 1994년 김일성 사망 등의 정치적 사건들과 남한 정권교체시점 등을 고려하였다.
- (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1993. pp. 6~20에서 보면 통일논의의 특징적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제1기 1945년~1953년 - 통일논의의 생성기(분단확정기)

의 분단체제고착화 상황은 1948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한국문제 처리과정에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여 자국의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정치 형태를 형성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권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분단 이후 김일성 중심의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자주·자유·평등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후 경제 재건의 당면성과 무력 통일의 불가능성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적 냉전구조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태의 고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구하게 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북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 후반에 현저하게 돌출되어 북한사회 전반의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1994년 김일성 사후 경제난 지속 및 설상가상의 자연재해 등에 연유한 식량배급제의 위기는 가부장제적 국가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남한에서도 반공을 기본 이념으로 군부를 성장시키고 정치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건설로 1960년대를 보내며 절대적 빈곤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목표는 군사정부체제하에서 달성되어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구조에서 구조적 취약점들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나 정치적으로 ‘유신’체제로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표면적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재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실현의 욕망이 커져가는 1980년대에 와서는 위로부터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주주의 제도화의 노력이 일반시민의 수준에서의 자유화 운동과 함께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반공 및 군사정부체제의 정치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치적 정당성의 배경이라는 국가안보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나가는 수단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 이후 북한의 체제 약화에 따른 상대적인 정치·경제적 우위의 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와같은 남북의 상황과 주변정세가

제2기 1954년~1970년 - 통일논의의 공백기

제3기 1971년~1987년 - 통일논의의 해방기

제4기 1988년~1993년 - 통일논의의 개화기

변화하는 상황에서 탈북은 가속화되어진다.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인정하기 시작한 북한주민통제기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완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제2경제 부문에서의 상거래는 점차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실제 제도적으로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 구조 등에 문제가 있어 탈북의 행렬은 불가피하게 증가되어질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남한으로 지속적으로 흡수되어져 갈 것이다. 남한에서도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 소위 햇빛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시각이 이데올로기적·정치적인 이용의 관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제반 관련시행령 및 제도를 개정하여 새로운 접근을 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2) 탈북경로의 변화

1990년대 이전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시점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1990년이전의 탈북 루트는 휴전선 일대를 통해 귀순하는 것이 보편적 형태였다. 이는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양대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남한 정부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이 휴전선을 통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탈출경로였고 간혹 해상이나 항로를 통한 귀순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귀순자의 대부분이 휴전선에 근접한 인민군 소속의 군인들이었으며 보편적인 일반주민들은 탈출욕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 환경적 상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소련의 변화로 시작되는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남한은 1989년 헝가리와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하는 등 모든 공산권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갖게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긴밀히 관련되는 중국과 러시아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포기하거나 내적 변화를 꾀하게 됨으로써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어 주요 탈출경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져 민간 경제인들도 ‘서해안시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경제인들과 접촉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게 되고 탈북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하며, 북한 사회 자체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북한의 내부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휴전선 일대를 통한 기존의 경로가 아닌 제3국의 외교적 거점을 통한 귀순형태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거나 러시아의 별목현장으로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탈출루트가 가능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출 경로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1990년 이후 1998년 10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본 탈출경로인데 1960년대에는 한반도를 경유한 경우가 약 94%, 70년대에는 약 80%, 80년대에는 약 37%로 점차 줄어들다가 90년대에 와서는 약 14%정도만 분포되고 오히려 제3국 경유가 약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 이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탈출경로가 매우 다양해 졌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체류(외화별이, 유학, 외교 등 공무수행)중에 심경의 변화로 망명하거나 북한을 직접 탈출하여 중국·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특히 탈북하여 제3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제3국 정부에 신청하거나 혹은 제3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등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불간섭 입장을 공식 표명한 이후에는 특히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UNHCR이나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한 입국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입국시에도 난민부여³⁾의 입장에 정확한 기

3)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 부여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 의정

준 확인이 불명확하여 쉽게 허가되지 않는 실정이다.⁴⁾

이제까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47조⁵⁾에 의해 처벌의 위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난민(refugee)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편 북한에서도 1996년말 이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처벌을 완화하여 왔고, 탈북자 송환과정상 비인도적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탈북자를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엄격한 의미의 난민(mandate refugee)으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식량확보 목적이 아니었거나, 특히 남한으로의 탈출과정에서 송환되는 경우는 참혹한 처벌을 당하는 실정이므로 북한주민의 난민지위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난민판정은 현지국의 주권 사항이며 다만 현지국이 요청하거나 난민판정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 UNHCR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에 따라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계층·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자”이다.

- 4) 난민부여에 있어 신원조회 및 신분확인이 되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남한으로의 망명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탈북으로 간주될 경우 망명허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5) 북한형법 47조는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 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남한 이주 경로⁶⁾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자국	육상	42 (64.6)	11 (73.3)	10 (20.4)	13 (4.1)
	해상 동해 서해 남해 계				1
					24
		18 (27.7)	1 (6.7)	7 (14.3)	0
	공중	1 (1.5)	0 (0.0)	1 (2.0)	25 (7.9)
제3국	중국/홍콩				1
	소련/유럽				143
	아시아				87
	미주				42
	계	4 (6.2)	3 (20.0)	31 (63.3)	1
계		65 (100.0)	15 (100.0)	49 (100.0)	273 (86.4)
					316 (100.0)

통일원, 1994, 1998.

3) 탈북동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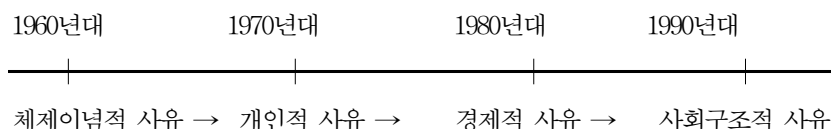
탈북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동기가 아닌 경우 대체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경제여건 및 체제의 특수성은 이들의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서 남한이주 북한 이탈주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의 난민규정은 민간차원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 동기의 경우는 특히 시기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원의 조사(1994)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남한체제와의 비교인식’, ‘체

6) 남한이주 경로 도표 중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분포는 정부 수립 후 1993년까지 귀순한 700명의 탈북자 중 순수귀순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1994년 통일원의 조사중 (단, 50년대 180명, 사망 및 이민 170명, 검거 및 자수전향 등에서 순수귀순자로 분류하기 힘든 150명 제외)에서 나온 자료이며 이 조사 중 1990년대의 분포는 제외시키고 대신 1998년 통일원의 1990년대 이후 이주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분포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체불안' 등 이념적 이유에서 북한을 탈출한 경우가 72%정도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보다 개인적 이유에서 탈북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는 탈출동기 중에서 경제·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는 탈출동기 중에서 경제·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표 2> 탈북 동기의 시기별 변화 추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의 변화추세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 사유로 탈북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1960년대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체제불만 및 남한사회와의 비교인식이 원인이 되었고 1970년도에는 탈북의 시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다가 1980년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별적인 사유가 다양하게 나타나 범죄 등으로 처벌을 우려하거나 불륜, 동반귀순 등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좀 더 정확히 1994년도 이후부터는 개별적 사유라고 보기 힘든 공통된 원인, 즉 북한 사회의 식량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북한이탈 남한이주자뿐만 아니라 탈북하여 국경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현황을 고려할 때 뚜렷이 대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주민들이라도 대체로 체제에 대한 반항이나 원망(탈북 재외동포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북한체제내에서 식량구입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 그 처벌을 약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가는 현상을 볼 때 북한 정치체제 및 사회구조적인 변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징의 변화

200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40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중에 사망 186명, 이민 33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총 1,187명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공식적 통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연도별 북한 이탈주민의 수

시 기	인 원	누 계	비 율
1969이전	485	485	30.4
1970 ~ 1979	59	544	3.7
1980 ~ 1989	63	607	3.9
1990	9	616	0.6
1991	9	625	0.6
1992	8	633	0.5
1993	8	641	0.5
1994	52	693	3.3
1995	40	733	2.6
1996	56	789	3.5
1997	86	875	5.3
1998	71	946	4.4
1999	148	1094	9.3
2000	312	1406	19.6
2001.5	188	1595	11.8
계	1595	1595	100.0

통일부 인도지원국, 2001. 5. 31

남한에 이주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의 특징을 <표 3>에서 보면 시계열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 경제사정에 별무리가 없고 남한 대비 우월적 입장을 갖고 있던 시기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8년 독일 통일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붕괴로 시작한 동구권의 변화는 북한의 입지약화를 가져오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탈북주민의 수를 증가시킨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탈북 주민외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

한주민까지 ‘탈북주민’으로 규정한다면 수적인 면에서도 재평가가 요구된다. 즉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현황을 통일원에서 1999년 잠정 집계한 숫자만 보더라도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민간연구기관은 약 10만~40만명), 러시아의 건설 및 벌목공 출신이 200~300여명, 기타 국에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로 소수의 인원이 간헐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체류를 묵인하거나 UNHCR을 통해 한국행을 협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약 700명 선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은신,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다. 남한에 이주해온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도 <표 3>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추세는 1997년까지 지속되다가 1998년부터 다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남한사회의 소위 IMF시기라 불리는 경제위기에 따른 남한정부의 선별적 수용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 현재 총 1,595명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표 4〉 1990년 전후의 일반적 사항

		1990이전	1990이후	계
성 별	남성	563 (92.6)	318 (76.3)	881 (86.0)
	여성	44 (7.3)	99 (23.7)	143 (12.0)
연 령	10세 미만	0 (0.0)	24 (5.8)	24 (2.3)
	10대	107 (17.6)	29 (7.0)	136 (13.3)
	20대	289 (47.6)	127 (30.5)	416 (40.6)
	30대	127 (20.9)	151 (36.2)	278 (27.1)
	40대	57 (9.4)	39 (9.4)	96 (9.4)
	50대	22 (36.2)	28 (6.7)	50 (4.9)
	60대 이상	5 (0.8)	19 (4.6)	24 (2.3)
출 신 성 분	벌목공 및 노동자	94 (15.5)	150 (47.5)	244 (26.4)
	군 인	244 (40.2)	22 (7.0)	266 (28.8)
	해외거주자	3 (0.5)	23 (7.3)	26 (2.8)
	당원 및 교사	11 (1.8)	38 (12.0)	49 (5.3)
	학생 및 무직	113 (18.6)	82 (25.9)	195 (21.1)
	자수간첩전향	142 (23.4)	1 (0.3)	143 (15.5)
가 족	가 구	1 (12.5)	51 (23.6)	52 (23.1)
	구 성 원	7 (87.5)	165 (76.4)	172 (76.9)

통일부 인도지원국, 1999

〈표 4〉에서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보면 1990이전에는 남성이 약 9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수가 증가하여 남성은 약 76%, 여성은 약 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단독 탈북은 거의 드물고 가족동반 이탈의 증가추세의 결과 여성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90년 이전 즉 1989년까지는 10세미만은 전혀 없고 20대가 약 48%로 가장 많으며 50대 36%, 30대 21%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60대 이상은 1% 미만의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30대가 36%, 20대가 31% 정도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10세 미만도 약 6%, 60세 이상도 약 5%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 현황도 가족동반 탈북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1990년을 전후하여 탈북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변화 중 가장 주목

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가족 동반 탈출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가족 동반의 사례 증가는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안정의 측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사회적응에 있어서 탈출하기전 사회내에서의 출신성분에 따라 이주한 사회에서의 적응,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1998) 북한에서 출신성분은 1990년을 전후한 탈북 주민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주로 군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자수간첩 및 전향한 사람이 약 23%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는 벌목공 등 노동자가 약 47%이며 학생이 약 26%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당원 출신자와 해외거주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군인 및 자수간첩 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북한에서 지내던 거주지역 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평안도가 약 26%로 가장 높고 휴전선 부근인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는 평양의 경우가 약 27%로 가장 높아 계층적인 면에서 중·상류층 부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전선 부근의 지역은 약 19%로 군사 분계선에서 이탈하는 군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함경도 부근의 탈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아서 남한 정부의 선별적 수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1990년대를 전후하여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출신성분, 직업 등에 따라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생활에서의 욕구의 변화와 적응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욕구의 파악은 이들의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절에서는 199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한 생활에서의 경제·사회 심리적 욕구형태를 알아보고 욕구의 만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need)와 지원

1. 남한에서의 만족현황과 지원정책

본 장에서는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이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연결하여 알아보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주요욕구(need)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만족도의 현황은 주로 1998년 조사시점까지의 총 입국자 328명 중 유아·사망·미배출자 등은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 2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이중의 응답 해온 219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⁷⁾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만족현황

(1) 남한 사회생활의 만족

전반적인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의 적응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의 거주기간, 연령, 가족형태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고 민간 단체 및 개인의 도움여부 등 가까이에서의 지지 요인과 채무 유무 등 경제적 요인에 따른 남한 생활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7) 총 대상자는 1949년부터 1998년까지 입국자였다. 응답은 총 239명에게 받았으나 1969년까지 18명이었고 1970년대 1980년대까지의 입국자는 1명도 응답자가 없었으며 1990년대 이후 응답자가 22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본 분석은 1990년대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응답의 내용파악이 거의 불확실한 2명을 제외시키고 총 21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5> 남한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	대체로 만족못함	매우 만족못함	계
입국년도	90	0 (0.0)	3 (100)	0 (0.0)	0 (0.0)	3 (100.0)
	91	0 (0.0)	6 (85.7)	1 (14.3)	0 (0.0)	7 (100.0)
	92	0 (0.0)	2 (66.7)	1 (33.3)	0 (0.0)	3 (100.0)
	93	1 (20.0)	2 (40.0)	2 (40.0)	0 (0.0)	5 (100.0)
	94	6 (18.2)	11 (33.3)	12 (36.3)	4 (12.1)	33 (100.0)
	95	3 (13.0)	8 (34.8)	11 (47.8)	1 (4.3)	23 (100.0)
	96	1 (2.9)	12 (35.3)	17 (50.0)	4 (11.8)	34 (100.0)
	97	13 (18.8)	40 (58.0)	14 (20.3)	2 (2.9)	69 (100.0)
	98	2 (10.5)	10 (52.6)	5 (26.3)	2 (10.5)	19 (100.0)
	계	26 (13.3)	94 (48.0)	63 (32.1)	13 (6.6)	196 (100)
연령	20세미만	1 (12.5)	5 (62.5)	2 (25.0)	0 (0.0)	8 (100.0)
	20대	5 (13.9)	21 (58.3)	5 (13.9)	5 (13.9)	36 (100.0)
	30대	7 (7.6)	41 (44.6)	38 (41.3)	6 (6.5)	92 (100.0)
	40대	3 (8.8)	19 (55.9)	11 (32.4)	1 (2.9)	34 (100.0)
	50대	4 (25.0)	6 (37.5)	5 (31.2)	1 (6.3)	16 (100.0)
	60세이상	5 (45.5)	4 (25.0)	2 (18.2)	0 (0.0)	11 (100.0)
	계	25 (12.7)	96 (48.7)	63 (32.0)	13 (6.6)	197 (100.0)
채무	있다	4 (8.9)	13 (28.9)	21 (46.7)	7 (15.6)	45 (100.0)
	없다	18 (13.6)	75 (56.8)	33 (25.0)	6 (4.5)	132 (100.0)
	계	22	88	54	13	177 (100.0)
민간단체 개인도움	받았다	7 (12.1)	39 (67.2)	10 (17.2)	2 (3.5)	58 (100.0)
	안받았다	13 (11.5)	43 (38.1)	47 (41.6)	10 (8.8)	113 (100.0)
	계	20 (11.7)	82 (48.0)	57 (33.3)	12 (7.0)	171 (100.0)
가족형태	단독	5 (16.1)	15 (48.4)	10 (32.2)	1 (3.2)	31 (100.0)
	복합	12 (12.8)	47 (50.0)	29 (30.9)	6 (6.4)	94 (100.0)
	계	17 (13.6)	62 (49.6)	39 (31.2)	7 (5.6)	125 (100.0)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한국생활 만족도 분포를 보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약 61%, 불만족의 경우가 약 39%로 분포되었다. 이는 뒤의 <표 7>에서 본 정부지원 정책의 만족도 분포결과인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과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지만 매우 만족한다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책에는 입국전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망하는 편이지만 전반적인 한국생활에서는 대체로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는 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한국생활 만족도에 관하여서 보면 20대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약 72%이며 30대는 약 52%, 40대는 약 65%, 50대는 약 62% 정도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거주기간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입국한 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독으로 지내거나 가족 등과 함께 지내는 것과 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와는 큰 연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무 유무별로 한국생활 만족도에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대체로 만족하지 못함이 약 47%이며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62%이다.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함이 약 57%로 가장 높으며 매우 만족함까지 합하면 약 76%로 나타나서 채무가 없을 수록 전체적인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이 한국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측면을 보면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대체로 만족이 약 67%,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약 79%이며, 도움을 안 받은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 못함이 약 42%로 가장 높고 만족 못하는 경우가 모든 약 51%로 분포되었다. 이 경우에도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이 있는 경우일수록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한 생활의 어려운 점

	빈 도	분 포
돈 버는 것	53	27.9
취업	38	20.0
남한사람과의 관계	33	17.4
언어	20	10.5
생활습관	12	6.3
외로움	34	17.9
기타	22	11.6
계	190	100.0

남한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꼽은 것 중 돈버는 일이 가장 많아 약 28% 정도이며 취업이 20%로 나타나 경제 생활과 관련 된

것이 거의 절반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는 외로움 18%, 남한사람과의 관계 17% 등의 순이다. 언어와 생활습관 적응의 어려움도 각각 11%, 6%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중 기타의 의견으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국민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차별되고 있음과 탈북자간의 차별대우가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있음을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함, 공부가 힘들, 건강의 악화, 북한 경력이 인정되어지지 않음, 북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죄책감, 해외 출국 제한 등을 힘든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

(2) 정착지원의 만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의 욕구충족을 초기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표 7>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약 11%,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약 28%로 나타나 대체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정착지원 만족도 분포를 보면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한 94년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10%, 만족하지 않는다는 약 77%로 분포되고 95년 매우 만족한다는 4%정도이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약 71%로 나타났다. 97년에는 매우 만족한다는 15%, 만족하지 않는다는 50%정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기복이 보이긴 하나 입국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 만족도와 관련해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관련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6월의 ‘귀순 북한 동포 시행령’은 초기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 94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1996년에 다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노출되는 불안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개정법’을 제시하게 되며 이것으로 97년 이후 불만족의 정도가 다소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11월에 정부는 다시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시불 형

태의 지원금을 약속하고는 있으나 일회용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표 7> 입국년도별 정착지원 만족도⁸⁾

		매우 만족한다	어느정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입국연도	90	0 (0.0)	1 (100.0)	0 (0.0)	1 (100.0)
	91	2 (28.6)	3 (42.9)	2 (28.6)	7 (100.0)
	92	0 (0.0)	2 (66.7)	1 (33.3)	3 (100.0)
	93	0 (0.0)	2 (50.0)	2 (50.0)	4 (100.0)
	94	3 (10.0)	4 (13.3)	23 (76.7)	30 (100.0)
	95	1 (4.2)	6 (25.0)	17 (70.8)	24 (100.0)
	96	3 (8.8)	5 (14.7)	26 (76.5)	34 (100.0)
	97	9 (14.5)	22 (35.5)	31 (50.0)	62 (100.0)
	98	2 (9.5)	8 (38.1)	11 (52.4)	21 (100.0)
	계	20 (10.7)	53 (28.3)	114 (61.0)	187 (100.0)
민간개인 도움	있다.	7 (12.3)	25 (43.9)	25 (43.9)	57 (100.0)
	없다	11 (10.0)	24 (21.8)	75 (68.2)	110 (100.0)
	계	18 (10.8)	49 (29.3)	100 (60.0)	167 (100)
주택형태	자가	3 (42.9)	3 (42.9)	1 (14.3)	7 (100.0)
	공공임대	2 (5.9)	12 (35.3)	20 (58.8)	34 (100.0)
	영구임대	7 (6.6)	21 (19.8)	78 (73.6)	106 (100.0)
	전세	3 (16.7)	11 (61.1)	4 (22.2)	18 (100.0)
	월세	2 (100)	0 (0.0)	0 (0.0)	2 (100.0)
	기타	3 (33.3)	3 (33.3)	3 (33.3)	9 (100.0)
	계	20 (11.4)	50 (28.4)	106 (60.2)	176 (100)

민간단체 및 개인의 도움여부와 정착지원 만족도 간에는 민간 및 개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정착지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별 정착지원 만족도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약 74%로 월등히 높고, 공공임대도 약 59%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기소유 주택의 경우는 14%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소유 주택의 경우 매

8) 만족도의 분포배열을 통일부 조사 설문지에서 3분류를 하였으며 등급간격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삭제할 수 없었고, 수정도 불가능하였다.

우 만족하는 분포가 43% 정도로 나타나 정착지원 만족에 주택 소유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불만족과 관련된 이유를 보면 지원금이 적다가 약41%로 가장 많고 취업이 안된다가 23% 정도이며 보조금 지급을 차별한다가 15%, 주택알선이 안된다가 약 10%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사회적응을 위한 조치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착지원 불만족 이유 중 기타의 경우를 보면 돈보다는 생활 능력을 키워주기를 바라며, 각 가정이나 개인에 맞는 개별적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일시금과 더불어 일상 생활 지원을 보충해 주기를 원하며, 지원 수준을 90년 이전 귀순용사법에 근거한 지급을 하여 형평성이 맞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통일부 조사에서 정착지원의 개념을 ‘경제’ 영역에 국한하여 카테고리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역할 개념을 암암리에 경제 문제에만 테두리를 정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게 한다. 정부의 역할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영역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분담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제도의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1990년 이후의 지원제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8>에서 개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정부의 지원제도의 특징을 1990년대 전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 관련 입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국내 입국자수는 290명으로 연평균 1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으며 1990년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는 988명으로 연평균 약 82명씩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997년 이후에는 연 평균 161명이 입국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지원관련법은 62년 이전까지의 월남 귀순자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조건없이 군안보기관에서 관리지원하였으나 62년부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진다. 이

당시 주무부서는 원호처이며 월남한 귀순자를 1년동안 조사한 뒤 사회로 내보내었다. 이것은 1974년 「국가유공자 및 특별원호법」으로 개정되며 주무부서 및 지원책 등 주요내용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1978년 12월 법률 제3156호로 「월남 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화 되어진다. 주무부서도 초기 원호처에서 귀순용사의 관리 및 업무를 지원하였으나 1984년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북한 이탈자들은 귀순용사로 간주되어 국가 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영역에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편 이는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즉 남한사회의 평범한 시민으로 적응했다기 보다는 남한사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국외자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정부 지원제도

기간		1990 이전		1990 이후	
		1962~1977	1978~1989	1990~1996	1997~2001.5
관련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62,4)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78,12)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97,7)
국내입국자 수		227명(연평균 14.1명)	63명(연평균 5.3명)	182명(연평균 26.0명)	804명(연평균 160.8명)
		290명(연평균 10.4명)		988명(연평균 82.3명)	
관련부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지원 내용	고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보호-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직업훈련 취업-특별임용(본인) 취업보호제도입(2000년 시):3년까지 취업보장, 고용지원금제
	소득	특정-정착금 지급, 50만원~100만원 거택보호	특정-정착금대폭증액 1,900만원~1억5000만원 거택보호	특정-정착금대폭축소 860만원~1500만원 거택보호	특정-정착금축소·증액 2,760만원(98,12), 사회보장제도의특례편입 거택보호
	주택	무상제공-50평 이상	무상제공-15평 이상	무상임대보증금: 840만원~1,2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무상임대보증금: 940만원~1,5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의료	의료보호 :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사회 복지 서비스	교육지원 : 귀순자 및 가족 사회적응교육	교육지원 : 귀순자 및 가족 사회적응교육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협의회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사회적응교육, 시설보호(정착지원시설 하나원-'97,7) 지역담당관제('99,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정부출현법제화(2000년)

통일부(인도지원국), 1999.10, 1999.7, 1998
민족통일연구원,1996

1990년대에 들어서면 앞 절에서 본대로 냉전체제의 와해와 남한과 사회주의권과의 우호적 관계 및 개방 흐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왔던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대규모 북한이탈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1993년 6월 법률 제4568호로 「귀순 북한 동포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존의 북한이탈자에게 제공하던 물질적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러시아 별목공의 집단 귀순을 계기로 지원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졌다. 즉,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7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지원 외에 북한이탈자의 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경력 등을 인정하는 등 남한 생활의 전반적 적응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업무의 통합을 위해 통일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타부서와 협의 조정역할을 해나간다. 즉, 국내입국(외무부) → 귀순 직후 보호관리(안기부) → 생활보호(보건복지부)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교육부+노동부) → 사후관리(경찰) 등 업무분담을 하나 전체적인 보호 관리업무는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또한 통일부 산하에 ‘북한탈출주민 대책협의회’를 두고 보호여부 결정, 정착지원의 중지, 종료, 보호기간의 단축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이탈주민의 관련정책들을 협의 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 시설을 마련하고 보호관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적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정착지원시설에서 3개월,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하고 있다. 정착지원시설의 경우 경기도 안성에 1999년 7월 부지 8천평, 건평 2천 5백평 규모로 개원하였으며 약 1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사회의 기본규범과 행동규범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점은 개정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성별 연령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동안 기본소양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1년 이내 기간동안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국내정착을 위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물질적 지원은 이전과 대동소이하며 교육 지원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비전액면제, 대학은 2년 면제, 사립대는 반액을 지원한다. 여섯째,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공무원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일곱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장, 공익법무관,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여덟째,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여 부족액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아홉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1997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책의 정부입장에서의 주요방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단순 사회적응이 아닌 남북한 사회통합의 시험무대로 삼아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조치의 마련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및 지역사회 적응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과 관련해서 62년 및 78년의 법에서는 귀순자의 취업을 특별임용 외에 의무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과 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직장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90년도에 들면서 특히 1994년 러시아 별목공의 집단귀순을 계기로 지원규모를 대폭삭감하고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하여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졌다. 즉,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주민이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93년 법에서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특별임용으로만 대체하게 되며 취업알선도 귀순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적용하며, 교육법 81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취업을 요청할 수 있고 요

청받은 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1997년 법에서도 의무고용제는 없이 특별임용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보호차원에서 취업보호제를 실시한다. 취업보호제는 하나원 정착시설 및 거주지 보호기간인 3년동안 취업보호기간을 한정하여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업보호제도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력에 있어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50%(대기업은 40%)를 1년 내지 3년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사업주는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62년도 법에서는 정착수당의 경우 3급으로 나누어 1급은 100만원, 2급은 70만원, 3급은 5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며 직장알선, 국공립 주택우선 입주권배정, 양로 및 양육지원을 하게 된다. 78년도 법에서는 지원책으로는 귀순용사는 신분 및 정보제공의 공적에 따라 황금 1,900g~14,500g의 보상금을 제공하며 휴대장비의 유형에 따라 10g~807,700g까지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약 1,9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는 대학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하여 교육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93년도 법에서는 대폭 삭감되어지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정착금은 단독귀순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의 20배, 2인 가족도 월 최저임금의 30배, 3인 이상의 경우는 월최저임금의 40배를 지급한다. 이는 약 86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된다. 가산금도 월최저 금액의 60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보조금은 휴대장비 및 정보가치에 따라 황금 10g~2,000g까지 보상하고 있다. 이것이 98년에 약간 증액되어 2,760만원으로 되어진다. 특히 조세감면특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2년동안 세금감면혜택(소득세)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주택지원의 경우를 보면 62년 법에서는 50평 이상의 주택을 무상제공하였고 78년 법에서는 아파트의 보급으로 15평 이상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93년도 법부터는 무상제공이 삭제되고 임대보증금을 840만

원~12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98년에 2,760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어진다.

지역사회 내에 들어와서 실제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최저생활을 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9>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평가액(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추가가구1인마다13만원씩증가
재산(실거레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보건복지부, 2001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범위 중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 대상자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은 <표 17>의 소득평가액 기준이하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1993년 이전의 법률에는 사회적응교육을 입국초기에 제공하고 있으나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초점을 두고 통일대비차원에서 이들의 전반적 사회적응을 고려하면서 이 부분의 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특히 1999년 7월부터 정착지원시설보호(하나원)를 3개월로 의무화시키면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 대한 정부출연을 공식화하여 현재 민간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 대해 정부출연을 명문화하여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교부해 나가는 것이다. 재단법인의 성격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한다. 종합생활상담센터를 운영(1999.5)하면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자매결연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대를 운영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 편입지원으로는 주민등록 발급등 신분안정을 지원하고 정착금 지원 등으로 초기 생계기반 마련, 취학 및 편입학 지원 및 취업알선, 민간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편입후 사회적응을 보면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2년) 전담관제를 운영하며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를 도입(1999.8시행)하고 있다. 이는 시·도 및 거주지 보호 담당관 지정, 의료보호·생활보호·교육지원·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과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및 민간지원단체와 결연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초기생활 적응의 안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지원제도가 마무리되면서 초기지원을 토대로 장기적 자립이 가능해야 정책의 효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직은 정부의 초기 지원제도가 장기적 자립과 적응의 발판이 되고 있지는 못하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마련이 우선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과 밀접하고 적절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커다란 골격의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의 도움을 민간단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역임이 나타났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편입되어 있는 분포는 남한주민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편입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자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초기지원정책 이후에도 입국초기의 안정된 상태 이상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기본 시각 정립과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욕구(need)의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에서의 주요욕구의 현황을 일반적 사항, 취업 및 소득 주택, 건강, 가족 및 사회생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입국 연도별 북한이탈 주민의 수를 보면 1994년 이후 수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가족구조별 성별분포를 보면 단독세대의 경우 여자는 전혀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세대의 경우는 여자가 약 35%, 남자가 약 6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합세대가 단독세대보다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단독세대도 약 24%정도로 나타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한에서 혼자 지내는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은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배려할 때 이들에 대한 고려를 다각도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혼상태별 성별 구조를 보면 미혼은 약 51%, 기혼이 약 49%이다. 특히 기혼에 있어서 동반 입국한 경우 남자는 약 58%, 여자 42%인데 입국 후 결혼한 경우에 여자는 전혀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결혼 변수와 가족구조 분포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경우는 단독으로 월남한 경우는 없으며 모두 가족 등과 함께 동반 입국한 것을 알 수 있다.⁹⁾ 본 통계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미혼여성 단독 월남의 경우가 간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 본 연구자의 「북한 여성과의 대화모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개별 면담에도 1명 - 1997년 입국)이 포함되고 있다.

<표 10>¹⁰⁾ 1990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남	여	계
입국 연도	90	3 (100.0)	0 (0.0)	3 (1.4)
	91	7 (100.0)	0 (0.0)	7 (3.3)
	92	2 (66.7)	1 (33.3)	3 (1.4)
	93	5 (100.0)	0 (0.0)	5 (2.3)
	94	29 (87.9)	4 (12.1)	36 (15.5)
	95	23 (92.0)	2 (8.0)	25 (11.7)
	96	27 (71.1)	11 (28.9)	38 (17.8)
	97	50 (65.8)	26 (34.2)	76 (35.7)
	98	19 (82.7)	4 (17.4)	23 (10.8)
	계	165 (77.5)	48 (22.5)	213 (100.0)
연령	20세미만	10 (50.0)	10 (50.0)	20 (9.3)
	20대	28 (75.7)	9 (24.3)	37 (17.3)
	30대	83 (89.2)	10 (10.6)	93 (43.5)
	40대	28 (82.4)	6 (17.6)	34 (15.9)
	50대	11 (61.1)	7 (38.9)	18 (8.4)
	60세이상	7 (58.3)	5 (41.7)	12 (5.6)
	계	167 (78.0)	47 (22.0)	214 (100.0)
	평균연령	35.75		
가족 구조	단독세대	33 (100)	0 (0.0)	33 (23.6)
	복합세대	70 (65.4)	37 (34.6)	107 (76.4)
	계	103 (73.6)	36 (26.4)	140 (100.0)
결혼 상태	단독입국	47 (69.1)	21 (30.9)	68 (100.0)
	동반입국	22 (57.9)	16 (42.1)	38 (100.0)
	입국 후 결혼	28 (100.0)	0 (0.0)	28 (100.0)
	계	97	37	134 (100.0)
학력	없음	36 (76.6)	11 (23.4)	47 (38.8)
	초등학교	4 (44.4)	5 (55.6)	9 (7.4)
	중등학교	1 (33.3)	2 (66.7)	3 (2.5)
	고등학교	3 (75.0)	1 (25.0)	4 (3.3)
	대학교	39 (90.7)	4 (9.3)	43 (35.5)
	북한에서 다님	13 (86.7)	2 (13.3)	15 (12.4)
	계	96 (79.3)	25 (20.7)	121 (100)

연령별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아 약 44%이며, 20대 약 17%, 40대 약 16%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족동반 탈출 증가의 추세로 20대 미만이 약 9% 정도, 60세 이상도 약 6%로 나타났다. 연령

10) 모든 도표의 경우 각 변수별 무응답과 비해당의 경우는 제외하고 도표화 하였다.

별 성별 분포를 보면 30대의 경우 약 89%, 40대는 약 82%, 20대 약 76%, 50대는 약 61%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10대와 60대가 많아서 각기 50%, 42% 정도이며 30대는 약 11% 정도만 분포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약 36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탈북의 주도세력은 30대와 40대의 남성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 여성과의 대화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면 50대 이후에 탈북을 주도한 경우는 대체로 자신의 가족 특히 다음세대들 즉 자녀들의 생활안정을 주목적으로 실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고 용

(1) 취 업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서 경제력 및 생활력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일뿐 아니라 남한 생활 적응에 기초적 요소이다. 취업률로 대변되는 고용의 상태를 통해 생활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취업률 분포¹¹⁾

		직업이 있다	직업이 없다	계
성별	남자	143 (86.1)	23 (13.9)	166 (100.0)
	여자	29 (60.4)	19 (39.6)	48 (100.0)
	계	172 (80.4)	42 (19.6)	214 (100.0)
연령	20대미만	5 (25.0)	15 (75.0)	20 (100.0)
	20대	31 (86.1)	5 (13.9)	36 (100.0)
	30대	82 (88.2)	11 (11.8)	93 (100.0)
	40대	33 (94.3)	2 (5.7)	35 (100.0)
	50대	16 (88.9)	2 (11.1)	18 (100.0)
	60세이상	6 (50.5)	6 (50.5)	12 (100.0)
	계	173 (80.8)	41 (19.2)	214 (100.0)
학력	없음	41 (85.4)	7 (14.6)	48 (100.0)
	초등학교	1 (11.1)	8 (88.9)	9 (100.0)
	중등학교	0 (0.0)	3 (100.0)	3 (100.0)
	고등학교	2 (50.00)	2 (50.00)	4 (100.0)
	대학교	38 (90.5)	4 (9.5)	42 (100.0)
	북한에서 다님	13 (86.7)	2 (13.3)	15 (100.0)
	계	95 (78.5)	26 (21.5)	121 (100.0)
결혼상태	미혼	46 (68.7)	21 (31.3)	67 (100.0)
	동반입국	32 (84.2)	6 (15.8)	38 (100.0)
	입국후 결혼	28 (96.6)	1 (3.4)	29 (100.0)
	계	106 (79.1)	28 (20.9)	134 (100.0)
적응교육	받았다	78 (92.9)	6 (7.1)	84 (100.0)
	받지않았다	82 (81.2)	19 (18.8)	101 (100.0)
	계	160 (86.5)	25 (13.5)	185 (100.0)
취업상담	받았다	27 (87.1)	4 (12.9)	31 (100.0)
	안받았다	97 (88.2)	13 (11.8)	110 (100.0)
	기타	1 (33.3)	2 (66.7)	3 (100.0)
	계	125 (86.8)	19 (13.2)	144 (100.0)
	평균 이직횟수: 3.16회 평균재직기간: 2.8년			

취직률의 경우는 남한 생활에서의 기초여건을 마련해주며 생활력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이다. 취업률 관련 분포를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표 11>과 같다.

11) 취업률의 경우 한국에서의 실업률 측정기준에 준하였다. 즉,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강연, 일용직노동 등 불규칙한 수입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성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약 86%가, 여자는 약 60%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80%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포되었다. 연령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40대의 경우 약 94%, 50대 약 89%, 30대 약 88%, 20대 약 86% 정도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약 51%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갖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생활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학력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율도 높은 분포를 보여 대학 졸업의 경우는 약 91%가 직업이 있었다. 결혼상태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미혼은 약 69%, 기혼의 경우는 평균 약 90%정도가 직업이 있었으며 특히 입국후에 결혼한 경우는 약 97%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입국후 남한주민과의 결혼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응 교육이수 여부별 취업률 분포를 보면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약 93%,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약 81%가 직업이 있었다.

취업상담 여부별 취업율을 보면 오히려 취업상담을 안 받고 취업한 경우가 약 88%, 받고 취업한 경우는 약 87% 정도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상담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취업상담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취업연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표 등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았으나 조사되어진 변수 중 관련된 결과를 연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을 보면 뚜렷한 공식적 직장없이 강연 노동 등의 불규칙한 일을 통해 수입을 벌고 있는 경우가 1/3 정도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및 은행원은 약 1/4 정도이며, 그밖에 학생, 자영업 등의 순서로 분포되고 있다. 즉 실제로 정규직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는 약 30% 정도 밖에 분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직업과는 상관없이 갖고 싶어하는 직종을 보면 전문직이 가장 많아 약 1/4이 넘으며, 생산기술직, 서비스직, 사무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갖고 싶은 직종중 기타의 경우에는 자영업이 가장 많았고, 돈이 되면 아무 일이나 하고 싶음, 개인택시, 무역업, 국가관리 기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의 왕래가 부자유한 상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2) 이직 및 직업 훈련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상은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번의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고, 한 직종에 평균 2년 8개월 정도 재직하였다. 관련 연구 논문에 의하면(안혜영, 2000) 북한이탈주민이 첫 번째로 갖는 직장의 경우 회사원 및 은행원이 거의 절반 정도로 가장 높고, 노동 자영업 학생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직장의 경우도 비슷한 분포이나 특이점은 교수·교사 직업에 분포가 늘어났다. 이는 첫번째 직장 기간에 학업이나 기술을 쌓아 직업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전환 분포와 현재의 직장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 및 연구원의 경우는 직업전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 및 노동의 경우는 직업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다니는 경우와 다른 직종과 겸업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직장을 전환한 이유로는 임금이 낮거나, 적성이 맞지 않은 등 내부적인 경우가 2/3 정도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해고되어진 외적인 변화는 1/3 정도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재 직장분포의 특징을 보면 입국기간이 짧을수록 공무원 및 연구원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입국 후 3년간 국·공기업체에 우선채용을 유도해가는 결과로 보여진다. 학생에 있어서도 정부가 학업보조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결과 입국기간과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영업 또한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회사원 및 은행원은 입국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 또한 상당하여 약 2/3 정도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의 종류를 살펴보면 봉급이 적은 것과 복리후생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탈북자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등을 들고 있다. 기타의 의견을 보면 업무의 어려움, 회사의 불경기, 주위의 색다른 인식(신용과 믿음을 주려하지 않

음) 등이 나타났다.

관련 논문(안혜영, 2000)에서 직업없이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보면, 정착금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종교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지원금이 1/10, 다른가족의 수입이 1/10 정도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연 및 아르바이트, 국민기초대상수급권자 지원금, 친구도움, 부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직업이 없는 이유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인 능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의 취업알선이 미흡해서 약 2%에 불과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본인의 지병 때문에 직업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많거나, 전과자, 남한사회 현실과악이 안되어서, 직업훈련중 등이 나타났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상담을 해본 비율은 약 24% 정도이며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약 6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향상은 이들의 경제 생활 안정에 중요한 작업이며, 취업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개별성과 기술력을 확보시켜 나가는 일이 기본적인이다.¹²⁾

12)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pp. 73~74. 우선 북한이탈주민 중에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분포를 보면 지금이라도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약 59%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연결 및 개별성과 기술성을 살린 직업훈련의 전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3) 소 득

<표 12> 월평균소득분포

	개인별소득	가구별소득
50만원 미만	33 (28.4)	6 (19.4)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50 (43.1)	10 (32.3)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4 (20.7)	11 (35.5)
200만원이상	9 (7.8)	4 (12.9)
계	116 (100.0)	31 (100.0)
북한이탈주민 월평균소득	555,233	
남한 근로자 월평균소득	1,425,797(1998년 기준)	1,732,409(2000년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상태를 통한 경제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개인별 소득의 경우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약 43%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이 약 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약 21%이며 200만원 이상은 약 8%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소득 약 56만원은 같은 시기(1998)의 남한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약 142만원 정도에 비교하면 39%수준에 불과하다. 직업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소득 분포는 남한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아 생활상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가구별 소득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약 36%로 가장 높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약 32% 정도이며 50만원 미만도 약 19%나 분포되어 있다. 개인별 소득에 비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생계 유지 수준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수급권자 범위중 기타 타 법률등에 의한 급여 대상자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 26 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¹³⁾은 다음의 소득평가액 기준이하에 근거하고 있다.

<표 13> 소득 상태 분포

	동 산	부 동 산	부 채
없음	14 (21.9)	58 (86.6)	135 (75.8)
1백만원미만	2 (3.1)	1 (1.5)	1 (0.5)
1백만원이상 ~ 1천만원미만	17 (26.6)	1 (1.5)	13 (7.3)
1천만원이상 ~ 3천만원미만	19 (29.7)	1 (1.5)	22 (12.4)
3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5 (7.8)	1 (1.5)	7 (3.9)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6 (9.4)	1 (1.5)	0 (0.0)
10억원이상	1 (1.7)	4 (5.9)	0 (0.0)
평균액	16,404,218	8,860,096	3,666,854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상태를 <표 13>에서보면 동산의 경우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인 약 30%로 가장 많고,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27%로 나타났다. 동산이 전혀 없다고 한 경우로 약 22% 정도이며 동산의 평균 소유액은 1,6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약 87%로 대다수이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억이상은 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자가 외의 임대보증금 및 전·월세를 포함하여 평균 886만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를 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가 약 75%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약 12%로 가장 높고,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7%정도이다. 부채의 평균액수는 36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부채를 갖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가장 높아 26%,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21%, 사기를 당해서 19%, 주택 구입을 위해서 11%정도이다. 그외 기타로는 병원비, 탈북과정에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탈북하려고 하는 친인척의 남한행을 돕기 위해서 등이며 또한 교통사고, 결혼자금, 벌금 및 카드 빚 절제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생활 관리 능력 및 자본주의 사회의 이해를 위한 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이 요구되어진다.

4) 주 택

<표 14> 주택 형태

	빈 도	분 포
본인 소유의 집	11	5.3
공공 임대 주택	36	17.2
영구 임대 주택	114	54.5
전 세	25	12.0
월 세	9	4.3
기 타	14	6.7
계	209	100.0
평균주택평수	15.8평	

주택은 남한 생활기반의 초석이 되는 요소이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착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형태는 위의 표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형태는 영구 임대 주택이 가장 많아 절반이상이 분포되어있고 공공 임대 주택이 약 17%, 전세 12% 순 이며 본인 소유의 집은 약 5%에 불과하다. 본인 소유의 경우 주택가격은 6,400만원이 평균치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를 보면, 가장 많은 임대 주택의 경우 평균 15.8평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10평 미만의 경우도 약 9% 정도로 분포되고 있어 주택 환경의 열악성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에서 알선해 주는 임대주택에서 살지 않는 분포를 보면 임대료 지불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직장이 멀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살지 않고 있으며 1/10 정도는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가족 수(가구)가 많아서, 사업실패로 집을 매매함 등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종별 주택형태는 회사원, 연구원 등 안정적 직장의 경우에 자기 소유의 집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거의 모든 직종에서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의 형태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세의 경우는 자영업이 가장 높고 회사원, 연구원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가 및 전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대체로 분포되어 있으며, 공공 및 영구 임대하의 경우는 불안정한 수입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안혜영, 2000)

5) 건 강

<표 15> 질병상태 분포

	질 병 율	신체 및 정신장애율
있 다	66 (36.3)	39 (22.3)
없 다	116 (63.7)	136 (77.7)
계	182 (100.0)	175 (100.0)

<표 15>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를 보면 질병률의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는 약 36%정도로 나타났고 특히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율은 약 22%로 분포되었다. 참고적으로 질병의 이환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50%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이 30%, 5년 이상 10년 이하, 1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실제 입국 기간과 질병률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도 상관관계가 없어서 주변의 가족의 도움은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민간단체의 도움 등과도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영, 2000)

질병이나 신체 및 정신 장애의 경우 특징은 질환율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실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2개 이상의 중복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소화기계 질환으로 위궤양·위염·위장병·대장염 등이 가장 많으며, 심혈관계 질환인 심장질환·협심증·심장병·고혈압 등, 근골격계 질환인 디스크·관절염·신경통·골절타박·골수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풍 등의 뇌혈관계 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한편 신체 및 정신 장애는 빈도 37case로 전체의 약 17%에 해당된다. 신경증 등의 정신과계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27% 정도이며, 전체 이탈주민의 약 4% 정도로 나타났다.

6) 사회심리적 측면

(1) 가족 및 사회생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과 관련된 특징을 앞에서 보았듯이 1990년 이후 특히 가족을 동반한 집단 이탈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는 이 데올로기 등을 포함한 정치적, 개별적 신상의 이유보다는 경제적 궁핍에 따른 집단적 생계문제가 심각한 원인이 되어 탈북행렬이 증가되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가운데 가족관련사항을 가족형태, 배우자, 자녀수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사항

		빈도	분포
가족형태	부부가족	33	23.7
	2세대가족	100	71.9
	3세대가족	6	4.3
	계	139	100.0
가족원수	1명	33	23.6
	2명	37	26.4
	3명	39	27.9
	4명	26	18.6
	5명 이상	5	3.6
	계	140	100.0
자녀수	없음	85	60.3
	1명	33	23.4
	2명	16	11.3
	3명 이상	7	5.0
	계	141	1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의 존재는 남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는 2세대 가족형태가 약 72%로 가장 많고, 부부가족이 24% 정도이며, 3세대 이상 가족은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원수를 보면 3명이 약 28%로 가장 높고, 1명인 경우는 약 24%, 2명은 약 26% 정도로 나타났다. 가족형태 분포와 가족원수의 빈도 분포를 종합해 보면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경우 혹은 결손가족의 형태로 지내는 경우 등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의 분포를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가 약 60%로 가장 많고, 1명은 23%, 3명 이상은 5%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을 들고 있는데, 학과 공부를 따라가기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고, 친구 사귀기, 성적 경쟁 등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교육체제와 틀린 점이 많고, 또한 남한에서의 교육열 및 사교육 부담 등으로 학교 공부에서 월등한 성적을 내거나 적응하기가 힘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투리, 외국어 이해 부족 등 언어의 문제는 또 학과 문제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지내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 밖에도 학비조달의 어려움이,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적 상식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교육방법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IV.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앞 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사회·심리적 영역에서의 욕구형태와 남한생활 만족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욕구형태가 만족된 상태로의 적응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적 대응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바람직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정책과 더불어서 실제 남한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14) 1998년 7월 북한 이탈 주민 K씨와의 면담결과 K씨는 현재 강남구 신사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의 교육비로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딸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일이 생기는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 딸이 학과 공부가 쳐져서 학원에 보내고 있으며 피아노 교습도 시키고 있다.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의 전개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욕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실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1)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의 필요성

(1)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확대 요구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1,595명이 입국하여 약 1350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 변화 및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자의 특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남자 중심의 청장년층 이외에 여성, 10세 미만의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의 적응의 차원을 떠나서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계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및 대책이 이루어져야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높은 비중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1년 5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1,59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사망, 이민 등의 사유를 제외하며 1,360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310여 가구 588명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약 43%가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3.6%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사회적응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욕구가 높은 영역이 경제적 안정이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정은 사회·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들 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3)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

앞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안정과 상관없이 남한 사회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이 경제적 지원중심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만족도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이 있을 때 향상되어 질 수 있다.

(4) 교회 등 민간단체 지원과 만족도의 긍정적 관계

교회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개발 및 지원은 이들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 결손가족형태에 대한 지원필요

90년대 이후 탈북형태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단위의 탈북은 대체로 결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손자녀와 부부,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부부와 아들 및 손자녀등의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결손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응이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남한 사회 적응, 특히 경제적 적응이 별다른 영향을 못주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서로가 해나갈 수 있는 지원 유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부담스러운 체계

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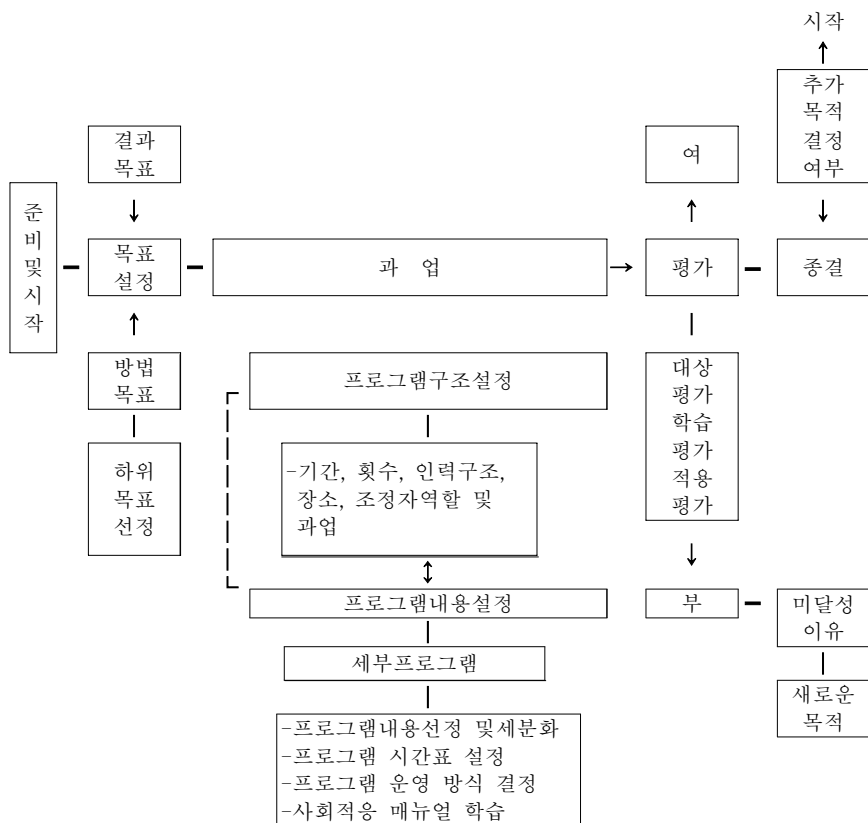
(6) 개별적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요구 - 전담사회복지사의 지도관리

탈북자 거의가 자의적 의도로 탈북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잘살아 보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실제 높은 생활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비생산계층 연령대의 탈북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탈북자의 평균연령이 36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은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개별적으로 세워나가고 지도해 주는 정책으로 정착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적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탈북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서로간에 영향을 마치게 된다. 실제 서비스의 통합이 되어질 때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개별적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기초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전개를 위한 모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은 실제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의 이민적응 사례보다 어려움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이질감과 더불어 50여 년에 걸친 적대감이 누적적으로 심화된 상황에서 적응을 해야하므로 그 어려움은 가중되어진다. 그러므로 적응과정은 보다 체계적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역할담당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응 경우는 체계적응과 일상생활의 적응영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의 주민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외에 탈북으로 인한 특수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은 크게 시작, 목적설정,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 평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1) 준비 및 시작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진다. 하나원에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원은 1997년 12월부터 시설공사를 하여 1999년 5월 총 공사비 121억 원을 들여 완공되어 1999년 7월 8을

하나원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립·자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3개월(총 520시간)단위로 교육생의 특성, 교육여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심리안정 정신 순화교육(76시간, 15%), 문화적 이질감 해소(268시간, 52%) 직업보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직업훈련 강화(140시간, 2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을 마친 후 지역사회로 나가서 실제의 적응을 시작하게 된다.

2) 목적설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되어진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2가지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결과 목표로 계획된 최후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계획적 변화노력 끝에 원하는 국면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절한 사회적응 상태를 위하여 4가지 체계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주민,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복지사, 정부가 각기 주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둘째 방법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결과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추구되어 질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주요 욕구 발견, 지역사회와의 관계 수립, 주요문제 발견, 가능한 해결 방안접근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각 영역마다 주요 하위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다. 목적설정의 사례¹⁵⁾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15) 사례의 경우는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는 적응 프로그램을 참조 하였다.

[목적]

초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 목표 1 : 사회적응 정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응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하위목표 ① 초기면접을 실시한다.
 - ② 사회적응 욕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목표 2 : 다양한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일상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하위목표 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입출금,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을 경험한다.
 - ②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의 종류와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 ③ 백화점, 할인마트, 시장을 직접방문하여 각기의 특징과 차이점을 체험하고 장단점을 파악한다.
 - ④ 언어 훈련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목적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특수한 과업이 있게 된다. 이 과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다. 목적을 과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프로그램은 구조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다. 프로그램의 구조의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간, 횟수, 서비스 인력구조, 장소 협력자의 역할 및 과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간 격	매주 2회
소요시간	10:00~15:00	회 수	총8회(16 session)
인 력	주지도자(담당 사회복지사1명), 보조지도자(자원봉사자 1명) 기타(신변보호담당관1명)-총 3명		
장 소	은행, 동사무소,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우체국, 경찰서, 관공서 대화복지관, 영화관, 방송국, 불령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택		
지도자의 역할 및 과업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기관실무자 ①전체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②세부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③세부프로그램 준비물 준비 / 프로그램 진행 ④초기면접 실시 ⑤사회적응 욕구 체크리스트 작성 ⑥과정기록작성- 과정기록,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부프로그램 평가, 지도자의 역할 수행평가 등을 기록 ⑦예산수립 및 집행 ⑧차기 프로그램 방향성 모색 ⑨전체종합평가서 작성		
프로그램 매개체	①언어 훈련과제의 제시 및 수행 ②각종설문지(사회적응욕구 체크리스트, 사전사후 설문, 만족도 설문 등) ③토론 ④체험중심		

또한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영역, 지역탐방, 문화탐방,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에 따라 세부적인 영역 및 내용이 구성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시간표 설정, 프로그램 운영방식 결정 사회적응 매뉴얼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 나가야 한다.

(1) 전체일정

시간	준비단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비고
	11/9	11/15	11/17	11/22	11/24	11/29	12/1	12/6	12/8	
10:00	초기면접	일상 생활 적응 I	지역 탐방 I	일상 생활 적응 II	서울 드라 이브	자원 봉사 I	지역 탐방 II	일상 생활 적응 III	일상 생활 적응 IV	
12:00	사회적응 욕구	점 심 식 사								
13:00	체크리스트 작성	여가 생활 I	문화 생활 I	여가 생활 II	서울 드라 이브	문화 탐방 II	자원 봉사 II	문화 탐방 III	소감문 작성/ 종결설문	
15:00										

(2)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기	목표	프로그램명		내 용
준비 단계	1	준비단계	초기면접	①초기면접을 통한 대상자 파악 ②사회적응욕구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자직접작성)
1 f 7	2-①	실 행 단 계	은행	①통장개설(주민등록증, 도장) ②입출금,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실행 ③카드발급 및 활용 ④프로그램 평가(평가설문지 작성)
	2-②		동사무소	①거주지 해당 동사무소 방문 ②사전에 담당자와 의사소통 ③주민등록, 인감, 호적, 세무 대형폐기물, 사회복지등의 민원사항 ④프로그램(평가 설문지 작성)
	2-③		백화점 할인마트 시장	①재래시장, 할인마트, 백화점 방문 ②백화점(롯데백화점), 할인마트(LG마트), 시장(가락시장) ③프로그램 평가(평가 설문지 작성)
	2-④		언어훈련	①매회 프로그램마다 언어 훈련 실시 ②언어 훈련 내용 문서화 ③언어 훈련 과제 부과

4) 평 가

평가는 계획적 변화과정의 계속되는 활동의 하나로서 과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적응노력의 방법과 목표의 재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반응 평가로 북한이탈주민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부분이며 둘째, 학습평가는 북한이탈주민이 프로그램 수행이 전과 후에 남한 사회인식정도와 남한 실생활의 편이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셋째, 수행평가의 경우는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해 나가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계속되는 목적 및 목표에 feedback을 주게 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기여해 나갈 수 있게 된다.

5) 종 결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적용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은 종결하게 된다. 종결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의 완전한 적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착점을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2년 정도 무적인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에 참여를 구성할 수 있다. 의무적 기간동안 실제 전담사회복지사의 지도하에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남한 실생활 적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방향과 역할

1. 사회복지 지원의 방향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시각과 정책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구호대상으로 보느냐 혹은 궁극적인 남한국민의 일원으로서의 통합적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였는가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¹⁶⁾. 이는 곧바로 우리가 북한주민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느냐는 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을 통일을 같이 이루어 갈 주체라고 인식한다면, 이들이 위기상황을 피해 탈북하였을 경우 제대로 보호하여야 하며, 국내 입국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주민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한편 스스로의 탈출욕구에 의해 남한으로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도 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정책이 갖는 통일환경 및 사회통합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집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활용에 있어서 정부가 갖을 수 있는 정책의 동기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민간의 동기와 역할 설정을 유도하게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정책 전개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돕는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돕는 역할에 밀받침되는 동기의 유형도 새

16) 오혜정, “남과북을 이어주는 탈북자,”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지움 자료집(서울; 1999). p. 7.

로운 것은 아니다. 돕는 동기의 유형 발달은 이미 전 산업시기에 태동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책을 향상시켜 나가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다. 동기의 다양한 유형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입장(supporter)과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입장(helper)으로 분류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영역을 정부 혹은 기관으로 보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영역을 민간 및 사회사업가로 보았다. 이들의 동기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까지 네 단계, 즉 인도주의(humanitarian), 사회통제(social control),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인도주의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난과 불행을 인도적 차원에서 덜어 주려는 측면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통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불만족을 억제하거나 위기적 문제의 성격을 재조정하려는 체제 유지적 형태의 동기이며 사회적 효율성은,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지원하여 받은 도움을 되갚는 형태의 것이며, 사회적 변화는 불공정한 사회적 조건을 제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옹호해 나가는 동기이다. 한편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 성향에서 개혁적 성향까지 네 단계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 첫째, 순수한 이타주의(altruism), 둘째, 자기향상(self-advance-ment)의 바람 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기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시민으로의 생활을 유도하려는 동기, 셋째, 대상자의 변화 즉, 북한이탈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넷째, 사회의 변화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을 해나가는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양측의 교차점은 16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만나는 점은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동기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서로 특별한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다. 한편 각기의 동기들이 대칭적일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즉 서비스가 체계화되어지지 않으면 비 종교화되기가 힘들게 된다. 두 축의 동기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

17) Catherine Jones, *patterns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1985) pp. 93~101.

비스는 전문적 형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동기유형을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은 생활안정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어지며 이는 동기의 측면에서 정부 입장의 인도주의의 관점이나, 민간입장에서 순수한 이타주의 내지는 자기향상의 관점은 벗어나야 가능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영역은 사회적 통제 즉,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적 문제를 해결하여 불만족을 억제해 나가는 부분부터 사회적 효율성까지로 경제적 독립을 할 때까지 지원한 후 이들이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한사회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남한사회로 통합되어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적 요소들의 제거 작업이 필요한 사회적 변화의 동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위기적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갈등과 혼란의 기간을 잘 넘겨 재사회화를 통한 남한사회로의 통합을 유도하는 사회적 통제의 동기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향을 변화시켜 나가는 대상자 변화의 동기의 범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측면 적응의 문제는 매우 개별적 형태이며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어느 영역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또한 적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갈등 및 동화의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불행함 등을 덜어주는 차원의 인도주의적 동기와 순수한 이타주의의 관점 혹은 자기향상의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살피나가는 동기유발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차별화 된 기준 하에 정책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시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체제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역은 경제적 지원중심의 정부 지원제도와 더불어 사회심리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앞에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욕구는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차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경제적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심리적 안정이 연계되어질 때 전반적 적응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형태로 진행되어 질 때 적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정부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생활전반의 지원요소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남한 생활의 적응을 높혀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회복과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하여 사장 체계밖의 경제적 이전방식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급여배당 메카니즘 기능을 하게 되며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로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국가에 의해 최저한의 평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가정 집단에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민간영역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자립 및 사회적 기능회복을 통한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와 민간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경제적 급부중심의 국가정책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민간영역에서 개발 담당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어려움없이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질감과 적대감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을 고려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단계의 하나원시설에서의 3개월 적응 훈련과정이 있다. 이후 지역사회로 나아갔을 때의 적응을 위한 전문적 개입은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편입 후의 과정을 보면 사회적응 및 안전을 위하여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 전담관제(2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

고있다. 또한 1999년 8월 이후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를 도입 시행하여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관 및 민간 지원단체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민간 및 종교 단체의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의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제의 의무화(2년)가 요구되어지며,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역사회 복지사가 맡아 전문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국가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복지의 본래적 목표인 인간의 개별적 사회적응에 준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장기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구영록, 임용순.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 국토통일원. 『과학적 통일 이론 연구』, 서울: 1976.
- 김국진 외. “남북관계 현황 및 96년 정세전망,”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5.
- 김대중.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서울: 대한민국정부, 1998.
-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연세대통일연구원, 1996.
- 김연명.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연구 : 의료보장제도와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 1991.
- 김진수. “서독의 분단관리 정책과 통일 후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1994.
- 문옥윤. “북한의 보건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의료보험관리공단』. 1989.
- 문옥윤 외.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보건사회연구논집』.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가족정책의 변화』. 1993.
- _____.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적응 실험교육 프로그램안』. 1997.
- _____.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1997.
- _____.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1997.
- _____.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1998.
- _____.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 1994.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1998.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1996.
- _____.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5~1996』. 1995.
- 박경애. “귀국 청소년 적응력 향상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5.

- 박순성 외.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민족통일원 연구보고서』. 1993.
- 박영호 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분석- 전문가인식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9.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6.
- 보건과 사회연구회. “북한 사회주의 이행발전과 보건의료,”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론』. 서울: 한울, 1990.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7.
- _____. 『국민기초생활안내』. 2001.
- 베르너 푸쉬라. 『통일독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93.
- 빅조지, 폴 윌딩 저. 남찬섭 역,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문제,” 통일원, 1999.
- 선한승.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1995.
- 송의호. “귀순자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수업,” 『월간중앙』. 1995, 1.
- 신상진. “중·북 관계전망 - 미·북 관계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1997.
- 신영석. “북한 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 『서경대 제4회 통일학술발표 논문집』.
-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오정수. “북한의 사회체제 변동과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 사회문화적 측면” 1995.
- _____. “남과북을 이어주는 탈북자,” 『통일과 카톨릭 사회복지』, 21세기 카톨릭 사회복지 심포 지움 자료집, 1999.
- 월렌스키외 저, 남찬섭 역. 『비교사회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2.

- 윤덕룡, 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연세대통일연구원논집』. 1997.
-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영남정치학 회보』. 제5호 1995.
-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실태와 정착 지원의 새로운 접근,”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9.
- 윤인진.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 『한국사회학회』. 1999.
- 이금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우리의 과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7.
- 이금순. “탈북 주민의 국내 정착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장호. “남한 이주자의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1999.
- 전우택, 민성길.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대책을위한대토론회자료』. 서울: 1996.
-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좋은 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도출판, 1999.
- 토드 부크홀츠 저, 이승환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현대 경제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 서울: 김영사, 1989.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7.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매뉴얼』.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001.
- 한겨레신문사. 『통일준비 여성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7.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동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 한국복지연구회.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3.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서울: 열음사, 1990.

-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서울: 열음사, 1990.
- 한국정치연구회편. 『국가와 시민사회: 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시민론』. 서울: 녹두, 1993.
- 홍원탁 외. 『IMF 시대 한국 사회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울대학 사회과학대학, 1998.
- 후리드리히 에베르. 『독일통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1992.
- Anderson, Gosta Espin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1990.
- Berry, J. W.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1988.
- Jessop, Bob. "Towards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Preliminary Remarks on Post-Fordist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0. (Spring, 1993).
- Jones, Catherine. *Patterns of Social Policy :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Analysi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85.
- Kitschelt, Herbert.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apadakis, Elim & Peter Taylor-Gooby,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Welfare: State, Market and Community*. Wheatsheaf Books, 1987.
- Pierson, Christopher. *Beyond the Welfare State?* Londodn: Polity Press, 1991.
- Wainwright, Harry. *Arguments for a New Left: Answering the Free Marke Right*. Blackwell, 1994.
- Wilensky, Garold.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UC Press, 1975.

Wilensky, Harold. *Leftism, Catholicism, and Democratic Corporatism: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Recent Welfare State Development*. Flora and Alber, 1981.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 성 수(성균관대학교)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III. 1950~6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IV. 1970~8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 V. 마무리

I. 문제 제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나온 지 1주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지난날의 남북관계를 감안해보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다양한 교류가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렇다고 마냥 장미빛 미래를 점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솔직한 감회이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지난 시절의 역사적 경험을 외면하거나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결여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단순히 위로부터의 통일 노력, 정치적 차원의 화해와 협력, 교류와 통합에만 집착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할 경우, 분단 극복의 다시없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단기적 변수를 정밀 추적하는 정치·경제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남북관

계의 내재적 흐름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터이다. 이에 지난 세월의 남북 문화간 교류와 인식을 살펴보고 현재적 위상을 정립한 후 가까운 미래에 문화적 통합방안을 향한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문학예술계에서 남한 문학예술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하여 통일 정책상 문화적 통합논리의 한 근거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시기별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해방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인식을 추적하면 시기에 따른 역사적 변모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자료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은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1960~1970년대와 1980~1990년대가 조금씩 다른 것이 확인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을 중심으로 한 내재적 사료 비판과 역사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1945년 이후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사조 중심의 문학예술을 정립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남한 문학예술을 부르주아적 잔재로 비판한 내용을 고찰해볼 생각이다. 또한 1950~1960년대의 수정주의 비판과 주체사상의 유일사상 체계화 과정에서 드러난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분석하고, 1970~1980년대 항일혁명문학예술에 근거를 둔 새로운 주체문예론과 수령형상문학의 정립과정에서 남한 문예가 배타적으로 매도된 내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0년대 이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르러서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이 변모한 사실과 앞으로 전개될 남북 문화 교류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논의 속에서 통일 논리의 사회문화적 시각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제17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p. 121. 참조. 이 글은 본 주제와 관련된 유일한 선행연구로서 대부분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예증 텍스트가 『조선중앙연감』과 『근로자』 밖에 없는 탓에 역사적 추이와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II. 해방직후와 6.25 전쟁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는 1948년의 정권 성립 초기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 기초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론이 창작과 비평의 공식원리로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의 서정과 낭만을 배제하고 오로지 당과 인민에 복무하는 무기로서의 당(黨)문학을 표방한 셈이다. 그 주된 핵심을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나중에 ‘인민성, 로동계급성, 당성’으로 바뀜)이라 하여 노동계급 등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며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응향』 지 필화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순수문학의 설 땅을 원천봉쇄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문학예술을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미제의 사상적·문화적 침략으로 이루어진 부르주아적 사상미학의 잔재로 규정했던 것이다.²⁾

8.15 전후 남북한의 문학예술이 갖춰야 될 올바른 방향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 토대 위에서 마련된 민족문학론이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³⁾ 해방공간의 남한 문단에서 벌어진 좌우익 문학예술 논쟁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민족문화, 민족예술을 외쳤지만 실은 계급문예론과 순수문예론의 대립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 논쟁은 문예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을 주장하는 좌익의 견해에 맞서 순수문예를 표방하는 우익 인사들이 순수문학적 민족문학의 구호를 들고 나온 데서 벌어진 이론투쟁이었다.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 좌익의 진보적 이론가들이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김동리를 비롯한 우익 민족 진영 이론가들은 참다운 민족문학은 순수문학이어야 한다고 반론

2)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 문학계의 반종과 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참조.

3) 해방직후의 문학운동과 문학논쟁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모은 대표적인 논문집으로,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 1, 2권(태학사, 1990)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이 시기 북한문학의 동향을 정리한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모은 것으로 안함광 외, 『문학의 전진』 (평양: 문화전선사, 1950); 안함광 외,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등을 들 수 있다.

4)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통일문학』 (계간) 29호 (평양: 평양출판사, 1996. 6), p. 343.

을 폈던 것이다.

특히 1946년 결성된 좌익문예인의 최대 조직인 조선문학가동맹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의 좌익 문학예술인들은 민주주의적 민족문화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자주적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과 근대적 문학예술의 합법칙적인 발전방향에 비추어볼 때, 그 내용은 당연히 일제 잔재를 반대하고 민족 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민중의 이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민주주의 민족문화예술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⁵⁾ 그러나 좌익 문학예술인들이 대부분 월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체포 투옥되거나 지하에 들어가 버려서 논쟁은 더 진전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좌우익 문학예술인 사이에 격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벌어지고 난 뒤 남한의 주류를 차지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순수문학예술론이었다. 「예술조선」, 「백민」, 「문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익 진영의 주장에 따르면 좌익 진영은 문학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 존엄성을 무시한 채 문예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은 남한의 진보적 문예는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대다수 순수문예는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즉, 순수문학예술론이 실은 ‘색정과 퇴폐주의, 친미사상’ 등을 선전하면서 미국의 남한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공공연히 비호하는 사상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한의 순수문학예술은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공사상과 이른바 ‘숭미(崇美) 사대주의사상’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부식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⁶⁾ 북한에서 남한의 외래 예술 중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할리우드 영화와 재즈음악, 발레, 누드화 등이다. 특히 미국영화의 범람으로 인해서 남한사람들이 살인과 강도, 횡령, 패륜, 허무, 굴종으로 일관된 퇴폐적 오락영화에 빠짐으로써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서 생활의 건설적 방향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우용 편, 앞의 책에 실린 윤여탁, 임규찬, 임현영, 서경석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6)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 95.

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내용을 가진 영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폭력물, 에로물, 멜로물 일색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미술에서는 누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서양미술사의 전반적 흐름을 볼 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양식을 부흥시킨 르네상스 이후의 근현대 조각과 회화에서 흔히 소재로 채택되는 나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의 고결한 미풍양속을 모독하고 패덕과 패륜을 설교하는 색정미술은 미국문화를 부식하는 직관물로,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로 되었다”고 할 정도이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⁷⁾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미술 대부분을 ‘색정미술’로 매도하고 한국의 풍속을 타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이라 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해이다. 인체 누드는 서양에선 이미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와 조각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선택된 예술적 주제의 대상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후 미국이 남한에 영향을 주기 훨씬 이전인 20세기 초기에 일본 유학생 출신 서양미술가에게 일찌감치 유입되었던 것이다. 인체 누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술의 근대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남한 예술에 대한 비판의식이 앞선 나머지 무리한 비난을 불러온 셈이다.

음악에 대해서는 김일성 자신이 직접 나서서 미군에 의해서 수입된 남한의 재즈음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즈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즈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무디게 합니다. 자즈는 혁명적 인민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야 하겠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퍼뜨리고 있는 독소를 받아들여 스스로 자기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즈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민족적이면서 언제나 혁명적인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⁸⁾

7) 위의 책, p. 188.

북한에서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재즈음악이나 ‘나체 무용’으로 보이는 발레가 남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윤리도덕을 난잡하게 어지럽히도록 독소를 뿌려놓는다고 믿는 것이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은 모두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구나 알아듣거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악의 현대화란 이름 밑에 민족음악을 말살하는 크로스 오버 연주라든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재즈와 전통민요의 결합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대음악’의 새로운 조류라 할 수 있는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일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배격한다.⁹⁾ 이른바 음악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착취계급들의 비위애나 맞는 타락한 음악은 민중의 혁명의식을 무디게 하는 퇴폐적인 것이고, 감상과 비애에 잠겨 죽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사람의 마음을 음란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곡조들은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다.¹⁰⁾

북한의 남한문제 인식은 장르상의 기본적 의사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문학은 남북한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해방 직후 우파 문예인의 주류는 누구인가? 이들은 주로 1920~30년대에 카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에 반대하여 민족주의 문학 진영을 이끌었던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황순원 등 자연주의 및 순수문학과 작가들이었다. 그들이 발표한 소설의 주요 내용은 일제시기 지주, 매관자본가, 친일파들의 생활을 회상하고 그들의 행위를 비호하거나 8.15 광복후 좌익 인사들의 활동과 생활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해방 직후 남한 문학작품 중 특히 비난의 초점을 맞춘 것은 염상섭의 『두 파산』과 김동리의 『역마』 같은 소설이었다. 이 작품들은 사멸하여가는 옛것에 애착을 보이며 온정주의를 예찬하는 등 순수한 인간성을 추구한 작품인데도, 그러한 인도주의의 발현이 민중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여러 모순들을

8)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 11. 7,”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 :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8), p. 156.

9) 미 상,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남조선 음악예술,” 『조선예술』 (1973. 12), p. 115.

10) 김일성,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은폐하였다고 비판되었던 것이다.¹¹⁾

해방직후 남한 문학예술의 순수주의가 과연 미국의 사상 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식민지 예술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반공사상과 ‘숭미(崇美) 사대주의사상’을 세뇌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매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해방 직후의 혼란상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비판하거나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 순수주의의 한 계일지는 몰라도 친미와 반공이 아직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만약 그런 사상이 적극적으로 노골화되었다면 이미 순수문학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문학예술의 순수주의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정치적 상황이 변했을 때 친체제적인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스스로 전략한 변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30년대의 순수문학과들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 이전처럼 현실을 떠나 정치적 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군국주의 과시증화된 일제의 주구가 되어 친일문학을 했듯이, 6.25 전쟁 전후에 순수주의를 지키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말이다.

북한에서 문제삼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 전쟁을 전후해서 남한의 문학예술인들은 이전까지 좌익에 대항할 때 사용하던 ‘예술의 초계급성’이니 ‘순수예술’이니 하는 슬로건을 버리고 갑자기 문학예술과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반공적인 문예노선을 추구하였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을 합리화하고 남한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전쟁 후에도 문학작품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 국책을 옹호하는 데 두고 반공 노선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이다.¹²⁾

해방 직후부터 전쟁기 남한문학에 대한 평가가 그리 공정치 못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교육정책 자료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전후 처리과정에서 남로당계 월북작가들을 숙청한 바 있는¹³⁾ 북한 당국에서는 이 시기 남한문학을 ‘미제의 어용문학인 남조선의 부르주아 반동문학’으로 규정하면

11)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p. 96.

12)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조선문학』 (1966. 1), p. 95~96.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용, “북한 문학계의 반종과 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 문학,” 참조.

서 그 주된 담당층이 이태준이 조직 지도한 9인회의 계승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⁴⁾ 남한문학이 순수주의와 정치적 중립주의를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면, 그 예로 황순원과 모운숙 작품을 들고 있다. 즉, 1954년 자유문학상을 수상한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를 두고 해방기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지주를 옹호했으므로 반동으로 몰거나, 모운숙의 시 “유혹” (『문예』 지 수록)에서 “그대로 나를 껴안고 죽음으로 가주오”라는 구절을 문제삼아 미국식 사고와 생활양식을 찬양하는 시인이 색정에 흐느끼면서 절망과 죽음을 예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¹⁵⁾

하지만 이는 억지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비상시국 아래에서 순수주의 문학예술이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평상시에는 민족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키며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전쟁기에야 순수주의자라 할 지라도 일정한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 작가들이 전쟁기에 ‘한국반공예술인단’ 같은 조직이나 종군작가단을 조직하여 “조국의 통일 완수를 이룩할 때까지 반공 예술문화 전선을 형성하여 그 대열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외치고 싸웠던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¹⁶⁾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북한의 태도가 주목을 요할 만큼 크게 바뀐다는 사실이다. 해방공간의 남한문학에 대한 북한 학계의 평가는 1990년대에 와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순수문학예술을 주로 거론하면서 미군정의 사상문화적 침략의 도구로 전락한 부르쥬아 반동문학의 표현이라고 비판하더니만, 1990년대에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진보적문학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남한 문학예술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비난 일변도의 네가티브 전략에서 일정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뀐 셈이다.

14) 미 상, 『교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 - 문예전선에서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 투쟁을 강화하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p. 66~68.

15) 위의 글, p. 67.

16)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5 재인용.

8.15 직후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가한 작가들이나 민족적 량심을 가지고 일제강점하의 조선의 현실과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사실주의 작품들을 창작한 작가들뿐 아니라 그릇된 미학견해를 가지고 자연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던 적지 않은 문학인들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진보적인 문학을 창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리었다.¹⁷⁾

박종식, 한중모에 따르면 해방공간의 남한 문학에도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민족문학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용악의 『기관구에서』, 오장환의 『병든 서울』 등의 시와, 채만식의 『논 이야기』, 김영석의 『폭풍』, 전홍준의 『새벽』, 리근영의 『타류 속을 가는 박 교수』 등의 소설이다. 북한 학자가 통일문학적 시각에서 특히 주목하는 작품은 채만식의 『낙조』이다. 이 작품은 몰락 지주집안 출신으로서 좌우익 어느 편에도 적극 가담하지 않은 평범하고 용렬한 성격의 소유자인 서술자, 나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인 황주이주머니 집안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그 집 세 남매의 생활과 운명을 기본으로 일제시로부터 8.15 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이승만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친일적, 친미적 인간 군상을 그려낸다. 맏아들 박제춘은 일제 경찰의 경부보로서 황국 신민화의 앞잡이가 되어 친일행위를 하다가 8.15를 맞이하자 동족의 손에 맞아죽었으며, 그의 딸 박춘자는 실연 당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양공주가 된다. 이는 북한 비평가가 보기에 일제 위안부에 역사적 맥락이 닿는 미군 위안부로 전락하여 ‘새로운 제국주의적 식민지 현실에 영합추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⁸⁾

북한 비평가가 주목하는 것은 둘째아들 박영춘이다. 그는 국방경비대에 자원 입대하여 남북통일을 하겠다고 북침을 떠들며 칼을 버른다. 이 작품이 식민지 현실과 분단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과 등지고 민족사의 발전방

17) 박종식·한중모, “8.15 직후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과 그 주체사상적 특성,” 『통일문학』 (계간) 26호 (평양: 평양출판사, 1995. 9), p. 260.

18) 위의 글, p. 314.

항에 역행해나가는 이러한 반민족적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이 동족상쟁의 비극으로 잇닿아지리라는 것을 형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탁월한 점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남한 정권의 일부에서 북침을 외칠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한 대북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예감하고 우려를 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평가는 이 작품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그 저의가 의심된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북침론자인 박영춘을 단호히 규탄하지 못하고 ‘마음이 문득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문제삼은 대목이 그것이다. 이는 작가의 세계관적인 제한성으로부터 오는 작품의 약점이라는 북한 비평가의 주장과는 달리, 6.25전쟁을 굳이 북침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일방적 입장을 강조한 아전 인수격 인식의 산물로 보인다.¹⁹⁾

III. 1950~6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1950~60년대 북한은 전후 복구와 천리마운동, 주체사상의 유일사상 체계화 등 역동적인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북한문학도 도식주의와 수정주의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고 자기정립에 이른 시기였다.²⁰⁾ 어쩌면 천리마운동 시기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이 주체문학예술로 전화(轉化)한 데에는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대타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남한 문예의 폐해를 각별히 강조하는 등 배타적 인식을 통해 북한 문예가 역으로 당 문학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도식성 논란조차 원천봉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시기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철저히 이분법적이다. 부르주아 사상미학에 빠졌다고 평가되는 것은 철저하게 비판, 배격하고 반미 사상을 담은 작품이나 참여문학은 일부 인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시기를 결산하는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 예술에 대하여

19) 위의 글, p. 315.

20) 졸고, “1960년대 북한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1960년대 북한문학과 대작 장편 창작방법논쟁,”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출판사, 2001) 참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 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쪼먹고 있습니다.²¹⁾

이 시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인식하는 남한 문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중심주의(아메리카니즘)를 남한에 전파시키기 위하여 미제가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부르주아 문학예술에 지나지 않았다.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원론적 비판을 세계관적으로 정리하면 미국식 생활방식을 긍정하는 실용주의와 전쟁 이후의 서구사조인 실존주의,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주력한 반공사상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은 외면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예와 사조가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사조와 유파는 각양각색이지만 그것들이 민중들을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성적 방탕, 자기 멸시 등에 빠뜨림으로써 현실을 외면하고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통치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²²⁾

예컨대, 1950년대까지는 미군에 의해서 이질적으로 수입된 서구예술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예술가들로서 서양예술단을 조직하도록 하고는 그를 통하여 미국문화와 예술, 미국식 생활양식을 조직적으로 남한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이 시기 남한에 재즈 등 서양음악을 더욱 광범히 유포시키는 것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민족음악들을 재즈화하는 이른바 국악의 현대화가 더 한층 강조되었다. 또한 해마다 미국의 여러 무용단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하고 ‘라체무용을 비롯한 보기에조차 망치한 미국무용’들을 배워주었다.²³⁾ 이를테면 ‘발레’를 ‘망치한 나체무용’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서구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는 남한 문예 전체에 대한 일

2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58.

22) 미 상,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 5) 참조.

23)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침략사』 p. 252. 참조.

방적 매도 자체가 너무나 허술한 논리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음악, 미술, 무용 등 장르상의 기본적 인식이나 의사 소통 자체가 어려운 분야에 비해 문학은 남북한 사이에 비교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6.25 전쟁 후 남한 문학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반공 주제의 작품들과 아울러 순수문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타났다. 특히 그 중심에는 전후문학의 비관적 세계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역사적 발전의 전망을 잃고 불신과 불안, 공포와 절망 속에 떨면서 비극적 현실인식의 심화를 추구하는 문학이 스스로 전후파를 자처하였다. 전후파 작가들은 2차대전이 끝난 후 서구사조를 지배했던 실존주의를 자기들의 사상 미학적 근거로 삼았다. 소설 「밀다원 시대」, 「실존무」, 「요한 시집」,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을 보면 기존의 도덕과 가치관, 기성 문학의 모든 규범을 반대하고 병적인 심리를 추구하면서 불안과 공포, 절망과 허무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북한의 비평문을 보면 실존주의적인 전후문학까지도 반공사상과 결부시키고 있다. 즉, 전후파 작가들은 현실 도피를 부르짖으며 순수문학의 간판을 들고 마치도 반공문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 것 같이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은 허무와 절망을 부르짖으면서 민중들을 엄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영탄과 병적인 심리 세계로 끌고 들어가 패배주의로 그들의 사상, 정신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허무주의와 반공사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예로 장용학의 「요한 시집」을 들었다.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극한상황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실존적 심리를 묘사한 이 소설에서 북한군을 모독했다면서 반공사상과 인간 중요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²⁴⁾

반면,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1950~1960년대 문학으로는 반미의식을 담은 일부 작품들이 있다. 1950년대 이래 반미 주제 작품들로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송병수의 「쏘리 킴」(1957), 백인빈의 「조용한 강」(1959),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1963), 남정현의 「분지」(1965)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을 보면 대체로 미제침략군이 주둔한 기지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양공주의 생활을 취급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

24)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6.

분지』와 같이 미군에 대한 민족적 분노와 정면대결로까지 나가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문학 인식이 가장 비판적일 때가 1960년대 중반이다. 1960년대 당대나 1970년대에는 남한 문학예술에 대하여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5.16 후 박정희 정권의 주도로 조직된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등 남한 문학예술인들이 반공사상을 강화하고 순수주의, 추상주의와 병행한 창작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남한문학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보면 허무주의, '색정주의', 형식주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현실을 병든 것으로 파악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내용을 예로 들어 작가의 패배주의적 성향과 거기 담긴 남한 사회의 불건장성을 퇴폐주의로 규정한다. 고독과 불안, 허무와 절망, 공포와 죽음을 설교하는 허무주의와, 독자들의 동물적 본능을 촉발하기 위하여 색정적인 줄거리와 추잡한 장면에 대한 묘사를 그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색정주의'가 그 내용적 특징이다. 게다가 허무주의든 색정주의든 반공사상과 맞물려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소설 『백의의 수기』와 『육교』를 들고 있다. 심지어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최초로 분단문제를 정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남한문학사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인훈의 『광장』(1960)조차 허무주의와 반공사상이 결합된 졸작으로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⁵⁾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 현실을 비판한 1960년대 참여문학조차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 나온 비평이나 1970년대의 연구서에 따르면 1960년대 남한문학의 2대 축이었던 참여문학 진영을 일언이폐지하에 외래사조로 매도하고 있다.²⁶⁾ 즉, 구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전염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르주아 반

25)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4.19 인민봉기 후 약 1년 간에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설교하면서 그것을 흉악한 반공독소로 가미한 중편소설 『광장』(1960. 10)을 비롯한 많은 실존주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한편 추잡한 색정주의 작품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p. 254. 보다 자세한 『광장』 비판론은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p. 96 에서도 볼 수 있다.

26)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1966.1. 참조.

동 문예사조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부 신세대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사회 참여이론을 흉내내어 참여문학을 들고 나왔다고 했던 것이다. 김하명에 의하면, 참여문학의 해독성은 인간성 옹호라는 가면 밑에 계급투쟁과 혁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방 중상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참여문학, 저항문학은 개인을 사회와 대립시키고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다 같이 부정하는 듯이 가장하지만 결국 남한을 긍정하고 북한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썩고 병든 남한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민중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편과 적을 옳게 가릴 수 없게 하며 허무와 절망, 퇴폐, 타락으로 이끌어 결국은 현실을 긍정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²⁷⁾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남북화해 분위기가 되면서 1960년대 문학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 즉, 순수문학은 부르조이문학으로 비판하면서도 참여문학은 상대적 진보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²⁸⁾

4월혁명을 계기로 시민의식이 성장한 남한문학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참여문학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북한에선 남한의 참여문학을 둘로 나누어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 사조의 영향 하에 놓인 양가쥬망 문학의 번역어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주의적 진보적 문학의 당대적 형태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970년대의 김하명이나 1990년대의 한중모 모두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전후시기에 대두하여 성장한 진보적 문학사조인 현실참여문학을 그 내용에서 실존주의적인 양가쥬망 문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학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여문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평가한다. 원래 문학에서의 현실참여 또는 사회참여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양가쥬망의 역어인데 이 양가쥬망이라는 용어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론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 참여문학의 내용과 특성이 실존주의적인 프랑스의 양가쥬망 문학과는 다른 것이며, 남한

27)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p. 117

28)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통일문학』 (계간) 28호 (평양: 평양출판사, 1996. 3) 참조.

에서 참여문학이란 본질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성격의 진보적 문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²⁹⁾

북한 학계에서는 사르트르의 인간주의적 실존주의와 사회참여문학조차 부르주아사상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한중모에 의하면, 앙가쥬망 문학론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사회생활에서의 기회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한다. 사르트르가 보는 인간이란 극한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발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며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오직 행동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여 행동과 일체를 이루는 자유이므로 상황 속에 얽어매인 나의 자유는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앙가쥬망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자유에 대한 이러한 애매한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 앙가쥬망 문학론이 사실주의 문학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과 퇴폐적 성격을 가리우는 위장물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참여문학이 앙가쥬망 문학과는 별개로 현실도피적인 순수문학에 대립되는 문학, 말 그대로 현실참여의 문학, 사회참여의 문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한 문단에서 높이 살 것은 순수문학을 반대하고 사회현실에 참여하며 현실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뚜렷한 사회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문학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³⁰⁾

하지만 앙가쥬망 문학과 참여문학을 굳이 분리하려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다. 아마도 그들이 일관되게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의 주된 내용으로 비판해온 실존주의를 긍정하기 어려웠거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

29) 이러한 논리는 1970년대의 김하명이나 1990년대의 한중모 글에서 변함없이 일치되고 있다. 김하명,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참조.

30) 북한 비평가 한중모는 1960년대 이후 남한 최대의 민족문학 이론가인 비평가 백낙청의 소론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사명” (『민족문학과 세계문학Ⅱ』 창작과비평사, 1985, p. 265~266)을 인용하면서 1960년대 남한의 참여문학이 실은 본질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성격의 진보적 문학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p. 259~260 참조.

이다」에서 특별히 사회참여의식을 제창한 사르트르 사상을 실존주의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게다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창된 앙가쥬망 문학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시되는 남한의 1960년대 이후 참여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다 보니 그러한 무리한 논리를 펴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앙가쥬망 문학의 제창자이자 실천가인 사르트르는 진보적 문학가로 생각된다. 그는 문학이 인간의 사회적 요구를 가장 깊이 표시할 때 인간의 주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의 목적이 그것으로써 사람들의 자유에 호소하고 인간적 자유의 지배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³¹⁾ 또한 “작가는 세계를 드러내기(폭로하기)를 택했으며, 이렇게 숨김없이 벗겨진 대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폭로하기를 선택했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비판적 시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³²⁾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에서 통일문학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1960년대 남한문학으로는 신동문의 시 「아! 신화같이 다비데군들」(1960), 박두진의 시 「우리들의 깃발은 내린 것이 아니다」(1960), 김수영의 「기도~4.19 순국학도 위령제에 붙이는 노래」(1960),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1968) 등 4.19혁명을 노래한 당시의 시 작품들이 있다. 또한 북한 학계에서 1960년대 남한문학작품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남정현의 반미소설 「분지(糞地)」(1965)를 비롯하여 남정현의 「너는 뭐냐」(1961), 그리고 박용숙의 단편소설 「사과」와 「영웅교향악」(1966) 등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IV. 1970~80년대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

앞에서 보았듯이 1950년대 이후 남한 문학예술계는 근대화론과 전통단

31) 장 뵈를 사르트르, 김봉구 역,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72), p. 218.

32) 장 뵈를 사르트르, 김봉구 역, “작품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현 외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 p. 151.

절론 등의 논리를 등에 업고 민족문화의 내재적 전통이나 주체적 흐름을 간과한 채 서구문학과 서양예술사조에 대한 의존과 경사가 심한 편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서 비판하듯이 민족허무주의와 서구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미미한 정도로 민족문학론의 흐름이 있었지만 문학사의 주류는 아니었다.³³⁾ 단지 전후문학, 실존주의, 앙가주망 문학 등 서구 사조에 대한 소개와 답습 모방이 하나의 유행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한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족문학론이 다시 본격적으로 제창되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활발히 논의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전의 비난 일변도식 남한문화 인식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남한의 민중문학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³⁴⁾ 다만 북한의 남한 인식은 1970년대의 전면적 사상 공세와 1980년대의 부분적 긍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⁵⁾

남한에서는 1970년대 초의 민족문학 논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진보적 문학이 나왔다. 그 중심에는 백낙청이 주도하는 「창작과 비평」 그룹과 고은, 황석영, 이문구 등이 중심에 선 자유실천문인협의회(1974년 결성)가 있었다. 민족문학론도 이론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한 대로 1970년대 남한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주장하는 참된 민족문학이란 결국 임현영, 염무웅, 백낙청 등이 제창한 민중적 성격

33) 남한의 1950년대 민족문학론을 정리한 논문으로는, 박현호, “민족문학론으로의 도정,” 조건상 편, 『한국전후문학연구』(성균관대출판부, 1993)를 참조할 수 있다.

34) 1980년대 민중예술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5)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적개심과 증오감에 넘친 남한 비판서들이 소재자 시리즈로 적잖이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비슷한 논조로 미국과 남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의 관련 문건과 비교해볼 때 서술대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적 기본태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듯하였다. 당시의 적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노래 가사를 보면 그 제목과 내용에 섬뜩함을 떨칠 수 없다.

“미제를 족치자 / 원썬을 치자 / 간악한 승냥이 각을 떠내자 / (중략) 미제의 팔다리 목을 자르자” 송찬웅 작사, 조길석 작곡, “미제의 각을 뜨자,” 『조선예술』(1974. 10) p. 123.

의 민족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 민족문학론의 수준을 말해주는 백낙청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민족문학이란 민족의 주체적인 생존과 인간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반미, 분단 극복, 민주 회복을 당면한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중의 생활과 사상감정에 대한 진실한 형상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남한의 진보적 문학인들이 민족문학론을 민족 구성원 대다수의 인간적 발전을 외친 것은 산업화사회의 비인간화현상이 극도에 이른 유신독재체제에 맞서 반파시즘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1970년대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에 맞춰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검열에 걸려 술하게 판금당하기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1970년대 남한 문학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소설로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단합된 투쟁을 형상한 작품 『객지』(황석영), 이농민들의 애환을 그린 연작소설 『우리 동네 X씨』(이문구), 가난하고 무식한 떠돌이 노동자 아버지와 그 자식들의 계급적 의식 성장과정을 그린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조세희), 봉건시대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과 조직적 반항정신을 그린 장편소설 『장길산』(황석영)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또한 반미 주제 작품으로는 천승세의 단편소설 『황구의 비명』(1975)과 이문구의 중편소설 『해벽』(1972)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시 분야에서는 김지하의 담시 『비어』, 풍자시 『오적』, 서정시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양성우가 쓴 서정시 『겨울공화국』, 『노예수첩』,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장기표의 장시 『민중의 소리』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³⁷⁾

하지만 북한 학계가 1970년대 남한의 진보적 문학을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즉, 유신체제라는 가공할 권위주의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남한 민중의 정치적 요구보다는 ‘반미’라는 자기중심적 민족문제를 우선시하고 계급투쟁적 시각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36)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민족문학의 현 단계,”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참조.

37)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40. 참조.

1970년대 민족문학의 한계를 지적한 북한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남조선에서 제창되고 전개된 민족문학론에서는 민족문학에 대하여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 민족이라는 단위로 묶여져있는 인간들의 전부 또는 대다수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학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남조선 인민들의 주체적인 생존과 자주적인 발전,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제기되는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 조국 통일의 투쟁과업을 포괄하여 민족문학의 성격과 사명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과정에서는 남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중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지 못한 데로부터 민족문학을 시민문학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회계급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지 못한 이론적 논의에 치우친 것과 같은 부족점도 발로되었다.³⁸⁾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1980년대 민중문학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남한의 민중문학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개념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문학이라 하고 민중성과 운동성, 진보적 사상을 그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⁹⁾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중문학은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인간성격과 생활을 그 발전의 논리에 맞게 그리고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생활의 본질을 천명하고 전형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문학은 사상적 측면에서나 예술적 측면에서나 자기의 진보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시, 소설, 희곡, 수필, 수기 및 르뽐, 비평 등 모든 장르에 걸쳐 파고들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 글쓰

38)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p. 355~356.

39)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p. 18~20. 참조.

기나 생활글 등을 ‘실화(實話)문학’이라 하여 진보적 민중의식이 장르적 확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남한 민중문학의 사상적 이념적 근거를 1985년 당시의 학생운동과 일부 사회운동에 국한되었던 이른바 ‘삼민’(민족·민주·민중)⁴⁰⁾ 이념만을 확대해서 일반화시켜 규정하고 다시 그것을 주체사상과 관련시킨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1980년대에 나온 반미자주화문학 또는 반미문학을 주체사상이 구현된 문학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격 확대해석으로 생각된다.⁴¹⁾ 특히 “자주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문학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궤도를 달리는 진보적 문학이다”라는⁴²⁾ 규정에서 북한의 자기중심적 인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자주시대’란 용어는 주체사상의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남한의 민중문학이 나오게 된 자생적 요구나 시대적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에서 높이 평가하는 80년대 남한 민중문학의 하위범주로는 노동문학, 5월광주항쟁문학, 반미문학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작품 예로는 홍희담의 「깃발」, 방현석의 「새벽출정」(1989), 안재성의 「파업」(1989),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1988), 정지아의 「동지의 집」(1989) 등을 들 수 있다. 「파업」을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을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킨 첫 장편소설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거나, 「새벽출정」을 두고 노동

40) 1985년 당시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자기규정이기도 했던 소위 ‘삼민혁명론’, 즉 민족·민주·민중혁명론에서는 민족혁명과 민중혁명의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 양자가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1980년대 남한 사회변혁운동사에서 ‘삼민’ 이념은, 북한이 강조하는 반미자주화민족혁명(이른바 NLR)과 레닌주의를 따르는 민족민주혁명(NDR) 및 민중민주혁명(PDR)으로 변혁론이 분화되기 이전의 초보적 단계이므로 지배이념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 외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죽산, 1989), p. 21~35 참조. 더욱이 삼민 이념과 주체사상의 친연성이나 연계 논리는 당시 남한 공안당국이 운동권을 매도했던 매카시즘적 논리였다. 남한 공안당국의 무리한 주장을 북한 학계에서 공식적 담론으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분단 집권층과 남북한 민중을 대립시킨 ‘분단체제론’(백낙청)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사, 1994) 참조.

41) 위의 책, p. 14~17.

42) 위의 책, p. 7

자들의 임금 인상이라는 경제투쟁을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밀접히 결부시켜 형상화함으로써 계급해방의 의의를 밝힌 작품으로 평가한 것은 북한 비평가의 일정한 안목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작품 평가의 기준을 단지 계급의식이나 내용에만 두지 않고 “생활의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이루었다”⁴³⁾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뒷받침되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실증적인 한계도 없지 않은데, 이를 테면 남한의 대표적인 극우 작가인 이문열의 작품을 민중작가 황석영이나 신동엽과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한 것이 그 한 예라 하겠다.⁴⁴⁾

V. 마무리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이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각각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민족문화적 동질성을 별로 찾지 못한 데 연유한다.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가 집단주의와 획일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이 부정적으로 보는 남한의 문화 가운데 상당부분이 문학예술관의 차이에서 오는 장르간 이해 부족의 산물이었다. 게다가 자기 체제의 우월함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건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서 인

43)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로조 고수를 위한 파업 통성 투쟁을 형상하면서 그것을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 목적과 연결시키고 그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것은 중편소설 『새벽출정』이 생활의 사실주의적 전형화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다. (중략)

일부 평론에서 『새벽출정』이 임금인상을 위한 경제투쟁을 묘사하는데 머물러있다고 한 것은 소설의 형상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평가이다.”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3),” 『통일문학』 44호(평양: 평양출판사, 2000. 3), p. 118.

44) “풍자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리문열), 희곡 <돼지꿈>, <금강> 등 수많은 민족문학작품들 역시 묘사의 사실주의적 진실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p. 27. 참조.

식하기에는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예조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이 이른바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고취하고 있다는 데 지나친 비난이 아닐 수 없다.⁴⁵⁾ 이러한 잘못된 통념은 1990년대 들어서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1990년대 북한 문예정책노선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 할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조차 남한 문학예술을 두고 민족문화가 짓밟히고 양키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며 반동적인 부르쥔아 문학예술이 북한까지 침투하려 한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상과 같이 북한의 남한 문학예술 인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가치 평가의 변함없는 준거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반동적/진보적’의 흑백논리와 ‘부르쥔아 사상미학/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 그리고 ‘미제 어용문화/애국적 주체문화’의 이분법이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학자, 비평가가 많은 남한 작품을 섭렵하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남한과의 대결의식이 강할 때는 남한 문예 전체를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략수단으로 매도하였다. 6.25 전쟁기에는 비상시국임을 감안 하더라도 비난과 매도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해방공간의 남한 문

45) 오승련,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인 부르쥔아 문예조류,” 『조선예술』 (1977. 3) 참조.

46)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가 차고 넘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패륜패덕을 레찬하며 인종주의와 인간 증오사상을 고취하는 반동적인 부르쥔아 문학예술을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침투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52.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담론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다음을 보라.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쪼먹고 있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58.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당 최고지도부의 남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비역사주의적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예학계의 대남 인식에서 역사적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학예술의 순수주의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가 전쟁기에는 왜 현실에 뛰어들어 남한 정부를 옹호하느냐고 비판한다면, 과연 논리적 일관성이나 주장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50~60년대 남한 문화 인식에는 뚜렷한 변모를 보인다. 당대나 1980년대까지는 순수문학이든 참여문학이든 비판의 강도가 높았는데 반해 1990년대 들어서서는 참여문학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1970년대 문학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 민중문학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비록 남한 민중문학의 사상적 기반이 주체사상과 닿아있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과잉해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대부분 섭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1970년대에는 통일을 하면 남한 문화가 올바르게 영위될 것이라 했고, 1980년대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면 남북문화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⁴⁷⁾ 얼핏 생각하면 명쾌한 결론 같지만 문화의 생리와 국제적 교류의 흐름을 무시한 너무나 단순하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이다.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적 행위를 미국의 사주에 의한 반동적 행태로 매도하고 그 원천인 부르주아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막아내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오히려 통일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 50여년 동안의 남북 문화교류관계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역으로 남한 문화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한 인식보다는 북한 주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고 단속하기 위한 대내용 비판

47) “남조선에서 민족 고유의 예술전통을 되살리며 우리의 유구한 민족예술을 전국적으로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기 위하여서는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하루 빨리 조국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명원(기자),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 5) p. 64. 참조.

강석희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반세계급식과 반미투쟁정신을 고양시키면 된다고 한다. 위의 책, p. 209. 참조.

으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이 점은 다시 남한에게도 화살이 돌아온다. 그동안 남한 당국 또한 북한 사회문화에 대해서 총체적 사실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정적 행태를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반공, 반북이데올로기 교육에 이용하였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1990년대 이후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전후에 이르러서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금의 사태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대안을 찾을 여유가 전혀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이나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질적 사상 문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에서는 통일 논리와 관련시켜 남한 민중문화를 긍정하거나 이른바 ‘모기장론’으로서 여타 부르췌아 문학예술의 유입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모기장론’이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 『근로자』에 실린 공동사설인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적으로 천명한 개방 대비 전략을 말한다. 모기장은 시원한 바람은 들어오게 하고 모기 같은 해충은 막는 물건이다. 개혁 개방의 대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창문 밖의 ‘바람(공기)’은 받아들이되 서구 부르췌아 사상 문화를 의미하는 ‘모기’는 ‘금성철벽’을 쌓아 막도록 하자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원조에 묻어 들어가는 서방세계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모기장이란 본격적으로 유입될 외래 문화에 대한 일종의 면역주사와 같은 예방적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을 위해서는 모기장론을 명확하게 분석 고찰해야 할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북한 역사 최대의 위기를 막 넘긴 북한 당국의 절박한 처지를 심분 이해하되, 민족문화의 전통에 근거한 통합논리를 차분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과거 북한에서 남한문화를 매도하듯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 양쪽이 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 교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⁴⁸⁾

48) 남북한 문학의 경우 상호 공감대가 마련된 리얼리즘 미학의 기반을 둔 상호상승식 문학사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논증한 최근의 연구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줄고,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참조.

참 고 문 헌

- 강석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 침략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계 북. “남조선의 반동적 부르췌아 미학의 정체,” 『조선문학』. 1956. 6.
- 김명원.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예술,” 『조선예술』. 1978.5.
- 김명호. 『미제가 남조선에 퍼뜨리고 있는 부르췌아 인생관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김명호. 『자유에 관한 부르췌아 이론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출판사, 2001.
- 김원택. 『남조선 민중문학의 발전과 특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김일성 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창렬. 『현대 제국주의의 반동사상, 부르췌아 인간철학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 김하명. 『미일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의 죄악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김해균. “남조선 문학이 걸어온 길,” 『조선문학』. 1966. 1.
- 미 상. 『교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2)~문예전선에서의 반동적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을 강화하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6.
- 미 상. “퇴폐적이며 말세기적인 남조선 음악예술,” 『조선예술』. 1973. 12.
- 미 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 『조선예술』. 1974. 10.
- 미 상.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 『로동신문』. 1999. 6. 1.
- 박소운.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 괴뢰도당을 준렬히 단죄하는 예리한 무기로서의 교예막간극,” 『조선예술』. 1974. 10.
- 백관범. “남조선혁명에서의 필수적 요구는 강력한 혁명의 보조력량을 꾸리

- 는 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평양: 조국통일사, 1969.
- 백길만.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것은 혁명 승리의 관건적 문제,”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평양: 조국통일사, 1969.
- 오승련.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반동적인 부르쵸아 문예 조류,” 『조선예술』. 1977. 3.
-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제17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1999.
- 이우용 편. 『해방공간의 문학 연구』. 1,2권. 서울: 태학사, 1990.
- 장형준. “위대한 주체적 문예사상의 빛발 아래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 『조선예술』. 1974. 10.
- 철학연구소.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적 침투의 반동적 본질』.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청 암. “남조선에서 미제가 류포하는 부르쵸아 반동미학의 정체,” 『조선문학』. 1957. 10.
- 최철웅.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적 본질』.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최철웅. 『부르주아 인도주의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한설야 외.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한중모, 박중식. “8.15 직후 남조선의 진보적 문학과 그 주제사상적 특성,” 『통일문학』. 평양 26호. 1995. 9.
- 한중모. “1960년대 남조선에서의 현실참여문학의 성장 발전,” 『통일문학』. 평양 28호. 1996. 3.
- 한중모. “1970년대 남조선에서의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민족자주의식의 형상적 구현,” 『통일문학』. 평양 29호. 1996. 6.
- 한중모.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의 활성화와 그 문제점,” 『통일문학』. 평양 33호. 1997. 3.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 대한 형상화 (1),” 『통일문학』. 평양 42호. 1999. 9.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 (2),” 『통일문학』. 평양 43호. 1999. 12.
- 한중모. “1980년대 남조선 민족민중문학에서의 근로민중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형상화 (3),” 『통일문학』. 평양 44호. 2000. 3.
- 한효 외. “부르주아 문학조류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 현대문학,”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을 반대하여(2)』.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이 기 동(통일정책연구소)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신사고’와 ‘선군정치’
- III.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 I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 이 말은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공동사설은 국가경제력 확보의 선차적 과제로서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착실한 진행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시 풍조를 세우고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국가경제력 확보의 목적지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달성으로 귀결짓고 있다. 이것만 보면, 북한은 앞으로 경제의 현대화에 몰두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²⁾

1)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2) 실제로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때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를 ‘북한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다.

그러면서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다른 것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 과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고’라는 표현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롯된 것이다.³⁾ 여기에서 ‘신사고’라는 언어적 수사구 소련에서 제창된 ‘신사고’와 개념상의 혼돈을 일으키면서 그 진의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혁신’과 같은 전례 없이 낮은 어휘와 문구들을 토해 내면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억측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이 신사고라는 어휘로 대체되고,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우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북한의 공동사설에 버젓이 쓰여진 상황에서 그러한 억측들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년초부터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방지역을 순회하였다.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설상가상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신사고’가 마치 중국식 또는 구 소련식의 신사고로 별 무리없이 받아 들이는 데 일조를 하였다.⁴⁾

한편,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소나마 달라진 모습을 보여온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신사고를 개혁·개방의 징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3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성사되었으며, 4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군사회담이 두차례 성사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에서의 진전 분위기와 때맞춰 나온 북한의 신사고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5차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4차 적십자회담을

3)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건이나 매체를 통해 ‘신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4) 대표적으로는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분석 및 내용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1.

무산시키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한의 변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의지가 한풀 꺾이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북한의 신사고 제창은 그 논쟁의 중심에서 비껴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사고는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나 중국의 흑묘백묘론과 같은 개혁과 개방의 신호탄이라는 시기상조적 예단들에 대해 회의를 품은 신중한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언어적 수사에 동요됨없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때 적절한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신사고라는 언어적 수사에 북한의 태도를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한가지 예를 들면, 페르손 일행의 북한 방문을 북한의 신사고 노선의 반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사고를 제창하기 이전부터 많은 서방의 정치인들이 이미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것이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가설은 북한의 ‘신사고’는 북한의 새로운 통치이념이자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정형화된 ‘선군정치’를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의 지도일군들과 주민들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방식을 쇄신하려는 매개수단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신사고’가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개혁·개방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나머지 자칫 무리한 대북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신중한 대북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II. ‘신사고’와 ‘선군정치’

1. 신사고의 등장배경과 내용

북한의 노동신문 1월 9일자 정론은 신년공동사설에 제시된 신사고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구시대의 진부한 사고방식’, ‘낡고 뒤떨어진 것’,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습과 유물들’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⁵⁾ 이러한 표현방식은 마치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에서 새로이 등장한 정권이 기존 정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올 법한 표현들이다. 여기서 기존 정권이란 바로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김정일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시대가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대충 밝힐 수 있다면, 신사고의 등장배경을 파악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신사고의 기본 핵심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구시대의 시작은 북한이 당면한 최대의 어려움인 경제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된 1987년도부터가 구시대라는 오명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1993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3차 7개년계획이 실패했음을 처음으로 자인했다는 사실은 그 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3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던 시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⁶⁾ 그리고 엄청난 외화를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된 시기도 이 시점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책없는 경제난이 지속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난은 사회 통제력의 이완을 수반하였고, 간부든 일반주민이든 우선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

5) 북한은 “구시대의 진부한 관습과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 나가자”,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람들이다”, “낡고 뒤떨어진 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도,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진부한 관습과 유물들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 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무엇을 하나해도 손색없이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때이며 위력이다”라고 촉구한다. 정론,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6) 좋은벗들, 『북한사람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참조.

그러면서 북한의 동원메카니즘과 정치사상적 요새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이 1996년 당간부들에게 행한 비밀연설에서 간부들의 사업태도를 심하게 질책했던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만 하다.⁷⁾ 요컨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형성된 북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의 비사회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들은 김정일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패배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생산이 턱없이 감소하자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식량구결은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회주의냐'라는 식으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정일은 새로운 분위기 쇄신책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셋째, 경제난과 식량난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은 주목받던 네명의 고위간부인 서관희 농업담당비서와 이봉원 총정치국 부국장, 그리고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최용해 사회주의로동자청년동맹(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몰락을 목격하였다.⁸⁾ 김정일의 입장에서 볼 때,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과 식량난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

7)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서울 : 조선일보사, 1997), p. 309. 이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논쟁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541.

8) 북한당국이 이들의 처형 또는 철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이 說로만 회자되고 있지만, 이들이 몇 년째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들의 직위가 후임자로 대체되었다는 점, 만약 이들이 병으로 사망했을지 다른 고위관리의 경우 북한의 관례상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사망에 대한 공식발표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필자가 직접 확인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이 탈북전 북한대사관 근무시 현지를 방문한 고위관리들을 통해 들은 소식이 필자의 판단으로 볼 때,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서관희와 이봉원의 경우는 각자 농업의 실패와 군정치사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같은 시기에 공개 처형되었고, 김정우는 대외경제사업, 특히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가 부진한 책임을 물어 철직당하였고, 최용해의 경우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책임전가방식은 북한의 대다수 지도일군들에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는 북한판 복지부동을 양산하였다.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 지도일군들의 이러한 복지부동 자세는 김정일로 하여금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이겨왔다는 자평을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다소나마 북한의 식량난이 호전되었으며,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⁹⁾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기존의 강압적인 책임전가방식 보다는 주민들과 간부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쇄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후대수령’의 위상을 가진 김정일이 경제난으로 인해 그의 위상이 점차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사고’를 제시했다는 시각이 있다.¹⁰⁾ 물론 수년간 계속되어온 경제난과 식량난이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 자신의 위상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면 타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사고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신사고를 개혁·개방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은 현재의 당면한 경제난 속에서는 굳이 신사고를 제창하지 않더라도 외화획득의 필요성은 여전히 절감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사고를 북한주민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망에 호응하기 위한 새

9)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다가 1999년 6.2%의 플러스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보고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도에도 1.3%의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전현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로운 바람몰이용 정책선회나 개혁·개방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존 정치·사상교육과의 충돌방지장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¹¹⁾ 이러한 시각에는 두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과연 주민들의 열망에 호응하는 정책을 추진할만큼 다원주의방식의 정책적 유연성 또는 관용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절연(insulation from social forces)에 실패할 정도로 약한 국가(weak state)인가라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기존 정치·사상교육과의 급작스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형중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박형중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로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원적 문제성과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따른 과다 군비지출, 둘째, 개혁과 개방이 북한 내부에 현저한 동요요인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서 개혁과 개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남측 관찰자들의 주장을 일면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²⁾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내생적 요인과 함께 세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³⁾ 첫째, 대내경제정책에 무리를 주는 고도 군비지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해당 국가가 개혁·개방의 경우에는 대내외 안보를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서방과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가지 전제조건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서방국가들과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관계의 구축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

11)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분석 및 내용분석』, pp. 3~4.

12) 박형중, “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호(2000), p. 190.

13) 위의 글, p. 192.

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접근은 심도있고 의미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고, 설사 서방국가들의 대북접근이 활발하게 추진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결국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고질적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것이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이며,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신사고를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선불리 연결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미 친북학자인 한호석의 신사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호석은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연결짓는 것은 착각이라고 단정하면서, 신사고의 내용은 당 정치사업의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그러면서 노동신문 2001년 2월 3일자에 실린 김정일의 “나는 사업을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인용, 낡은 사업방법이란 회의를 하는 방법이므로 새로운 사업방법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한호석은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업방법이란 “우리 당의 간부는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 뿐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딸리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함축하면, ‘실력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력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며 “장군님의 의도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이 사업설계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일꾼들이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 첫째,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정통하는 것, 둘째, 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것, 셋째,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것 등이

14)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p. 2.

15) 물론 북한은 이미 1997년 9월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서 “경제일꾼들이 실력과 수준이 높고 책임성이 강해야 대중의 지지와 신망을 얻을 수 있으며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력’을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신문』, 2000년 1월 22일.

라고 지적한다.¹⁶⁾ 이러한 주장은 한호석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한호석은 특정문제에 대한 성실한 연구→현지에서의 해결방도 제시→재검토→구체적 과업과 수행방도 제시라는 김정일의 사업방법을 찬양하고, 정평군의 금진강댐과 발전소 건설에 앞장선 군당책임비서 오기석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사업방식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⁷⁾ 결과적으로 한호석이 말하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 즉, 신사고란 정치사업방식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지도일군들이 과학적인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김정일의 사업방식을 따라 배우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호석의 견해는 필자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하면, 신사고란 김정일이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지 결코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

'신사고'와 '선군정치' 노선 간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사업방식, 즉 당의 사업방식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군대이고, 군대의 모범을 주민들과 당·정의 일군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김정일정권이 직면해 온 체제위기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찾고자 선군정치가 등장했다는 배경에 대해서 대다수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¹⁸⁾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6) 『연합뉴스』, 1997년 9월 15일. 전현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과 신진엘리트,” p. 9에서 재인용.

17)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p. 3.

18)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4권 1·2호 합본(2000), p. 224.

10월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선군후로’라는 용어로부터 시작되었다.¹⁹⁾ 그 이후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1998.4.25 군창건 66주년 로동신문 논설), 선군정치(1998.10.21 중앙방송 논설), 선군후로의 정치방식(1999.2.5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이라는 용어가 차례로 등장하였다.²⁰⁾ 물론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확립 이후 줄곧 군을 중시하는 풍조를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²¹⁾ 그럼에도 선군정치를 새로운 정치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과거와 달리 군 인사의 서열,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현지도에 있어서 다른 부문보다 월등한 우세를 보였다는 숫적인 측면²²⁾과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4.25)을 국가명절로 제정하고,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이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시점(1997.10)과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에 오르면서 새로운 정치방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군대가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김정일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19) 북한에서 군중시사상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건 1998년 4월 인민군 창건기념일에 나온 ‘선군혁명영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광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2000), p. 130.

20) 『연합뉴스』, 1998년 10월 21일. 선군후로,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라는 세가지 용어를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용어상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군후로는 노동계급을 앞세우는 혁명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지만, 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이기 때문에 선군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선군혁명노선은 인민군대가 앞장을 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떠밀고 나간다는 전략노선으로서 군의 적극적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당에 의한 군의 우대를 강조하는 소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1) 김정일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사회주의 정치사 전반이 곧 선군 영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0년 6월 8일.

22) 김정일은 과거는 물론 금년 5월만해도 총 18차례의 현지도 횡수 중 14회를 군부대 방문에 치중하였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26일.

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새로운 통치노선으로 정형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내적 차원으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원인이 노동계급의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총대중시 선군혁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국가 또는 체제보위적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체제가 제국주의세력의 붕괴책동에 직면하여 통일과 단결의 중심을 군대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둘째는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외협상의 중요한 바게인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대외협상력 강화 수단의 측면이다.²⁴⁾ 셋째는 혁명과 건설의 과정, 특히 경제회생 과정에서 오로지 믿을만한 조직은 군대밖에 없다는 경제건설 과정에서 군의 기여도 측면이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 중에서 신사고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군대가 나서면 무엇이든지 완수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경제회생의 과정에서도 군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군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인민군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다"²⁶⁾라는 김정일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오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참신하고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

23)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p. 230.

24) 북한은 선군정치를 제국주의와 정치외교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보장하는 힘있는 정치라고 주장하고, 일례로 지난 94년 10월의 북·미 기본합의문을 선군정치에서 김정일 총비서의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25) 인민군대의 사업방식에 대한 김정일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의 예는 와산동-룡성간 도로확장공사시 청년일군들이 난관에 부딪치자 인민군대를 찾아 군사과업 수행정형을 료해하고 군인들을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난관을 헤쳤다라는 내용이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15일.

26) 『조선중앙방송』, 2000년 1월 24일.

는 인민군대에서 먼저 창조되고 있다. 우리가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자면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²⁷⁾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곧 인민군대가 가장 선진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바, 이것을 사회적 기풍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으로서의 신사고가 이미 군대내에서는 구현되고 있으며, 선군정치를 통해 이러한 신사고를 전체 사회에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신사고란 곧 선군정치의 강화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민군대의 어떤 점들이 김정일이 제시한 신사고와 맞아 떨어지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북한 전체사회에 ‘인민군대 따라배우기’ 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주민들과 당·정지도일군들의 사업방식과 사고방식을 혁신하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동신문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뛰여 들어 무조건 해내는 결사관철의 정신,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판을 크게 벌리는 대담성, 무슨 일이나 모가 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나가는 간진 일본새, 이것이 우리가 인민군군인들에게서 본 받아야 할 중요한 투쟁기풍이다.”²⁹⁾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지니고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패기있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간단히 정리하면, 결사관철의 정신, 대담성, 질적수준이 높은 사업태도 이상 3가지가 주민들과 지도일군들이 인민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민들과 당·정의 지도일군들은 이러한 사업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선 신사고의 등장배경에서 지적했듯이 북한 주민들과

27) 『로동신문』, 2001년 1월 4일, 1월 9일.

28) 북한이 전체 사회에 군사적 기풍을 세우려는 또다른 이유는 군대가 갖고 있는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29) 각주 27) 참조.

30)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당·정의 지도일군들의 복지부동하는 태도를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통해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인민군대의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따라 배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신사고와 선군정치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인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인민군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은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이다. 불패의 군력(군사강국)과 정치사상적 위력(사상강국)은 반드시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 안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고 주장함으로써 국가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업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건설에서 있어서 인민군대의 역할은 선군정치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유난히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용어로 경제일군들에게 고무되었다.

선군정치의 외연으로서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함께 경제일군들에게 많이 강조되는 구호(용어)는 ‘강계정신’이다.³²⁾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강행군이 시작되던 1998년 1월 김정일이 강계지역의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한 이후 2월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강계정신은 주체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 정신을 끊임 없이 심화시켜 나가자”고 주장하면서 강계정신에는 “죽음도 두려워않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북한의 이러한 강계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강계정신도 결국은 선군정치의 성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⁴⁾

31) 위의 신문.

32) 로동신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1년 1월 4일.

33) 『로동신문』, 2000년 4월 22일.

34) 위의 신문.

북한에서 인민군대의 경제건설 참여는 인위적이라기 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견고한 명령체계와 동원 체계를 갖춘 조직은 인민군대 밖에 없었다. 북한의 방송매체들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 또는 ‘대북적대시정책’이라는 문구들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역량을 경제활동과 사회통제활동에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당·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면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³⁵⁾

실제로 북한의 군대는 과거부터 해오던 대규모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에 일상적으로 투입되고, 버섯채취를 비롯한 외화벌이사업에도 군이 적극 나서왔다.³⁶⁾ 최근에는 기업소·공장이나 협동농장에 군인들이 투입되어 모범적인 일을 선보이면서 군 간부들이 이들의 경영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³⁷⁾ 또한 인민군대는 최근 북한이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강원도의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평북 태천 5호발전소와 태천언제(댐), 자강도의 송원언제, 량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과 삼지연군 포태종합농장 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군인들이 담당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북한이 경제회생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대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고’가 선군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분은 과학기술 중시노선이다. 노동신문은 “창조와 혁신은 높은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력이 없으면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35) 물론 중국의 경우도 1950년대 군대가 경제활동에 대규모로 참여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당시 중국이 느끼던 안보위협과 지금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6) 김병조, “김정일 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 통일원(1997), p. 91.

37) 이수석,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p. 238.

주장한다.³⁸⁾ 그러면서 실력배양의 필요성과 방법으로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학습을 꾸준히 하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에 완전히 정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³⁹⁾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왜 선군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가? 그 해답은 바로 북한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부문이 바로 군사분야이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모범적인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이다.⁴⁰⁾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서방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서방국가들과의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여타 다른 부문에서 인민군대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군사부문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강대국과 자신있게 맞설 수 있다는 국가자존의 차원이다. 둘째는 군대가 과학분야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룬 것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므로 다른 부문도 군대처럼 과학적 사고를 견지해야 모든 사업에서 최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수십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핵문제를 통해 외국의 지원을 획득하였듯이, 북한처럼 내부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는 최근의 ‘자력갱생’의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로동신문은 『자력갱생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기사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대외관계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고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의 현대적인 과학

38) 『로동신문』, 2001년 1월 9일.

39) 위의 신문.

40) 한호석,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p. 4.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해야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⁴¹⁾라고 자력갱생의 개념을 확대해 놓고 있다.

III.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 전망

1. 북한 변화논쟁의 몇가지 오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변화 논쟁은 세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느냐 불변하고 있느냐? 변화하고 있다면 본질적이나 비본질적이나?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오는 오류이다.⁴²⁾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변화의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하는 데서 생겨난 잘못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관찰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만을 놓고 변화를 운운하는 것은 참다운 사회과학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진보적인 것만을 변화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관찰자가 일정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예를들면, 다원주의와 시장경제)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만을 변화로 보는 일방적 규정에서 오는 오류이다. 변화란 퇴보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의 회귀도 변화이고, 그것을 퇴보적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보적 변화와 퇴보적 변화를 구

41) 『로동신문』, 2001년 2월 28일.

42) 김영수, “남북협력시대의 대북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국가안보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0. 10. 16. 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사실상 남조선 해방을 다짐한 노동당 규약을 고치려하고 있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남쪽과의 화해협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식 개혁모델이나 베트남식 개혁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 반면, 불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이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경제사정으로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장명순, “북한변화론 및 불변론에 관한 소고,” 『국방정책연구』, 2000년 겨울, p. 168.

분해야 하는 이유는 퇴보적 변화는 실질적 변화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럴 때,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정책 자체를 수구적 의미로 보지 변화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변화의 수준을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하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를 어미닭의 수준에서 관찰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아직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수준을 체제적 수준에 놓고 현재 북한의 변화가 본질적이나 아니냐라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변화를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가운데 그 과정의 가장 저차원적 수준인 정책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⁴³⁾ 물론 본질적 변화의 내용은 당연히 체제적 수준의 변화,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수령유일체제에서 민주주의, 이념적으로는 주체사상의 포기 여부가 그 측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낮은 수준에서의 변화를 우선 거친 이후의 논란거리라는 것이다.

2. 향후 정책변화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북한이 제창한 신사고는 선군정치를 부각시켜 전체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지상목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

43) 북한붕괴론이 지배적일 당시의 시각은 북한의 변화는 고차원적 변화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북한체제가 안정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는 저차원적인 변화에 착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차원적 변화의 선행가능성을 지적한 논문은 김성철 외,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1998).

지 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 첫째는 대내적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보급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며, 그 방식과 내용에서 다소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뒷받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셋째는 대내정책의 변화는 대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능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과 같이 내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대외정책을 통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식에서의 변화

북한은 향후 사상교양의 기본 방향을 김정일의 지도력 부각, 흐트러진 민심수습, 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의 함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미 98년도부터 고난의 행군(96~97년)에서 승리하였음을 자평하고, 승리의 원동력을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력'에서 찾고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김정일의 탁월한 영도 하에서 '사회주의 강행군'(98~99년)과 '구보행군'(2000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사고 등장 이후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정일을 난관극복형의 지도자상에서 선견지명을 갖추고 실력있는 21세기형 지도자상으로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선견지명에 의해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현대화'와 '정보화'의 화신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신사고 제창 이후 이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난', '강행군'과 같은 난관극복의 이미지는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창조와 혁신'이라는 테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주민들의 개혁·개방 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학

기술만 발전하면 자력으로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한 군비투자에 대한 불만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과학기술분야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군사비가 아닌 과학기술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정성옥 영웅' 만들기에 주력하였는 바,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영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에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사들의 비중을 늘리고, 신문독보회시 이 부분에 대한 독보와 토론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북한의 향후 사상교양은 흐트러진 민심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보다는 비사회주의적 개인우선주의에 물들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당에 대한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차고 다니는 여성당원들이 "김일성은 죽어서도 여자의 가슴을 애무한다"는 식으로 비꼬는 투의 말들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또한 일반주민들이 버스나 같은 공개장소에서 노골적으로 당·정의 간부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도 크게 제재당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한 대주민 사상교양의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물리적 방법을 통한 강압적 통제는 가급적 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법은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에 지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김정일의 21세기형 지도자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모범따라배우기식 교양방식의 비중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모범인물 따라배우기와 모범사업 따라배우기가 있으며, 전자보다는 후자쪽의 방법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물따라배우기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대표적인 모범사업으로는 기존의 '대흥단정신', '강계정신'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와 농업분야(특히, 토지정리사업)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주체사상이나 붉은기사상 중심의 교양보다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같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을 택

할 것이다. 이미 주체사상 중심의 사상교양은 북한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부터 그 강조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⁴⁴⁾

마지막으로 북한은 ‘혁명적 군인정신’ 함양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모두 설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혁명적 군인정신이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군이 지원함으로써 현장속에서 자연스럽게 군의 모범을 따라배우게 하는 방식을 빈번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와 정보화 추진

북한은 국가경제력의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현대화’와 ‘정보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그 이유를 “경제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경제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식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전선으로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꼽으면서 동시에 농업생산증대와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 생산과 같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존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기초부문, 경공업부문, 그리고 농업부문이라는 3대부문을 중시하면서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4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 251.

45)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2001년 5월 17일.

46)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그리고 북한은 정보화를 현대화보다 높은 단계로 규정하고, 현대화는 정보화와 결합될 때 그 물질기술적 토대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란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생산의 정보화란 “모든 생산과정이 정보설비와 결합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위해 “전국적 범위의 전반적 경영활동을 위한 컴퓨터망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컴퓨터산업과 프로그램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안목과 혁신적인 사상관점’을 갖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⁴⁷⁾

이미 북한의 각급기업소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발전설비들에 대한 측정과 기술자료 수집과 같은 매우 낮은 단계에 있다. 점차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북한은 남한과 서방세계의 선진과학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본도입의 필요성도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북한이 선진국가들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3) 대외평화분위기 조성 노력

북한은 이미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 유럽연합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북한이 이렇듯 적극적인 수교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일본과의 수교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왜 북한은 기존의 ‘강패’이미지에서 평화적 이미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47) 『로동신문』, 2001년 5월 17일.

48) 북한 최대규모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영화비닐신발공장, 위원발전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23일.

가? 그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전술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내적인 경제회생에 평화이미지가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안보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군사비 감축이나 군인력의 경제부문 투입이 현실적으로 모험이라는 판단을 할 것이다. 최소한 군사비는 감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실한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의 대남·대미관계는 낙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는 있었지만, 그 당시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지향점이 현재 단번도약의 시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외교정책의 최고목표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경제력 강화의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의미를 확대하면서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경쟁이 치열한 국제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기술이나 자본지원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북한은 여전히 불량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보·통신분야는 군사기술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에게로의 기술이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불량’, ‘깡패’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이 선진과학기술이나 자본도입을 위한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평화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외이미지 개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진력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단기간내에 끝날 사안은 아니지만, 미사일문제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주고 받는 대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불량국가로서의 이미

지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대미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한의 높은 과학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경제협력의 목표를 과학기술부문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개성공단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선진과학기술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할당(quota)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북한에서 신사고의 등장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신사고와 선군정치가 갖는 연관성을 분석한 다음, 그것이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주민들과 지도일군들 사이에서 비사회주의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출현하고, 패배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고위간부들에 대한 공개처형과 철적이 목격되면서 북한식 복지부동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러한 사고와 행동방식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구체적으로는 국가경제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당의 정치방식을 과학적인 실력배양에 힘쓰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신사고를 제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곧 김정일의 사업방식을 따라배우는 것으로 귀착된다.

김정일은 자신의 사업방식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인민군대의 모범적 사업방식을 주민들과 당·정의 지도일군들에게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대가 결사관철의 정신, 대담성, 질적수준이 높은 사업태도를 이미 구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초인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민군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하고, 인민군대가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의 강화를 통해 신사고를 전체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고는 곧 선군정치의 강화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앞으로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에 입각한 혁명

적 군인정신을 전체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고, 국가경제력 강화 차원에서 대외정책에서 평화적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교양의 강화는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며, 혁명적 군인정신의 함양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번도약에 필요한 '현대화'와 '정보화'에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평화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사고'는 분명히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는 다르다. 북한의 신사고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수단이다. 이러한 결론에 의거하면, 북한의 향후 변화 전망, 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진보적 변화 전망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배 성 인(명지대학교)

◁ 목 차 ▷

- I. 서 론
- II.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정보통신산업
- III.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별 현황과 그 실태
- IV.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새로운 모색
- V. 결 론

I. 서 론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노트북 PC로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e-메일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다.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어디서나 TV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알려 준다. 하지만 현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취해 곧잘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통신인프라다.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통신망과 인공위성 없이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는 불가능하다. 케이블을 땅 속과 바다 밑에 깔아야 하고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또 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리고 관련 통신장비 운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수많은 정보기술(IT)전문가의 땀과 노력도 필요하다.

20세기 인간의 발명품 가운데 으뜸가는 것들을 손꼽는다면 인터넷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적인 인간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전통적인 미

디어를 이용하던 습관대로,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양식 또한 인터넷의 진행방향을 바꿔놓고 있다. 21세기를 규정짓는 주요 키워드중 정보화와 인터넷이 그 중심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며 통합의 시대이다. 정보화는 또한 모든 민족국가에게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남북한도 작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부문에 있어 남북경협은 진전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교류협력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최근까지도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속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만큼은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열조짐을 보일 정도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그 특성상 가장 비정치적이면서도 남북교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분야보다 크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최근 들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 방문 길에 김정일이 정보기술(IT)산업의 상징인 중관촌을 방문(2000.5)하고, 올해 푸둥을 방문(2001.1)하면서 정보통신 산업 부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게다가 금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단번도약’을 발전전략을 내세우면서 남측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첨단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정보통신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정보통신 산업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협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안, 전통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그리고 급작스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은 소수의 전문기술자와 과학자 중심으로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

한 컴퓨터는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의 하나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활성화를 주된 정책적 우선 순위로 삼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은 정권의 체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부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정보통신산업

1.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을 더욱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김정일 시대의 출범과 함께 예전보다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김정일 정권의 발전전략으로서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¹⁾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1998년부터는 ‘과학중시사상’을 제시해 전국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촉구하였다.²⁾ 북한이 ‘과학중시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
- 1) 1998년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이 가시화되고 권력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 2)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에 대한 강조는 1998년 8월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시험발사 이후 빈번해졌으며, 이는 북한의 지도부에게 자신감의 회복과 인식전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북한당국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배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과학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 중시 정책이 이들 국가의 경제 봉쇄를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심규석,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 ‘백 걸음으로 달리자,’” 『통일경제』 제

북한에서는 지난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했고, 이후 김정일의 과학 기술 부문 현지지도(1999년 1월 11일 과학원, 3월 7일 과학원 함흥분원) 및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1999.3.25~26)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전자공업성을 신설(1999.11.24)함으로써 그 동안 금속기계공업성에서 담당했던 전자 및 정보과학 업무를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중시’를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하면서 강조하였다. 금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⁴⁾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 중시를 재천명하였다.

더욱이 과학기술 중시는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반영되었는데, 1999년에 ‘과학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지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0년 ‘과학기술 발전 사업비’에도 반영되어 예산편성 기준으로 전년대비 5.4% 증액했다.⁵⁾ 올해는 증액된 예산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 기술로 갱신하고 최신평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는데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된다”고 밝혔다.⁶⁾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특징을 보면 과학중시사상이 과학정치로 그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군님의 주체의 ‘과학정치’가 정보산업의 휘황한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다”⁷⁾는 주장처럼 과학정치가 새로운 통치논리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향후 과학관련 사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과학정치는 앞으로 과학·기술 열풍을 전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 간부층의 열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⁸⁾ 반면에 ‘주

64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4), p. 76.

4)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2001년 1월 1일.

5) 『조선중앙통신』, 2001년 4월 4일.

6) 『주간북한동향』, 제533호 (통일부, 2001), p. 48.

7) 『조선중앙방송』, 2001년 5월 19일.

8) 『연합뉴스』, 2001년 5월 19일(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1년 5월 20일).

체의 과학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보화를 위해 선진기술·설비 도입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상 이완 및 내부 동요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⁹⁾ 즉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떠난 자력갱생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⁰⁾ 폐쇄적 자력갱생에서 개방적 자력갱생으로의 노선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신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개방적 자력갱생 노선도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와 과학기술을 조화시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해도 당분간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겠지만 총체적인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과학기술에서 내걸고 있는 주체성, 자력갱생은 선진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한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¹⁾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¹²⁾ 첫째, 공장·기업소의 기술개선을 비롯해 과학기술을 전통산업의 생산현장에 적용, 보급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이다. 셋째,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기술 혁신이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의 목표로서 이른바 '정보통신 산업'의 집중 육성이라는 보다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보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도, 결국에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9) 『로동신문』, 2001년 1월 30일자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력갱생은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자력갱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조선』, 2001년 4월 22일자에서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해야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자력갱생노선’에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

10)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조선』, 2001년 4월 22일.

11) 심규석, 앞의 글, p. 83.

12) 양문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1년 5월 Vol. 15호 (LG경제연구원, 2001), pp. 11~17.

2. 김정일 정권의 ‘신사고’와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변화

그 동안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사상’ 등을 등장시켜 신사고 등장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시켰다. 그래서 최근의 발언들은 북한의 변화를 예시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낡고 뒤떨어진 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사색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한다”, “새 세기는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기술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새해 들어 부쩍 ‘신사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¹³⁾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산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점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관점을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신사고’ 강조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킨 채 과학기술 육성과 정보통신 산업으로 ‘단번도약’을 해보겠다는 의미이며¹⁴⁾, 정보통신 산업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관심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정보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첫 계기는 1984년 김일성의 유럽순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 김일성은 각국의 극소전자혁명(micro-electronics)을 목격하고 이때부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순방 국가들과 각각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생을 유럽 각국에 파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

13) 이런 논리에 반드시 결부되는 것이 종자론이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은 변화를 요구하지만 변화도 결국 김정일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가로서의 근본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종자론’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김정일동지와 뜻을 같이하는 참된 혁명가’라고 지난 5월 19일 조선중앙방송에서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이다.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관점과 실력 배양, 그리고 종자론을 통한 내적 사상성 강조 등이 모두 대중 차원의 선전구호 형태로 운동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14) 서재진, 『북한 ‘신사고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1-01 (통일연구원, 2001), p. 2.

로 시작된 것은 1988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1985년에는 4년제 컴퓨터 인력 양성전문기관인 조선계산기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이어 1986년에는 프로그램개발 전문기관인 평양정보센터를 그리고 1990년에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995년에 기초과학부문의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이과대학을 비롯하여 주요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평양시 은정구역을 과학자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동강 벨리를 형성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¹⁵⁾

둘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인 정보통신혁명과 김정일의 정책전환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다시 컴퓨터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된 것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정일 정권이 다소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1998년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의 식량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산업경제에서의 실패를 디지털경제로의 성공적 진입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래 매년 전국적 규모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해온 것이라든지, 1999년 11월 정보통신부문을 전담할 주무부서로서 전자공업성을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은 이러한 맥락이다.¹⁶⁾

최근 북한에서는 거의 매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컴퓨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있다.¹⁷⁾ 주민들에게 컴퓨터학습을 통해 정보화에 동참

15) 박찬모,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1999년 봄호 (청명문화재단, 1999), p. 124.

16)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2000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부, 2000), p. 113.

17) 최근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컴퓨터 시대이므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조선중앙방송』, 2001년 4월 20일;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사회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적 고리로 될 것,” 『로동신문』, 2001년 4월 27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참담게 이바지 할 수 없다,” 『청년전위』, 2001년 5월 16일; “사회발전에서 정보기술의 역할,” 『로동신문』, 2001년 5월 23일.

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정보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아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등에 컴퓨터과학대학을, 2001년 4월 1일엔 만경대학 생공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2고등중학교에 ‘컴퓨터수재반’을 신설하였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개최하여 인재양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¹⁸⁾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으로의 정책변화 모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가 과거 구소련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항상 통신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권이 정보통신을 확실히 통제하려는 시도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약(Great Leap)을 시도하는 것이다.¹⁹⁾ 이는 유럽의 아일랜드의 IT발전 배경과 유사하다. 산업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21세기에 산업화에 주력할 경우 정보화를 달성하기에는 격차가 심해지는 만큼 산업화를 축소하고 바로 정보화를 시도하는 계획으로 아일랜드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²⁰⁾

김정일은 1998년 2월 8일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시찰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는 이 때 “과학시대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프로그램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며,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술교류와 경험교환을 활성화하며, 어려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조선컴퓨터센터의 최웅철 기사장은 이 시찰이 북한 컴퓨터 기술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¹⁾

18) 북한이 인재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조건하에서 본격적인 정보통신 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인재양성 및 정보통신 산업화 분위기 조성에 치중하는 당면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북한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 산업연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여력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부여잡은 일종의 ‘단번도약’ 혹은 ‘도약발전론’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하드웨어 분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설비투자가 비중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20) 남성욱,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를 통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전망,” 『통일경제』, 2001.5·6호, 통권 제75호 (현대경제연구원, 2001), p. 60.

21) 일본의 라디오 프레스, “북조선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북조선정책동향』 제

지난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회의에서 가공무역법과 함께 채택된 저작권법은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서방 선진 기술도입 및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나름의 강한 정책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역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북한의 잠재력을 생각케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한 기업과의 경험에서도 북한이 주로 정보통신 관련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2000년 7월 10일에 북한 공식 인터넷 사이트의 영문판을 전세계에 송출했고²²⁾, 이미 북한의 공식 언론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분명 북한의 최근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과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의 개방과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를 위한 폐쇄의 불가양립적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부분적 통제완화 등과 같은 북한 스스로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III.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별 현황과 그 실태

1. 북한의 컴퓨터 보급현황과 시스템 수준

1) 하드웨어

북한의 주요 컴퓨터 생산업체로는 평양컴퓨터조립공장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연구소, 평양 IC생산공장, 김책공대 반도체연구소 등이 있지만 대부분 실험실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의 하드웨어 수준은 남한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수준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

14호, No. 310 (2000년 12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 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01. 1), p. 65에서 재인용.

22) 북한은 2000년 7월 10일 북한 관련 정보와 뉴스를 영어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북조선 인포뱅크 (<http://www.english.dprkorea.com>)'를 개설했다.

통된 시각이다. 북한은 지난 1960년대 말 ‘전진-550’이란 1세대 디지털 컴퓨터를 완성할 정도로 초기에는 하드웨어산업이 한국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현재는 선진기술의 도입 부진으로 기술력이 크게 낙후된 상태이다. 1970년대 말에는 ‘용남산 1호’라는 제2세대 컴퓨터를, 지난 1982년에는 8비트 PC인 ‘봉화 4-1’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는 32비트 PC를 생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평양컴퓨터조립공장에서 연간 3만여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국방 및 공공기관용으로 보급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대부분 486급 이하이며, 펜티엄급 컴퓨터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국방산업 분야에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공정 자동화와 경제관리 운영에서 사무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공장 기업소에도 컴퓨터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³⁾ 특히 최근에는 펜티엄급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노동당 및 인민무력성 등에 집중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통신체계를 개선하여 인터넷 활용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²⁴⁾

최근 평양에 있는 전자공업생산하 전자제품개발회사에 컴퓨터조립생산 공장이 건립되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컴퓨터는 펜티엄Ⅲ급 및 Celeron급의 최신 기종이며, TV카드와 PCL(음성)카드, LAN카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²⁵⁾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이라기보다는 시험적으로 조립하는 모방생산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고급 컴퓨터의 북한 반입은 불가능하지만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부품과 완제품을 이용해 북한이 연구용으로 펜티엄Ⅲ급 컴퓨터를 생산, 관련기관에 분배하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다.²⁶⁾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대포동 1호와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보면, 제2경제

23)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과학과 사회』 창간호 (김영사, 2001), p. 33.

24) 남성욱, “인터넷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 현황,”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0), pp. 79~80.

25) 『조선신보』, 2001년 5월 17일.

26) 『연합뉴스』, 2001년 5월 19일(<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1년 5월 20일).

위원회 산하의 국방 산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 제1고등중학교, 각 대학 전자공학부,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은 남한에 비해서 기술이나 자본 그리고 인프라 등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이다. 이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이를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인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관련 첨단장비와 기술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기인한다. 그 외 북한의 경제난과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서 컴퓨터 보급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전반적인 컴퓨터 개발 수준은 남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사일 발사 분야 등 일부 군사 부문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컴퓨터 수준이 남한보다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 보급의 저조와 기술인력의 질적 저하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자본과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분야의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 소프트웨어

북한은 하드웨어 분야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과 시설이 부족한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두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한 남측관계자들은 북한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진 문자·지문인식 프로그램을 보고 놀라웠다고 전한다. 북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매우 다양하고 수가 많아 모두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그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성인식과 지문인식 분야에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남한의 중상급 정도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또 1990년부터 매년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 북한실

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남한과의 교류 협력 시 가장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은 조선컴퓨터센터(1990)와 평양 프로그램센터(1986)를 양대축으로 국가과학원내 프로그램종합연구소(1983), 김일성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계산연구소(1983), 평양전자계산기 단과대학(1985),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1995)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항공교통지위시스템, 심혈관계통예보진단기, 지문인식시스템은 물론 바둑프로그램 ‘은별’도 개발했다. 평양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한 경영 및 기술프로그램 60여종은 북한내 기업소·농장 등의 자동화·과학화에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지문 인식 등 각종 인식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며, 각종 제어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자동 지문인식프로그램’과 ‘체질분류 및 진단체계’ 등은 남한의 정보통신업체들이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²⁷⁾

북한은 워드프로세스 등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한의학 의료 정보 시스템, 자연어 처리 시스템, 위성 등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²⁸⁾ 현재 북한의 소프트웨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바둑프로그램인 ‘은별’이 지난해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 특히 남북 공동 컴퓨터자판 개발,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계번역, CAD(컴퓨터보조설계)·화상처리프로그램(이미지뷰어) 등 각종 프로그램 활용 등은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다.²⁹⁾

27) 인터넷 전문기업인 (주)넥스텔은 2000년 9월 23일 일본시장에서 북한의 음성 및 문자인식 관련 원천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창현, “인터넷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인터넷 시대의 민족통합』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연례 학술대회, 2000.11.24), p. 9.

28) 2000년 5월 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999년 12월 조선컴퓨터센터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9) 북한은 자체 문서편집프로그램인 ‘창덕’상에서 기계번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영어·러시아어·일어 번역프로그램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센터 김동권 실장은 2000년 10월 18일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영어 번역프로그램이 영어로 된 과학기술자료들을 시간당 100페이지 속

남북한의 정보통신 산업 중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은 윈-윈(Win-Win)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황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황은 극히 열악한 데, 아직도 노후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의 활성화가 체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치적인 면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신시설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열악한 통신환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표 1>)³⁰⁾

<표 1>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비교(A/B)
가입전화시설수	천회선	1,307	24,382	0.05
전화가입자수	천회선	1,100	21,569	0.05
100인당 보급률	대	5.2	44.1	0.12
공중전화시설수	회선	2,720	538,983	0.005
100인당 공중전화보급률	대	0.13	8.7	0.015
이동전화가입자수	회선	500	26,816,000	0.00002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	12,051	0.01
TLX 가입자수	회선	1,862	13,500	0.14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61.8	0.07
종사원수	명	15,000	60,100	0.25

자료 1) 북한: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1999).

2) 남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국(www.mic.go.kr 검색일 : 2001년 5월 31일).

도로 번역할 수 있어 하루 평균 300페이지의 과학기술도서 3권을 번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창현, 앞의 글, p. 10.

- 30) 북한의 통신시설은 고립정책으로 인하여 북한 내부의 사정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ITU가 해마다 보고서를 제공하지만 그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으며, 국내 학자들의 현황조사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래된 자료라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1) 시내전화

1999년 국제통신연맹이(ITU)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화 가입자 수는 110만 회선에 불과했으며, 북한의 주민 100명당 5.2대의 전화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전화는 당간부 등 지도층에만 설치되어 있고, 일반주민들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설치된 공동전화 및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네트워크에 있어서 국제전화와 광통신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은 대단히 열악하지만 끊임없이 현대화 방침과 기술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광통신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최근 통신조류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색을 엿볼 수 있다.

2) 시외전화

북한의 시외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의 도, 시·군, 리로 연결되는 선형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 도, 군, 읍 및 중요 산업기지를 연결하고 있다. 시외전화망은 개인의 통신수요 보다는 산업목적과 행정목적 위주의 전화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97년 4월8일 체신절을 기해 “국내통신분야에서 중앙과 지방, 시, 도 사이의 빛섬유 통신과 숫자식 통신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가 실현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어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개 시·군간의 교환기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타 단위지역들과 평양간의 스위치는 아직도 500석 규모의 수동식 교환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3대 직할시와 9개도는 약700대의 교환기에 의하여 연결이 되고 있다. 이 교환기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계식인 step-by-step 또는 crossbar 방식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교환기는 프랑스 알카텔의 E10A형 자동교환기까한 대 평양에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므로 시외전화 교환방식의 디지털화 비율은 4.6% 정도에 이른다.³¹⁾

31) 김유향, 앞의 글, p. 126.

3) 광통신망

북한이 1990년대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1992년 4월 UNDP의 지원으로 평양광섬유케이블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통신망의 광섬유 케이블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5년 1월 27일에는 평양-함흥간 300Km의 구간 광케이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함흥-청진-나진-훈춘간 530Km 구간 공사를 완료하였다. 1997년에는 평양시의 전화분국과 평성시, 동해안과 서해안 700Km를 연결하였고, 1998년에는 평양과 50여개 시·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중 평양-신의주, 평양-남포등 36개 시·군을 현재 연결한 것으로 전해진다.³²⁾ 또한 중국통신업체는 1999년 11월 북한이 중국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북경에서 평양까지 연결하였다고 밝혔다.³³⁾ 또한 판문점에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대체한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1회선, 문서 영상 등 데이터통신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었다고 한다.³⁴⁾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광통신 기술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통신 기술, 반도체 기술 등의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광통신 실현 및 확대 운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대부분 평양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전역의 기간망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다.³⁵⁾

4) 국제전화/위성통신

북한의 국제전화망은 유선, 무선,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통신망은 구사회주의권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방국가와는 평양-싱가

32) 한국전산원, 『2000국가정보화백서』 (2000), p. 382.

33) 『뉴스메이커』, 2000년 2월 24일.

34) 『한국일보』, 2000년 8월 12일.

35) 류정우, “남북한 통신협력의 확대와 통상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3권 8호 통권 27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5.2), p. 4.

포르-홍콩간의 단파 무선과 중국의 북경 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의 통신은 AT&T가 199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세 도시에서 평양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평양으로부터의 국제자동전화(IDD)는 세계 170개 도시로 가능하다. 국제전화의 회선수는 1970년대에는 5회선, 1980년대 33회선으로 증가, 1997년 120회선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2000년 6월 14일, 미국 스타텍 글로벌커뮤니케이션사를 통해 인터넷 방식의 전화인 VoIP서비스를 국제구간에 도입하였다.³⁶⁾

북한의 위성통신사업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지원으로 1985년 평양에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을 완공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84년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공산권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통신의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1986년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인텔샷(INTELSA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³⁷⁾에 대한 위성통신지구국을 평양에 건설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지역 국가를 제외한 서방 여러나라와의 위성통신 및 위성TV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국내 통신과 위성통신시스템을 총괄하고 국내외 통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89년에 국제통신센터를 완공하였다.³⁸⁾ 그리고 소련을 비롯 동구권과 직접위성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해 소련의 기술 원조로 1989년 상반기에 「인터스푸트니크 위성통신지구국」을 건설하였다. 1990년 8월에는 UNDP의 원조로 현대화된 「기상위성수신소」를 건설하여, 기상기관의 감시계획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1990년 11월 북한과 일본이 직통위성회선 및 국제전용회선서비스 제공에 합의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1회선이 연결되었다.

36) 김유향, 앞의 글, p. 126.

37) 북한은 2001년 5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인텔샷에 14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북한의 가입은 국제사회진출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전화, 위성중계방송 등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29일(<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1년 5월 30일).

38) 김상택·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경남대 국등문제연구소/(주)하나로통신 편, 『인터넷과 북한』(2000), p. 164.

5) 이동전화

북한에서 이동전화는 나진·선봉지대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진·선봉지대에서 통신망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NEAT&T(동북아전신전화회사)의 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00년까지 나진시 안주동과 신흥동 일대에 통신센터 및 위성통신지구국을 건설하여 수동식 교환기 4만 회선, 이동통신설비 1,200회선, 무선호출통신 설비 1,500회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7월에 나진·선봉지대에 이동기지국이 개통되어 이동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 지역에 이동전화 500회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⁹⁾

3. 북한의 인터넷 인식과 활용

정보통신의 핵심은 인터넷이다. 북한이 현재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정보통신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주소를 총괄하는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 미국소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다.⁴⁰⁾

북한의 과학자들도 인터넷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매우 크게 공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96년 2월에 발간된 ‘과학의 세계’에 “과학 연구와 국제정보 통신망-인터넷”라는 글과 “정보고속도로”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으며, ‘과학의 세계’ 1996년 3월호에는 “인터넷에서 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인터넷의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잡지 이외에 정치적 성격의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2000년 1월 21일자에서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망으로 많은 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39) 공영일, “정보통신부문의 남북 교류 협력 발전 전망,” 『통일경제』, 2001.1·2 통권 제73호 (현대경제연구원, 2001), p. 49.

40) ‘팝’처럼 지역적 독립성을 가진 곳을 포함한 세계 242개 국가중에서 유일하다.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7년 6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원격 검색시스템으로 자체 개발한 ‘광명’을 설치했다. 즉 국가과학원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중국, 러시아와 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조선컴퓨터센터, 인민대학습당,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과는 광명이라는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광명이라는 광역전산망은 자료검색과 전자우편이 가능하지만 국제통신망 접속은 불가능하다.⁴¹⁾ 광명은 주로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에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에도 고성능 컴퓨터가 적지 않게 도입돼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북한은 2001년 5월 10일 중앙TV를 통해 최근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매일TV로 방송되는 ‘오늘의 소식과 상식’프로그램을 전자신문 형식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앞으로 정보시대에 맞게 컴퓨터망 출판물인 전자신문을 문자, 조형, 사진은 물론이고 음성, 움직이는 화상들을 모두 포함한 다매체 전자출판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혔다. 이번 전자신문의 발행은 그 동안 특정분야에 대해 일부기관간에만 소통되던 인터넷이 일반 주민들까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외적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⁴²⁾

북한도 남한의 국가 도메인(kr)처럼 인터넷 국가코드(kp)를 부여받았지만 아직 도메인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⁴³⁾ 실제로 북한은 인터넷을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유사조 침해의 루트로 간주,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고 국방관련 정보수집자,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대남 심리전 및 대외무역 종사자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광명을 개발, 운용하고 있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자메일로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이 기관은 “1300여개의 단위를 망라한 하나의 거대한 전국적 전산망을 형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방송』, 2000년 12월 23일.

42) 『주간 북한동향』, 제538호 (통일부, 2001), p. 19.

43) 이것은 북한이 직접 IANA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인터넷정보센터(APNIC)에서 한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미주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준비해 왔다. 1999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기념일을 기해 최초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를 개설하였다.⁴⁴⁾ 조선인포뱅크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중국북경에서 개설한 홈페이지로서 북한의 주요 뉴스, 법규, 산업, 무역,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는 이념적인 사이트와 상업적인 사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일정부분 국제적인 인터넷 교류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⁴⁵⁾ 등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대표하는 사이트로는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www.dpr-korea.com) 등 20여 개 정도 알려져 있지만 북한내에 서버를 두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북한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한다.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나 일반인의 인터넷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 인터넷 도입의 폭을 확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내부체제 정비의 착수이다.

인터넷은 또한 컴퓨터의 보급 상황 및 다루는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문제는 컴퓨터의 대중화다. 남쪽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인터넷 열풍이 북한내에서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은 정보 유통

44) 최근 국가정보원은 조선인포뱅크를 북한의 공식 사이트라고 밝히면서, 이 사이트는 북한이 개설한 첫 공식 인터넷 사이트로 남게 됐다.

45) 작년에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움에 북한이 조총련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반도문제연구소의 리평길 소장과 일본 주재 북한무역대표부의 박송웅 대표를 파견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허운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o.3 (2000. 10), p. 53.

46) 북한과 관련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남성욱, 앞의 글; 김연각,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평가: 북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하나로통신 편, 『인터넷과 북한』 (2000) 참조.

을 단속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도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 컴퓨터 자체가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은 안으로는 자본부족, 밖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전략물자 반입 제한 등 ‘적대적 국제환경’ 탓에 개발관련 장비 등 하드웨어 기반이 취약하다. 또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한 경계심과 인터넷 접속제한이 상징하듯 심각하게 낮은 사회·정보 개방과 국제화 수준은 정보통신 발전의 핵심변수인 유연성, 신기술동향과 급속한 기술변화, 시장수요 등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IV.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과 새로운 모색

1. 남북 정보통신부문 교류협력: 기회와 도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으나, 부시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냉각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스포츠교류에서 일정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일각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교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거품론이라는 말과 함께 과열경쟁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남한의 업체들이 북한과의 정보통신 교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김정일 정권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노력 덕분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김정일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산업단지를 시찰하여 중국의 발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관심이 북한의 국가산업 정책에 반영되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 협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남한측으로서는 기술

력을 겸비한 북한의 저렴한 정보통신 인력의 활용, 상대적으로 발달된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활용 등이 큰 유인이다. 반면 북한측으로서도 남한과의 정보통신 협력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승부를 걸 것이며 여기에는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도약발전형 경제개발 전략이란 경제재건을 위해,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전통적인 산업발전단계를 밟지 않고 곧바로 첨단 산업으로 직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남한 업체들의 입장에서선 위에서 언급한 북한 고급 인력에 대한 저렴한 활용뿐만 아니라 이들 고급인력들은 이동이 잦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 부문은 별다른 설비투자나 물류비용의 투입이 없어도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 정보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⁴⁷⁾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업체들이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과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경험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반입과 하드웨어 임가공, 소프트웨어 임가공, 정보기술 단지 조성, 방북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투자가 가능한 방식으로,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지속성있는 교류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47) 남북한이 정보통신 교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선점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교류가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표 2> 남북 정보기술 협력 주요 현황

업체	사업내용	사업구분	비고	북한측 파트너
삼성전자	문서편집기 S/W공동개발, 게임 S/W 수입판매	S/W공동개발, S/W반입	조선컴퓨터센터와 북경에서 연구소 설립	조선컴퓨터 센터
하나로 통신	스플리터(신호분배기) 임가공, S/W공동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네트워크 장비 임가공, S/W공동개발		삼천리총회사
IMRI	모니터 임가공 공장설립, 다국어 번역기 공동개발하여 일본 판매	장비 임가공, S/W공동개발 판매	2000년 140만불 임가공제품 반입	삼천리총회사
하나비즈 닷컴	단동에 IT공단조성, 대북 컨설팅 사업, 남북한 S/W개발 합작회사 설립	공동개발	평양정보센터와 공동연구, 합작회사 자본금 200만불 규모	민족경제협력련 합회(민경련)
엘사이버, 엔트렉	3D 콘텐츠 임가공, 북한 S/W 인력 교육센터 설립	임가공, 공동개발	엘칸토의 자회사들로서 엔트렉은 평양에 '고려기술개발제작소' 설립 예정	광명성총회사
시스젠	법태가 운영하는 '조선인포뱅크'의 미러사이트 운용, 중국자회사 설립하여 법태의 S/W위탁 개발 계약	위탁개발	35만불 수준의 S/W 개발	법태평양조선민 족개발촉진협의 회(법태)
중원기업	한방체질진단시스템 '금빛말'반입	S/W반입	케어코리아에서 판매	
기가링크	전화선을 이용한 초고속통신망(T-Lan) 평양정보센터에 무상 설치, 향후 유상설치 추진	네트워크 구축		평양정보센터
우암닷컴	평양정보센터에 영상회의 시스템설치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엘엔아이 소프트	평양정보센터와 번역S/W 공동개발 합의	S/W 공동개발	단동에서 개발, SW의 저작권과 판매권은 양측이 공동소유	
SK텔레콤	이동전화 사업 추진			
온세통신	금강산지역 통신망 구축사업			금강산관광 총회사

특히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표적인 성과로서 지난 5월 10일 남
북 최초의 정보기술 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가 중국 단동에서 공식
출범한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기회의 측면에서 남북의 우수한 정보기
술 인력이 처음으로 민간차원에서 함께 소프트웨어 상품화의 첫발을 내딛

었다는 게 중요하다.⁴⁸⁾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북쪽의 정보기술이 하나프로그램센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리고 대포동 미사일 개발이라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지닌 북한과의 협력은 그 동안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남한이 소홀히 했던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북쪽에서는 보안 솔루션 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통일 이후 군사적인 측면에서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가치는 높다. 물론 남쪽의 업체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윤을 목적으로 북쪽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지나치게 과장, 왜곡 선전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 외에도 평양정보센터가 200여종의 정보통신 전문도서 기증을 정식을 요청한 것,⁴⁹⁾ 남북 공동의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 그리고 컴퓨터 자판배열 자모순서 IT용어 등에 대한 남북 공동안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몇몇 업체를 빼면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는 못했다. 그런 면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은 하나의 도전이다. 단기적 수익이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남북교류에 도움이 안된다.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회수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의 역할은 북한이 최소한의 정보통신 기반을 갖추 수 있게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담보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보통신 교류의 활성화는 남북한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8) 남쪽의 하나비즈와 북쪽의 평양정보센터가 단동을 택한 이유는 공업도시인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단동-신의주 정보기술밸리”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년 번거로운 방북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북접촉 승인만으로 사업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동이라는 지역적 공간이 바세나르협정의 저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협조 아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른 역풍을 최소화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 서현진, “‘하나프로그램센터’ 이렇게 합의됐다,” 『남북이 함께하는 민족 21』, 2001.5 (민족이십일, 2001), pp. 58~61 참조.

49) 도서교류는 도서목록을 통해 북한의 IT산업현황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북한에 남한 IT기술 추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데다, 남북한 IT전문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화적 이질감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북 정보통신부문 교류협력의 걸림돌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목표와 바람직한 방향이 잡혀있지 않고 그 성과도 미지수이다. 그것은 북한관련 정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⁵⁰⁾ 남북한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교류하려는 남쪽기업은 많은데 이를 수용하는 북한측의 창구는 제한되어 있다. 남한은 체계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북한은 대남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남한정부가 공식적인 채널을 개설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진출 추진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법령에 따르면 북한과 통신교류협력을 위해 접촉 또는 통신하기 위해서는 15일전까지 통일부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접촉후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남북협력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다음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사안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를 간소화한다면 교류협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통신인프라 미비도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수부문의 정보통신 산업은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민수부문의 경우 통신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북한 전체 산업 중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도 중요성을 지닌다. 인터넷은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통로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전통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50) 북한을 한 두번 다녀온 것만으로 북한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일부 기업인들도 문제이고, 이들의 말만 믿고 교류와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다.

통신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 제도이다.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바세나르협정⁵¹⁾에 의해 정보통신분야가 대북수출규제에 묶여있는 것이다. 바세나르협정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북한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전략물자수출에 제한을 두었는데, 이중용도 품목, 즉 민수용으로도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같은 분쟁우려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486급 이상의 컴퓨터는 지원자체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⁵²⁾ 현재 중국산 펜티엄급 컴퓨터가 북한에 반입되는 상황에서 남측이 북한에 구형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세나르 협정에 의해 컴퓨터의 북한 제공을 일률적으로 가로 막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작년 6월 19일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조치를 완화하여 많은 기대를 갖게 했지만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기술 집약적 상품들과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여전히 GSP(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부여 문제도 미 해결상태이다. 결국 북한의 국제적 기술도입과 남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은 국내외적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3. 남북 정보통신 부문 교류협력의 개선 방안 및 추진방향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나타났으며 현재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이다.⁵³⁾ 이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51) 바세나르협정에 대한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wassenaar.org>) 참조.

52) 이런 물품은 전략적으로나 군수용 목적의 체제유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386급이, 지금은 486급 이상이 체제되는 실정이다.

53) 연구성과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물들은 다음과 같다. 김규륜,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8-16 (민족통일연구원, 1998); 최신립,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KIET 정책자료 제83호(산업연구원, 1999); 박찬모, “북한의 정보 통신기술 수준과 남북협력방안,” 『통일경제』 1999.7 통권 제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9); 허운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o.3 (2000.10); 김상택·공

로 교류협력 방안을 정리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북 정보통신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그 내용은 먼저 남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를 구축,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화 등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바세나르협정에 의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 문제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바세나르협정이 남북경협을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 둘의 양립은 불가능하다.⁵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용도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컴퓨터 용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용도 판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판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일반적으로 바세나르체제는 미국의 대북한 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제적 다자간 협의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하므로, 미국의 바세나르협정에 대한 영향력 역시 크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1일에는 북한이 미국에 의해 14년째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으로써 그 명예를 벗지 못했다. 이 것은 북한이 서방의 지원을 받는 데에 치명적인 족쇄가 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의 대북제재사항들은 자

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주)하나로통신 편, 『인터넷과 북한』(2000);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2000.8 통권 제68호 (현대경제연구원, 2000); 제성호, “남북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3권 7호 통권27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54) 바세나르협정은 현대전자의 남북경협 사업도 좌절시켰다. 1999년 현대전자는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150만 달러어치 컴퓨터 조립설비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통일부에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바세나르협정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을 바세나르협정이 막아버린 것이다.

동 해제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제조치가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세나르협약 등에 의한 핵이나 미사일개발과 관련된 제품 및 기술의 거래는 계속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신뢰할 만한 담보가 있으면 반출은 허용되어야 한다. 결국 현재적 상황에서 북한내 용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⁵⁵⁾

셋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다.⁵⁶⁾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주민 접촉 및 남북협력사업 승인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과 남북통신교류협력법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남북통신교류 촉진을 위해 접촉승인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완전폐지가 어렵다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에 의한 접촉부터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편, 통신에 의한 접촉때마다 결과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보고토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국내기업들이 조선인포뱅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상품 판매를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를 기존의 접촉 승인제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북한주민 접촉,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 정보화 방향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보화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연구교류를 활성화해서 남북한간 정보화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화 기반⁵⁷⁾ 구축을 추진하고 후 북한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후에는 남북을 연계하는 필수적인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되 사회간접자본

55) 김연철,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2001), pp. 169~170 참조.

56) 내용은 주로 제성호, “남북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3권 7호 통권27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참조.

57)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대구축, 정보화추진인력 양성, 정보서비스 거점기관 등

구축 등 초기에 투자 규모가 많은 부문의 정보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등 실용적 가치가 높은 정보컨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그 내용으로는 남북간 통신망 연결, 통신 협정, 남북한 이산가족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포탈 사이트 구축, 도메인 통합, 전자상거래 구축 등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균형적 발전이다.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화 교환기 교체와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터넷 등 남북 정보통신망이 구축될 것이다. 단, 시장 선점이 중요한 통신사업에 있어, 북한의 통신망이 외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통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한다. 공공성 측면의 사업은 정부의 몫이며, 상업성 측면의 사업은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과제 추진에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북한의 수용자세이다. 남북간에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북한도 정보화를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보화는 체제의 동요와 혼란 나아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정보화를 막아야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를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은 이제는 정보화의 가운데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남북 정보통신 교류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남북교류는 기술뿐 아니라 콘텐츠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남한의 빠른 정보 수집력과 북한의 창의적인 정보 가공 능력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V. 결 론

현재 북한에는 컴퓨터의 열풍이 불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컴퓨터와 관련한 대대적인 사업개선을 추진하면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거의 매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컴퓨터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컴퓨터학습을 통해 정보화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의 노후와 저조한 보급 등은 북한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남한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지난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서 남한의 IMRI가 북한의 다국어 언어처리 기술을 활용해 합작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스라스라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역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도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 협력은 활발한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정보통신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영재교육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면 남북이 협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적극성은 '반드시 전진만 있을 뿐이지 후퇴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정보통신 산업이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정도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내기에는 당분간은 현실적 제약이 많다. 우선 정보통신 산업의 각종 인프라가 취약하며,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다 하여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내수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기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산업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를 추구할 경우 소수의 고급인력에게만 기회와 부가 집중되게 된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정보화는 또는 정보통신 산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 부문 만큼 정치나 이념의 영향을 덜 받는 부문은 드물다. 정보통신 부문의 교류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동질성 확인과 신뢰성 구축에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양측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책이 정보통신 산업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산업화시기도 거치지 못한 채 정보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북한 정보화의 격차는 통일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져도 엄청난 통일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북한이 산업화 단계를 거쳐 정보화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남한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남북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남북교류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남한의 앞선 인터넷 수준이 역량이 부족한 북한의 인터넷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냉혹한 시대에 남북한이 힘을 모아 그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민족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서평>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한울, 2000).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밑으로부터’의 담론

김 성 철(통일연구원)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향방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는 개혁의 구조적 요구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우리의 지적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1년 초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 방향과 경로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같은 논의는 주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사회저변의 정치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았다. 『계획에서 시장으로』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인 이차경제(second economy)의 형성이 체제속성의 변화 또는 체제변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술했다고 한다.

I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연구 목적은 북한에서 나타나는 이차경제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이것이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치적 지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다. 여기에다 저자는 이같은 변화들이 내포하는 정치사회적 정향들을 근거로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제1장은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저자의 연구방법이다. 먼저 저자는 정치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정치는 ‘사회적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사회를 결속시키는 결정 산출’의 과정과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또 많은 정치학자들은 권력의 획득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치주체들의 이합집산과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을 쓰면서, 공식적인 권위관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은폐된 정치까지를 포함하였다. 특히 연줄망이라고 불리우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방법론으로서 왈더(Andrew G. Walder)와 코르나이(Janos Kornai) 등의 신제도론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의 주장이 신제도론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치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제2장은 북한에서의 탈계획적인 이차경제의 형성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사회주의체제 일반에서의 이차경제 개념과 이를 형성시키는 근원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계획경제가 가지는 내재적 불안정성이 이차경제를 형성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설명하였는 바, 구체적으로 계획경제는 경제순환과정에서 계속적인 병목현상과 물자공급의 불확실성을 낳음으로써 하부 생산단위에서는 생산능력을 은닉하거나 원자재를 비공식적으로 비축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첫째, 이렇게 비효율적인 계획과 연속적인 부족은 화폐의 기능, 즉 부의 축적, 교환, 및 평가의 수단으로서의 돈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달러와 같은 외화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오늘날 북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비효율적인 계획에서는 전반적인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로비스트로서의 해결사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사회 전반에 일종의 ‘인맥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61) 해결사들은 인맥에 의거해 시장법칙이 아니라 부족분의 법칙에 따라 활동하는 동시에 이차경제의 형성을 재촉하는 역할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

제3장은 북한 계획경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난

가운데서 이차경제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먼저 저자는 1990년대 이후 배급제와 자재공급제 등 중앙계획경제의 약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소비재영역을 중심으로 한 암시장의 발달과 ‘준시장경제’로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94) 식량배급제가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분권적 요소가 강해지고 이에 따라 심각한 식량부족의 정도가 지역간에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나진·선봉지대나 두만강 및 압록강 지역은 중국과의 물물교환으로 식량부족이 다소 완화된 반면 북부 산간지역이나 동부 지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는 농민시장이 암시장화되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품목이외에 불법적 품목들의 거래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농민시장에 식품, 주류, 수산물, 의류 공산품 뿐만 아니라 기업·공장의 설비나 기자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저자는 ‘준시장경제’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같은 용어의 사용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떠나서 북한경제의 비공식 영역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계획경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이 흥미롭다고 하겠다.

제4장은 경제의 실제적인 이중구조화가 북한 사회주의의 지배 기반을 어떻게 잠식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이차경제의 형성이 사회주의적 정치제도에 미친 영향 또는 정치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첫째로 경제적 이중구조화는 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데, 1990년대 이후 자력갱생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군(郡)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하부단위들의 창발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는 분명 중앙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것이 하부단위들의 ‘강제된’ 자립화를 낳았다고 말한다.(151) 둘째로 이중구조화는 당·국가의 간부층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 바, 간부층은 이차경제 활동으로 인해 비공식적 수입원이 확보됨에 따라 상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성이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당·국가 조직의 통합성 약화를 가져와 가부장적 지배·피지배 관계에서의 변화를 낳는다고 저자는 해석하였다.(169) 셋째로 이중구조화는 국가 및 간부의 일반 주민층에 대한 감시 및 통제활동이 약화되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고 비공식적 수입원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5장은 계획경제의 침식과 탈계획적 경제행위들의 증대가 가져오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변화를 근거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을 분석하였는데, 저자는 여기서 북한이 이미 ‘점진적 시장화’의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220) 저자는 계획경제의 위기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차경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新)분조관리제나 나진·선봉 등의 국지적 개방으로 나가는 점진적 시장화의 과정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획경제에서의 위기가 일부 개혁적 요소의 도입과 개방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점진적 시장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개혁·개방이 시장적 요소의 도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점진적 시장화라고 단정하기에는 북한의 상황이 아직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점진적 시장화란 개념을 사용하려면 시장화 또는 시장의 의미를 규명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 제도로서의 시장은 노동, 자본, 상품의 투입과 산출 과정에 대한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하의 소유권, 시장 인프라의 형성, 관료적 통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병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즉, 점진적 시장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 인프라가 이차경제의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원시적이거나 국가재정을 대체하고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메카니즘이 발전하는 징후를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과 제7장은 북한체제 전반의 전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계층분화 또는 계층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이다.(237) 구 노멘클라투라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윤추구 행위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흔히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이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험적으로도 러시아와 중국 등 경제전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II

저자가 논리 전개에 있어서 간혹 중복된 주장과 유사 사례들을 들으로써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대한 저자의 입장과 문제 파악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또한 사회과학적 토론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한 저자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방법론적 및 이론적 논쟁을 낳을 만하다.

먼저 저자는 방법론에서 ‘아래로부터의 시각’과 신제도론적 접근법을 택한다고 하였다.(31-33)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시각’은 정치의 개념을 권력엘리트 차원의 권위관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저변의 아래로부터의 정치사회적 지지’와 체제의 비공식적 영역까지 확장한 것이다. 특히 비공식적 영역은 정치의 은폐된 영역인 연줄망 즉 인적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자의 독특한 관심사항이자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주된 초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 흔히 신제도주의라고 부름)을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연구가 제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주요 사회현상의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 것과는 달리, 신제도론은 그같은 제도의 형성 및 존속의 원리를 논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신제도론은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 분파마다 제도의 형성과 존속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신제도론은 분파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약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종의 중용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만한 방법론이다.

저자가 북한체제에 관한 설명을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시도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① 신제도론의 기본 명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② 제도간의 관계를 병렬적으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차경제와 중앙계획경제 자체를 제도로 간주하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의 하부단위의 중앙에 대한 의존관계,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의존관계, 주민층의 국가나 관료에 대한 의존관계 등 사회주의적 지배도 제도로 보았다.(37) 저자는 여기서 경제적 제도의 변화가 정치적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신제도론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거나 방법론적 단초와는 거리가 있다. 신제도론은 공식 혹은 비공식 제도의 형성과 존속이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와 같이 주요 행위자들의 갈등관계의 산물이든지, 역사적 제도론에서 처럼 역사적 의존성을 지니면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행동 및 규범에 관한 제약이든지, 또는 사회학적 제도론의 설명처럼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에 배태되어 있는 현상 등으로 설명한다. 즉, 저자가 제도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신제도론의 기본적 명제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수정하여 북한체제에 적용해야 한다.

저자는 신제도론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이상에서 언급한 신제도론의 명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나의 모델이나 접근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곧 해당 모델이나 접근법의 본질적 변수들을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은유나 유추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많은 오해 또는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예는 1960년대 말 사회주의체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다원주의적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스킬링(Gordon Skilling)과 호프(Jerry Hough) 등은 서구의 다원주의 개념을 원용하여 스탈린 집권기 이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지닌 이익집단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서구의 다원주의의 기본 명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분석하는데 반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단지 어떤 사회든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도록 경쟁적으로 활동한다는 은유적 정도로 해석함으로써, 다원주의의 본질적 변수를 간과하였다. 마찬가지로 저자가 단순히 제도라는 용어를 편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제도론을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변수를 설명하는 기본 명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저자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관계를 병렬적인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로 묘사하였다. 이차경제의 형성과 이에 따른 중앙계획경제의 침식이 비공식적 정치제도 특히 정치적 권위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같은 접근이 매우 의미있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경제제도의 변화가 정치제도 또는 권위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기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북한체제의 모순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변수들은 이들 모든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제도에서의 이중성 문제 즉 이차경제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및 지식·문화에서의 이중성의 역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 구조의 모순 또는 이원적 작동이 정치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의도하는 방법론인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정치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이끄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당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차경제의 발달과 공식이데올로기의 기능부전은 서로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을 가지면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정치적 권위관계를 규정하는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역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신경제 엘리트의 구성이 구 정치적 수혜계층인데, 이는 신제도론에서 말하는 역사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또는 적응성(adaptability)의 개념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북한 연구에 있어서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공헌은 보기 드문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북한에 관한 연구와 분석들이 흔히 파편화된 사실들의 집적에 불과하거나 또는 사변적인 추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서 비추어보건대, 저자의 기여는 방법론적 또는 일부 논리 전개사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기여는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싶다. 북한

은 지금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만일 북한 연구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틀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성의 현상 또는 이중성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결여한 경우, 그것은 타 사회주의체제의 모델을 원용하여 자칫 공허한 보편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반대로 북한의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보편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계획에서 시장으로』는 바로 이같은 학문적 오류의 가능성에 쐈기를 박으면서 북한 연구자들에게 지적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